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예산안분석시리즈 V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2019.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 (2019. 10. 17.)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482조원, 총지출 513.5조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경기 하방위험에 적극 대응하고자 총지출을 전년 대비 43.9조원(9.3%) 증액하는 한편,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통해 중기적으로도 적극적인 재정확대를 계획하고 있어,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가 구조적인 적자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재정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 속에서 개별사업의 효과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될 국회의 역할 또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안 분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괄 분석」은 재정건전성,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정총량에 대한 현황과 분석내용을 수록하였고, 혁신성장·경제활력 제고·포용국가 기반공고화 등 주요 정책 사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개별사업 단위로 각 부처의 주요 증액 또는 현안사업에 대한 효과성, 필요성 등을 분석하는 한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서는 보조금·출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예산안을 각 기관별로 살펴보았으며, 「성인지 예산서 분석」에서는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국회 심사가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19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이 종 후

제 1 부

총괄 분석

I. 개관 및 총평 / 1

- 1. 2020년도 예산안 개요 1
- 2. 2020년도 예산안 총평 - 재정총량 분석 2

II. 재정 총괄 분석 / 4

-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4
- 2. 세입예산안 분석 6
- 3. 예산총칙안 분석 7
- 4. 12대 분야별 분석 11
- 5.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분석 12
 - 5-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12
 - 5-2.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12
 - 5-3.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12
 - 5-4. 복권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13
 - 5-5. 4대 공적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14
 - 5-6. 기타 사항 14
 - 5-7. 소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14
- 6.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분석 15

CONTENTS

7.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16
7-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16
7-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17
7-3. 기금준치평가와 예산안 연계	18
8.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19
9.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20
10. 2020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21

III. 주요 정책과제 및 유형별 분석 / 22

1.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22
2.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23
3.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	26
4. 미래인재 양성 및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 투자 분석	27
5. 생활 SOC 사업 분석	28
6.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통제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29
7. 8대 사회보험 예산안 분석	31
8. 일자리 사업 예산안 분석	32
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안 분석	34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석	35
1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분석	36
1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사업 분석	38
13. 교육재정 지출구조 분석	39
14. 지방재정 및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개선과제	41
15. 국방 분야 사업타당성조사 분석	43



CONTENTS

16.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분석	45
17. 국민참여예산 사업 분석	46
1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분석	47
19. 총액계상사업 분석	48
20.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분석	49
21. 민간투자사업(BTO/BTL) 분석	50
22. 정보화사업 분석	51
23.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안 분석	52
24. 법령·지침과 예산안 연계 분석	53
25.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예산안 연계 분석	54

제 2 부 위원회별 분석

제1장 | 국회운영위원회

I.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 59

【개별 사업 분석】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책연구 사업 개선 필요 59

II. 대통령경호처 / 60

【개별 사업 분석】

1.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60

III. 국회 / 61

【개별 사업 분석】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61

IV. 국가인권위원회 / 62

【개별 사업 분석】

1. 인권의식증진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62
2.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단계적 추진 필요 62

제2장 | 법제사법위원회

I. 법무부 / 65

【주요 현안 분석】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개선 사항 65
 - 1-1. 기금 수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65
 - 1-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 65
2.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66
 - 2-1. 교도작업 정역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66
 - 2-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66

【개별 사업 분석】

1. 전자공증 이용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67
2. 난민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67
3. 치료감호소 유희병동 활용을 위한 노력 필요 68



CONTENTS

4. 대체복무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68
5. 추징금 등 범죄수익환수 노력 강화 필요	69

II. 법제처 / 70

【개별 사업 분석】

1.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70
2.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70

III. 감사원 / 71

1.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71
---------------------------------	----

IV. 대법원 / 72

【주요 현안 분석】

1. 대법원 신규 정보화사업 분석	72
1-1.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	72
1-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원 운용 문제	72

【개별 사업 분석】

1.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지급 기준 정비 등 필요	73
2.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73

V. 헌법재판소 / 74

【개별 사업 분석】

1. 청사증축 연계사업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등 필요 74

제3장 | 정무위원회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77

【주요 현안 분석】

1. 미세먼지 대응 관련 개선과제 77

【개별 사업 분석】

1. 규제샌드박스에서의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 78
2. 부패예방감시단의 정규직제 추진상황 검토 필요 78

II. 국민권익위원회 / 79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관련 79
2. 디지털소통팀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상 주의 필요 79
3. 다부처·복합민원 조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80

Ⅲ. 국가보훈처 / 81

【주요 현안 분석】

1. 보훈보상제도의 중장기적 제도개선 필요 81
2.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건립사업 81

【개별 사업 분석】

1.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등 수납 필요 83
2. 인천보훈병원의 건립운영계획 미흡 83
3.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84
4.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의 일부 내역사업 이관 필요 84
5. 88골프장 매각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 85
6. 최근의 금리상황이 미반영된 대부사업의 예산조정 필요 85

Ⅳ. 공정거래위원회 / 86

【주요 현안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분석 86
 - 1-1.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환급 관리 필요 86
 - 1-2. 사익편취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86
 - 1-3.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87

CONTENTS

【개별 사업 분석】

- 1. 상품비교 정보생산 지원 사업 연구용역 개선점 88
- 2. 워크숍 예산 증액 적절성 검토 필요 88
- 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내 고용부담금 감액 필요 89

V. 금융위원회 / 90

【주요 현안 분석】

- 1. 핀테크 지원사업 분석 90
 - 1-1. 혁신금융서비스 사업화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90
 - 1-2. 금융회사-지정대리인 간 업무위탁계약 면밀한 관리 필요 90

【개별 사업 분석】

- 1. 정책금융기관 BIS비율을 고려한 예산심사 필요 91
-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적정 출자금액 산정 필요 91
- 3. 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92
- 4.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92
- 5.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상장 지원 적정성 검토 93
- 6. 혁신모험펀드의 적극적인 민간자금 유치노력 필요 93
- 7.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고려한 수입예산 편성필요 94
- 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94

제4장 | 기획재정위원회

I. 기획재정부 / 97

【주요 현안 분석】

1. 국유재산관리 관련 개선사항	97
1-1. 국유재산특례지출 관리 강화 필요	97
1-2.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97
1-3. 국유재산종합계획 국회 제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	98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관련 분석	98
2-1. 신규 시스템의 기능개선 방안 제언	98
2-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등	99
2-3. 총사업비 산출의 정확성 확보 필요	99
3. 복권기금 운용 분석	100
3-1.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의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100
3-2. 복권기금의 타 기금 전출사업 반납금 관리 강화 필요	100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해소방안 모색 필요	101
5.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101
6.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 확보 적정성 검토 필요	102
7.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 예수금 관리 필요	102
8.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 개선 방안 마련	103

【개별 사업 분석】

1. 협동조합활성화사업의 실질적 성과 확보 필요 등 104
2.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청사취득의 적정 계획액 계상 필요 104
3. 관련 법률안 심의결과에 따른 목적예비비 조정 필요 105
4.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면밀한 검토 필요 105

II. 국세청 / 106

【개별 사업 분석】

1.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과제별 사업관리 검토 필요 106
2.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106
3. 공매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수입·지출 일치 필요 107
4. 모바일 고지를 통한 전자송달 방식 확대가능성 검토 필요 107
5. 합리적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실시기준 마련 필요 108

III. 관세청 / 109

【주요 현안 분석】

1. 관세국경에서 감시·수사 역량 강화 필요 109
 - 1-1. 방첩기관 지정에 따른 정보수집·수사 역량 강화 필요 109
 - 1-2. 밀수 단속을 위한 감시장비 도입 및 운영 관련 109
 - 1-3.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감찰 강화 필요성 110



CONTENTS

【개별 사업 분석】

- 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분석 111
- 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사업 예산 편성 문제점 111
- 3. 여행자통관 지원(그린캡) 운영 관련 개선사항 112

IV. 조달청 / 113

【주요 현안 분석】

- 1. 비축물자사업의 원활한 이관 관련 고려사항 113
- 2.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의 국유화 제고 필요 113

【개별 사업 분석】

- 1.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114
- 2. 하도급 지킴이 확대 ISP 수립 시 유사 시스템 고려 필요 114

V. 통계청 / 115

【주요 현안 분석】

- 1. 인구주택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115
- 2. 인공지능 챗봇서비스의 설계 및 구축 내실화 필요 115

【개별 사업 분석】

1. 통계빅데이터센터 인력의 효율적 운영 필요 116
2.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116

제5장 | 교육위원회

I. 교육부 / 119

【주요 현안 분석】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119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 개정 추이 점검 필요 120

【개별 사업 분석】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121
2. 대학혁신지원(R&D)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필요 122
3. 사학연금기금 의무지출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23
4. BK21 플러스 사업의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123
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우선 지원 필요 124
6. 교육부 소관 R&D 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24
7.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125
8. 중앙취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안정적 운영 필요 126

9.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26
10. 국립대병원 지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필요	127
11.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27

제6장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31

【주요 현안 분석】

1. 사업단 신설을 통한 R&D 신규사업 수행 방식의 문제점	131
2. 혁신적·도전적 R&D 신규사업의 검토 필요사항	132
2-1.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활용가능성 제고 필요	132
2-2. G-First 사업의 충실한 선기획 필요	132
3.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R&D 사업의 개선과제	133
3-1.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예측가능성 및 전략성 제고 필요	133
3-2. 기초연구실 규모 확대에 따른 과제 선정 및 관리 철저 필요	133
4. 사업출연금으로의 예산과목 변경 신중한 검토 필요	134

【개별 사업 분석】

1. R&D 예산 배분조정 및 심의절차 개선방안 마련 필요	135
2. 단기 신규 R&D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체계 검토 필요	135
3. 과학기술분야 R&D 인력양성 사업의 체계적 개편 필요	136

CONTENTS

4.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체계적 준비 필요	136
5. 달 탐사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규모 확정 및 사업 성공가능성 제고 필요 ...	137
6. 나노융합2020 사업후속관리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137
7.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38
8.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및 기존시설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	138
9.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 비목변경의 종합적 검토 필요	139
10.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139
11.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필요 등 ..	140
12. 5G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사업 편성절차 미흡, 수요처 확보 방안 필요 ...	140
13.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141
14. 버스 와이파이 신규 구축 물량 추가 신중 검토 필요 등	141
15.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142
16.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142
17. 정진기금의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 등 지원근거 미흡	143
18.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143
19. 사업비 이자반납액 세입처리 위한 기타재산수입 편성 필요	144

II. 방송통신위원회 / 145

【개별 사업 분석】

1. 국악방송지원 사업의 보조금사업 평가결과 반영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145
2.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조성 사업의 신설 불필요	145
3.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추진 필요 ...	146
4.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 필요 ...	146
5. 교육훈련기관 파견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편성 부적절	147

Ⅲ. 원자력안전위원회 / 148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망 확충 강화 필요 148
2.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의 면허자 보수교육 수행방식 적절성 검토 필요 등 148
3. 원자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증대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필요 149
4.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과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 간 연계 추진 검토 필요 .. 149

제7장 | 외교통일위원회

I. 외교부 / 153

【주요 현안 분석】

1. 전략사업비 사업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153
2. 지역별 원조사업(ODA)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 154
 - 2-1.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154
 - 2-2. 신북방·신남방지역 사업포트폴리오의 재검토 필요 154
 - 2-3. 사업관리 강화 노력 필요 155
3.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역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155
 - 3-1.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155
 - 3-2.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156

【개별 사업 분석】

1.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157
2. 선진문화국가 이미지제고사업의 신규내역사업 필요성 검토 등 157
 - 2-1. 한스타일 공간연출 신규내역사업의 검토 필요 157
 - 2-2. 전략적 문화교류증진사업 글로벌 문화교류사업과 통합·연계 필요 158
3. 효율적인 대미 정책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 158
4. 한·중 기업교류 강화사업 기존사업들과의 통합·연계방안 모색 필요 159
5.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159
6.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액 미편성 문제 160
7. 인도적 지원(ODA)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160
8. 영사콜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통합 필요 161

II. 통일부 / 162

【주요 현안 분석】

1. 남북협력기금의 자원 운용 문제 검토 등 162
 - 1-1.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질적인 국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필요 ... 162
 - 1-2.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자원 운용의 문제 162

【개별 사업 분석】

1.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163
2. 북한인권재단 기관운영출연금 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163

3.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정규조직화 필요	164
4.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신진연구자 지원 개선 필요	164
5.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건립비용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165
6.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보험금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165
7.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대출금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166

Ⅲ.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167

1.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 필요	167
2.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실의 사용허가 후 운영 필요	167

제8장 | 국방위원회

I. 국방부 / 171

【주요 현안 분석】

1.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전 부처 재정소요 관리 필요 등	171
2. 부서관 역량강화 목적 신규 내역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172

【개별 사업 분석】

1.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의 사업명 변경, 계획 보완 및 사전연구 수행 후 추진 필요	173
---	-----



CONTENTS

2.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	173
3.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등	174
4.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재검토 필요 ...	174
5.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필요	175
6.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의 적정성 검토 필요	175
7. 화력장비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해소 필요	176
8. 의무장비획득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176
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	177
10. 평택기지이전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77
11. 환경치유기준 합의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178
12.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른 계정 존치 여부 검토 필요	178
13. 수당 성격의 항공전력강화비 등 지급 부적절 등	179
14. 육아휴직수당 예산의 정확한 편성 노력 강화 필요	179

II. 방위사업청(비공개) / 180

III. 병무청 181

1. 모병면접장 예산 증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181
2. 병역명문가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81
3. 적정 수준의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 필요	182

제9장 | 행정안전위원회

I. 행정안전부 / 185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85
 - 1-1.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항목 관련 문제점 185
 - 1-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세율 인상 관련 고려사항 185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사업성과에 기반한 사업규모 확대 등 186
3. 지방자치단체 공통 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문제점 187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법률 개정 필요 등 188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방지 필요 .. 188
3.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성 제고 필요 189
4. 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사업의 충분한 검증을 통한 사업 확대 필요 ... 189
5.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산 모델을 확정하여 예산안 편성 필요 ... 190
6. 공직선거 추진 사업의 지자체 교부 예산을 보조사업 형태로 편성 필요 190
7. 연료운반선 건조기간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분할 편성 필요 191
8.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191
9.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개 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192



CONTENTS

- 10.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192
- 11.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현장 활용성 고려 필요 193
- 12.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장기적으로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필요 193
- 13.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ODA)의 수원국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194
- 14.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간 자원방식 통일 필요 ... 194

II. 인사혁신처 / 195

【주요 현안 분석】

- 1. 보수연혁 조사 사업의 연구용역 내용보완 필요 195

【개별 사업 분석】

-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 인원의 선임비율 제고 필요 196
- 2. 임대주택건립 사업일정 지연 예방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196

III. 경찰청 / 197

【주요 현안 분석】

- 1. 경찰청 신규 R&D 사업 분석 197



CONTENTS

1-1.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개발(R&D) 사업 취지 명확화 필요	197
1-2.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탐지기술 개발(R&D) 사업의 면밀한 계획수립 필요	197

【개별 사업 분석】

1. AI 기술 활용 피해자 조사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98
2.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에 유의할 필요	198
3.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운영 내실화 필요	199
4. 학대예방경찰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199

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00

【주요 현안 분석】

1.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 중 군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요청 우편요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200
2. 재외선거의 투표율 개선 필요 등	201

【개별 사업 분석】

1. (사이버 선거연구 및 교육 사업) 콘텐츠 변환 대상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의 변환필요성 제고 필요	202
--	-----

V. 소방청 / 203

【주요 현안 분석】

- 1.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및 사업의 문제점 203
 - 1-1.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인력 비중 확대 필요 등 203
 - 1-2. 직접수행 연구 사업 별도 편성 필요 등 203
 - 1-3.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 204
 - 1-4.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비 자료 제출 필요 204

【개별 사업 분석】

- 1. 소방장비 표준규격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205
- 2.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에 관한 유사사업 추진 현황 고려 필요 205

제10장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문화체육관광부 / 209

【주요 현안 분석】

- 1. 생활SOC 사업 분석 209
 - 1-1.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209
 - 1-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209
 - 1-3.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필요 210



CONTENTS

2.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관련 사업 분석	210
2-1.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준비 철저 필요	210
2-2.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조성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 필요	211
2-3. 박물관·미술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시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211
3. 한류 콘텐츠 확산 및 한류축제 활성화 관련 사업 분석	212
3-1. K-컬처 페스티벌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212
3-2. 모꼬지 코리아 사업의 전략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213
3-3. K-Pop Experiences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213

【개별 사업 분석】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214
2. 창업·기업가 양성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14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등 필요	215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215
5.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 증액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216
6. 효과적인 매체별 광고 집행계획 수립·추진 필요	216
7.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구축 시 효과적인 콘텐츠 공급방안 마련 필요 ..	217
8.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준비 필요	217
9.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218
10. 디비전리그의 타종목 확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218
11.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적정예산 편성 필요	219
12.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사업의 근거법률안 심의경과 고려 필요	219

II. 문화재청 / 220

【개별 사업 분석】

1. 광화문월대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220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220
3. 문화재돌봄지원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필요 221
4.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사업 추진 시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 221
5.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의 실행행위를 감안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222
6.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관련 입장료 수입 증대 방안 강구 필요 222
7.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수요조사 결과 반영 필요 223
8.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준비 철저 필요 223

제11장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I. 농림축산식품부 / 227

【주요 현안 분석】

1.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에 대한 검토 227
2.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관련 사업의 개선과제 228
 - 2-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28
 - 2-2.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과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228
 - 2-3.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은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229

3. 친환경농축업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30
3-1.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30
3-2.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230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231
2.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231
3.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정합성 검토 필요 ..	232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수 실적 저조	232
5.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정합성 저조	233
6.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019년 신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233
7.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은 전문성 제고 필요	234
8.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은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234
9.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바이오가스 비용과 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 필요	235
10.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내용 조정 필요	235
11.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36
12. 농식품기술융합창업인재양성 사업 및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예산안 편성지침 준수 필요 검토 필요	236

II. 해양수산부 / 237

【주요 현안 분석】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대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237
 - 1-1. TAC 적용 대상 어종·업종 확대의 기반 마련 필요 237
 - 1-2.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 가능성 검토 237
 - 1-3. 총허용어획량 설정·배분 및 어획량 조사·관리 등 제도운용 개선 238
2.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역적 특성 반영한 계획 수립 등 239
 - 2-1. 어촌·어항법 상 관련 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239
 - 2-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239

【개별 사업 분석】

1.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국비 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240
2.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240
3.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241
4.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유류비 지원 상한액 설정 필요 241
5.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 집행가능성 점검 필요 242
6.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 집행경과 고려 필요 등 242
7.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사업 보급목표 설정 이후 지원 필요 243
8.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사업 편성체계 조정 필요 등 243

Ⅲ. 농촌진흥청 / 244

【개별 사업 분석】

1.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은 민간의 참여 확보 방안 모색 필요 244
2.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244
3.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은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와 구분 편성 필요 245
4.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재검토 245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은 종자 생산물량 검토 필요 246
6.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의 적기 사업추진 필요 246

Ⅳ. 산림청 / 247

【주요 현안 분석】

1.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등 247
 -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조성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 247
 - 1-2.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사업방식 보완 검토 필요 247

【개별 사업 분석】

1.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적정규모 검토 필요 248
2.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일자리유형별 사업성과, 수요측정을 바탕으로 고용계획 수립 필요 248
3.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 정밀한 수요예측 필요 249

V. 해양경찰청 / 250

【개별 사업 분석】

1.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 사업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250
2. 유도선 안전관리강화 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250
3.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현장수요에 맞춘 구조훈련 계획 수립 필요 251

제12장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I. 산업통상자원부 / 255

【주요 현안 분석】

1.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55
 - 1-1. 소재부품장비 지원방향의 적절성 255
 - 1-2.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등 256
 - 1-3.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차별화 및 실증장비 대상의 면밀한 선정 필요 등 257
 - 1-4.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장비구입비 적정성 검토 필요 등 257
 - 1-5.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필요 258
2.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 259
 - 2-1.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비용 점검 필요 259
 - 2-2. 농가형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확대 문제 259
 - 2-3. 초대형풍력 실증기반구축 사업의 민간참여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필요 260
 - 2-4. RMS 기술개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협약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260

CONTENTS

【개별 사업 분석】

1. 수요를 고려한 LNG벙커링선 건조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261
2.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 필요	261
3.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전 추진 문제	262
4.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	262
5.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 사업의 민간부담금 조정 검토 필요	263
6. 수소버스충전소 실증 사업의 R&D 예산 부합성 검토 필요	263
7. 수소트럭 지원 신규 R&D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264
8. 에특회계 신규 사업 및 법정부담금 감소 문제	264
8-1. 수송부문 중심 에특회계 신규 사업 추진의 적절성	264
8-2. 법정부담금 감소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관리 필요	265
9.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의 ESS 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	265
10.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필요 등	266
11.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하계누진제 지원에 따른 계층별 에너지 복지 총량 점검 필요 등	266
12.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	267
13. 포항 해상CCS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의 목표 명확화 필요	267
14.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68
14-1. WTO당사자분쟁대응 사업의 법률자문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68
14-2. 통상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268
15. 외투기업 현금지원 지급한도 등 개선 필요	269
15-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기업유치활동 보조금 적정편성 필요	269
15-2. 고용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필요	269

CONTENTS

16.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270
17. 수출바우처사업의 신속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등	270
18.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필요	271
19.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의 무역보험 공급확대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71
20. 민간출연사업 법적 근거 마련후 추진 필요	272

II. 중소벤처기업부 / 273

【주요 현안 분석】

1.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안의 문제점	273
1-1. 신규 R&D 사업 편성의 문제점	273
1-2. 일몰관리혁신 R&D 사업의 문제점	273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지원사업 편성의 문제점	274
1-4. 한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의 개선과제	274
2.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현황과 과제	275
2-1.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275
2-2. 소재·부품·장비 전용 자펀드 조성 사업	275
2-3. 신용보증기관출연 및 융자사업	276
3.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276
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안의 쟁점과 개선과제	277
4-1. 예산안 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의 필요	277
4-2. 모태펀드 운용 상 개선 필요사항	277

【개별 사업 분석】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필요	278
2. 미래기술육성 및 고성장촉진자금 융자조건 적정성 문제 등	278
3.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면밀한 사업검토 필요	279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R&D 러시아 핵심기술 확보계획 필요	279
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280
6. 예비유니콘 발굴육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280
7. 중소기업 화장실 설치·개보수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281
8.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관리 강화 방안 필요	281
9.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예산안 조정 및 관리강화 필요	282
1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282
1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구체적 계획마련 필요 등	283
12.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수요 고려한 과제기획 필요	283
1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자 확보 노력 강화 필요	284

Ⅲ. 특허청 / 285

【개별 사업 분석】

1.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필요	285
2.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285
3. 모태조합 운용사 선정시 IP전문가 의견반영 등 보완 필요	286
4. IP가치평가기관 역량강화 필요	286

5. IP-R&D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부처협업 강화 필요	287
6.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 사업의 추진체계 재설계 필요	287

제13장 | 보건복지위원회

I. 보건복지부 / 291

【주요 현안 분석】

1. 저소득층 지원 예산안 분석	291
1-1.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간 인원 중복 산정	291
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위소득 합리적 결정기준 마련 필요	292
2. 보육제도 개편 예산안 분석	293
2-1. 보육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체계적 홍보 필요	293
2-2.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293
3.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법령개정 전 예산 편성 및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 ·	294
4.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295
5.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296

CONTENTS

【개별 사업 분석】

1. 청년저축계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가입 배제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관리 필요	297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개편에 따른 철저한 계획수립 필요	298
3. 시범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방식 등 적정성 검토 필요	298
4. 다함께 돌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 등	299
5. 아동보호전담요원 신설 등 아동보호 체계 체계적 개편 필요	299
6. 노인일자리 사업 신중년일자리와 중복 문제 개선 필요 등	300
7.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포괄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300
8.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수급률 제고 노력 필요	301
9.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301
10.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302
11.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 체계적 준비 필요	302
12.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303
1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303
14.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	304
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적정수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 ..	304
16.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305
17.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인력 확충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305
18.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306
19.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306

II. 식품의약품안전처 / 307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의 본사업 추진 이전 법안 심사 경과 고려 필요 ... 307
2. 신규 도입 예정인 방사능 검사장비의 지방청별 배치 계획 수립 완료 필요 · 307
3.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차질 없는
수행 필요 308
4.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업체의 참여 활성화 필요 308

제14장 | 환경노동위원회

I. 환경부 / 311

【주요 현안 분석】

1.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고려 필요 등 311
2.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312
 - 2-1.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12
 - 2-2.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관련 중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 312

CONTENTS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313
2.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의 사전절차 수행을 비롯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 313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 314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14
5. 지하철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의 확대된 물량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315
6.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의 충분한 수요 확보방안 강구 필요 315
7.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 316
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316
9.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317
10.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317
1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 필요 · 318
12.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의 면밀한 분석 필요 318
1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집행실적 개선방안 강구 필요 319

II. 고용노동부 / 320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320

CONTENTS

- 2. 구직급여 및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 322
 - 2-1. 구직급여 지출액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악화 관리 필요 322
 - 2-2.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 322

【개별 사업 분석】

- 1.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324
-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도입 취지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325
-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및 적정 규모의 인원 편성 필요 325
- 4.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사업간 조정 및 연계 필요 326
-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의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327
- 6.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등 328
- 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329
-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에 따른 집행 관리 필요 .. 330
- 9.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의 면밀한 제도 설계 필요 331
- 10.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과정 설계 필요 331
- 1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의 법률 개정 심사 추이 반영 필요 332
- 12. 근로복지공단의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기금출연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333

Ⅲ. 기상청 / 334

【개별 사업 분석】

- 1.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334
- 2.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334
- 3.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사공간 통합형수치예보 기술 개발(R&D) 사업의 연구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335
- 4.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 335

제15장 | 국토교통위원회

I. 국토교통부 / 339

【주요 현안 분석】

- 1. 공적임대주택사업 분석 339
 - 1-1.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 339
 - 1-2. 민간임대리츠 출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339
 - 1-3.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이관 편성 필요 340
- 2. 도시재생사업 분석 341
 - 2-1. 도시재생뉴딜사업(출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341
 - 2-2. 도시재생뉴딜사업(융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341
 - 2-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342
 - 2-4. 도시재생사업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등 342
 - 2-5.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등 343

CONTENTS

3. 신공항 건설 사업 분석	344
3-1.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강화 필요	344
3-2.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344
3-3.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345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적정 세입원 발굴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345
5. 일반회계 세입예산 산정기준 개선 필요	346
6. 내부거래 관련 비목 오류 정정 필요	346

【개별 사업 분석】

1.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등	347
2. 수소도시 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347
3.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348
4. 주택성능보강 사업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348
5. 이차보전 지원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등	349
6.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등	349
7. ISP 수립 전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350
8.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관리 철저 필요	350
9.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추진 지연	351
10. 총액계상으로 편성된 도로유지보수 사업 집행 개선 필요	351
11.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설계비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352
12.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 총액계상 방식 편성 부적정	352
13.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계획 조정 필요 등	353
14. 철도핵심인력양성 사업 구조 변경 필요 등	354
14-1. 글로벌 연수과정 내역사업 분리 편성 검토 필요 등	354
14-2. 철도장학금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354



CONTENTS

- 15.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시범운행 지원 사업계획 미흡 355
- 16. 노후기반시설관리 사업관리 철저 필요 355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부 / 356

【개별 사업 분석】

- 1. 해외대학설립 지원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356
- 2. 중앙행정기관 신청사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등 357
- 3. 조치원 우회도로 총사업비 관리 철저 필요 357
- 4. 평생교육원 사업의 기존 시설과 차별성 확보 등 필요 358

III. 새만금개발청 / 359

【개별 사업 분석】

- 1.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사업 체계적 추진 필요 359
- 2. 새만금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한 전략 강화 필요 360
- 3.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의 추진방향 구체화 필요 360
- 4.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면밀한 검토 후 추진 필요 361

제16장 | 여성가족위원회

I. 여성가족부 / 365

【주요 현안 분석】

-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 향상 노력 필요 365
 - 1-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 향상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365
 - 1-2. 광역과 시·군·구 모니터링 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필요 등 365
 - 1-3. 아이돌봄 서비스의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366

【개별 사업 분석】

- 1.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관련 홍보사업 추진 철저 필요 367
- 2. 국제회의 개최사업 내 보조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367
- 3.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368
- 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시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368
- 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사업의 신청률 향상 노력 필요 369

제 1 부
총괄 분석



1

2020년도 예산안 개요

가. 총수입·총지출 및 재정수지

- **총수입:**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조원(1.2%) 증가한 482.0조원 편성
 - 국세수입은 2019년 반도체 업황부진, 2020년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계획 등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8조원(0.9%) 감소한 292.0조원으로 편성
- **총지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3.9조원(9.3%), 추경예산 대비 38.1조원(8.0%) 증가한 513.5조원 편성
 - **부처별 증가 규모:** 보건복지부(10.3조원), 국토교통부(6.6조원), 기획재정부(4.0조원), 고용노동부(3.9조원) 순. 증가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112.4%), 중소벤처기업부(31.4%), 국가정보원(29.6%), 산업통상자원부(23.0%) 순
 - **회계·기금별 증가 규모:** 일반회계가 19.5조원으로 가장 크게 증가. 특별회계는 교통시설특별회계(1.6조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1.6조원), 환경개선특별회계(1.4조원) 순. 기금은 주택도시기금(4.4조원), 국민연금기금(4.0조원), 고용보험기금(2.9조원) 순
- **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지:** 31.5조원 적자(GDP 대비 1.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0조원 악화
 - **관리재정수지:** 72.1조원 적자(GDP 대비 3.6%)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5조원 악화

나. 국가채무

- **규모:** 전년도 본예산 대비 64.7조원, 추경예산 대비 74.0조원 증가한 805.5조원 계획
 - 특히, 중앙정부채무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2.5조원 증가한 773.6조원, 그 중 국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2조원 증가한 770.9조원
- **GDP 대비 비율:**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p, 추경예산 대비 2.6%p 증가한 39.8% 계획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12.

2

2020년도 예산안 총평 - 재정총량 분석

가. 단기 분석 - 재정의 역할 확대와 건전성 확보 간 조화 필요

□ 예산안 평가

○ 규모 측면

- 2020년도 예산안 총지출(513.5조원)은 전년도 본예산(469.6조원) 대비 9.3% 증가하여, 2019년 증가율 9.5%보다는 약간 감소
- 다만, 2020년도 예산안 총수입(482.0조원)은 전년도 본예산(476.1조원) 대비 1.2% 증가하여, 2014년($\Delta 0.9\%$)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특히, 국세수입(292.0조원)은 전년도 본예산(294.8조원) 대비 0.9% 감소하여, 2010년($\Delta 2.9\%$) 이후 10년 만에 본예산 기준 감소
- 즉, 2020년도 예산안의 재정총량은 표면적인 총지출 증가율뿐 아니라, 수입여건 악화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할 때 다소 높은 수준의 확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평가 가능

○ 구성 측면

- 2020년도 예산안은 2015년 이후 5년 만에 의무지출 비중이 감소
- 다만, 이는 의무지출 세부유형 중 내국세 수입에 연동되는 '지방이전재원(2020년 예산안 의무지출의 43.7% 차지)'이 수입여건 악화에 따라 거의 증가하지 못한 것에 기인
- 실질적으로 '복지분야 법정지출(2020년 예산안 의무지출의 47.0% 차지)'은 12.7% 증가하여 총지출 증가율(9.3%) 및 재량지출 증가율(11.9%)을 상회
- 이에 향후 경제·재정여건이 변화하여 '지방이전재원' 소요도 다시 증가하면 의무지출 비중도 다시 증가 가능. 의무지출은 상대적으로 경직성이 높아 한 번 증가하면 다시 감축 곤란. 표면적인 의무지출 비중 감소뿐 아니라 세부유형별 증가 추이에도 관심 필요

□ 재정효율화 및 건전성 확보 방안

○ 수입 측면

- 조세지출 및 국유재산특례지출 관리 강화필요: 최근 계획액 급증
- 미수납 및 불납결손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실적 지속적 증가 추세

○ 지출 측면

- 편성 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최소화 및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결과 반영 필요
- 집행 단계: 재정승수 저하 현상 및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 등을 고려하여 재정사업의 집행효과 극대화 필요. 이와 관련하여 기초생활보장 등 저소득층 대상 재정사업의 집행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그 밖에 실집행 실적의 관리를 강화하여 재정사업의 실질적인 집행효과를 제고할 필요
- 환류 단계: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재정사업 자율평가 및 보조사업 연장평가 등) 결과의 환류 강화 필요

나. 중기 분석 -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필요

□ 중기재정운용계획 평가

- 이번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기존과 달리 계획기간 후반부까지 적극적인 재정확대의지 표명
 - 2016년 이전 계획은 계획기간 초반에는 국가채무 비율을 확대시키더라도 후반에는 다시 감축시키거나 완만한 상승세를 반영하는 수준
- 최근 재정역할 강화의 가장 큰 근거는 일시적인 경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단기 재정 확대를 넘어 중기재정운용목표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 필요. 또한 정부가 중기재정운용지표를 확장적으로 제시하면 시장은 정부의 경제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 필요

□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 재정준칙 검토 필요

- 중기재정운용목표의 지속적인 완화 현상은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이 부재한 것에 기인하는 측면 가능
- 「재정건전화법안」 등에 대한 국회 심의 추이 지켜볼 필요

다. 결론

- 국민의 요구 다양화 등으로 향후 재정의 역할이 축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국가재정이 한정된 재원으로 필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입 측면에서는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지출 측면에서는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수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39~75.

II 재정 총괄 분석

1 재정건전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가. 현황

- 중기 연평균 총지출 증가율이 중기 연평균 총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2019~2023년까지 지속적으로 악화
 - 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이 2020년 72.1조원(GDP 대비 $\Delta 3.6\%$)에서 2023년 90.2조원(GDP 대비 $\Delta 3.9\%$)으로 확대되고, 이에 따라 국가채무(D1)는 2020년 805.5조원(GDP 대비 39.8%)에서 2023년 1,061.3조원(GDP 대비 46.4%)으로 증가할 것으로 계획

나. 분석의견

- 2020년 예산안 뿐 아니라 2023년까지 확장적인 재정운용기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중기재정목표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 목표를 수립한 것으로 보이나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수준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소규모 개방경제·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통일·증가속도 등을 고려하면 향후 재정건전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
 - 2017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GDP의 42.5%로 OECD 평균(110.5%), 일본(233.3%), 미국(135.7%), 프랑스(110.8%)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그러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위기 시 급격하게 상승한 사례가 있으며, 일부 연구에 의하면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개방경제일수록 국가채무를 낮게 유지할 필요
 - 국가간 국가채무 비교 시 소득수준과 인구구조 등 차이를 고려하면 주요 선진국들과 차이가 감소하며,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매우 빠른 증가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는 2014~2023년 동안 연평균 13.8% 증가하며 2021년부터 전체 국가채무의 절반 이상(53.1%)을 차지할 것으로 보임

- 독일은 위기 상황(통일 및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탄력적 재정운용으로 일시적으로 재정수지 적자 및 국가채무가 악화되었지만 중장기 재정건전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재정건전성을 회복한 바 있으나, 일본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 및 인구고령화로 국가채무가 크게 증가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
- 철저한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해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국가채무, 공공기관 부채, 국가보증채무 등의 관리계획을 통합·개편한 「(가칭)재정위험관리계획」의 작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85~111.

2

세입예산안 분석

가. 2020년도 총수입 전망

- NABO 전망에 따르면 2020년도 총수입은 2019년 전망 대비 6.2조원(1.3%) 증가한 477.2조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의 총수입(482.0조원)보다 4.7조원 낮을 전망
 - 국세수입은 288.8조원으로, 법인실적 부진,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상향 등에 따라 전년대비 1.9조원($\Delta 0.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의 국세수입(292.0조원)을 3.3조원 하회할 전망
 - － 2020년 국세수입 전망의 전제가 되는 성장률 차이와 2019년 국세수입을 NABO가 정부보다 낮게 전망($\Delta 4.2$ 조원)하는데 기인
 - 국세외수입은 188.4조원으로, 기여금 요율 인상 등에 따른 사회보장기여금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8.1조원(4.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정부가 제출한 2019년도 예산안의 국세외수입(189.9조원)보다는 1.5조원 낮을 전망
 - －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기금수입의 증가가 예상되나, 정부 예산안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기인

나. 2019~2023 총수입 전망

- NABO 전망에 따르면 총수입은 2019년 471.0조원에서 2023년 546.9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2019년 476.4조원에서 554.5조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NABO의 총수입 전망은 정부의 전망보다 연도별로 $\Delta 4.7 \sim \Delta 7.5$ 조원, 5년 합계 29.2조원 낮을 것으로 예상
 - － 정부와 NABO의 총수입 전망의 차이는 주로 거시경제 등 주요 변수의 전제 차이와 세수 전망 모형 등의 차이에 기인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12~117.

3

예산총칙안 분석

가. 개 요

- 예산총칙은 예산의 구성요소 중 하나로, 예산 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사항을 규정
 - 2020년도 예산총칙안은 세입세출예산 총액 등 18개 조문으로 구성

[2020년도 예산총칙안]

조문	내용
제1조	2020년도 세입·세출 총액
제2조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명세
제3조	2020년도 계속비
제4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 체결시 연부액 초과 집행 근거
제5조	2020년도 명시이월비
제6조	2020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제7조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제8조	한국은행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연도 중 최고한도액
제9조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
제10조	예산의 이용 범위
제11조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제12조	목적예비비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
제14조	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제15조	기업특별회계 전입금
제16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금 합계 한도액
제17조	재해대책비 비목 설치·운영
제18조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초과 집행 근거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0년도 예산안」을 바탕으로 재작성

나. 주요내용 분석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 2020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추경대비 20.4조원(5.0%)이 증가한 424조 4,731억원

- 일반회계는 전년 추경대비 21조 8,542억원(6.5%)이 증가한 356조 5,140억원
- 특별회계는 전년 추경대비 1조 4,866억원(2.1%)이 감소한 67조 9,591억원

(2) 계속비

- 2020년 예산총칙안에 따른 계속비 총액은 전년 대비 2조 1,622억원이 감소한 2조 6,739억원
 - 2020년도 예산총칙안에 계속비로 편성된 사업은 국토교통부 소관 4개 사업
- 계속비 사업의 원칙적인 편성기간인 5년보다 사업기간이 연장되고 있으며, 시작연도에 비해 사업비 총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020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계속비 사업은 총 4개 사업이며, 모든 사업이 계속비 편성기간 5년 초과
 - 2020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계속비 사업 4개 중 3개의 사업에서 시작연도 사업비 총액보다 2020년도 사업비 총액이 증가

(3)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한도액

- 2020년도 예산총칙안에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재정증권 발행의 연중 최고 한도액 규정
 - 통합계정 3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0.2조원
-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설치 이후 한국은행 일시차입 및 재정증권 발행실적이 전무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총칙 상의 최고한도액은 매년 동일하게 설정하고 있으므로 최고한도액 설정 필요성 및 적정 규모에 대해 검토할 필요
-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일시차입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

(4)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

- 2020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주택도시기금 1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32조원, 외국환평형기금 15억 달러
-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증가할 전망
- 국민주택채권의 「기금운용계획안」 상 국고채수입계획 금액과 예산총칙상 차입금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을 동일하게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

(5) 목적예비비

- 2020년도 예산총칙안에 따른 목적예비비는 2.3조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0억원 증가
 - 2019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운영 소요가 신규로 목적예비비 대상에 포함
 - 2019년도 추경에서 신설된 국내 산업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이 목적예비비 대상에 포함
- 2019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을 위한 목적예비비의 경우 쌀 목표가격 관련 법률안의 국회심사경과를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인프라 운용소요를 위한 목적예비비는 인프라 구축에 한하여 사용될 필요
-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은 기존에 지정된 위기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은 최대한 본예산에 반영하고, 목적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2020년에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 및 업종을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목적예비비 대상 중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에 대해서 근거 법률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 2019년부터 시행중이고, 1차 규제자유특구가 이미 선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규로 지정되는 지역 및 사업을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사회복지 분야의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과 관련하여 향후 의무지출 규모에 대한 정확한 추계를 통해 목적예비비 편성을 지양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18~145

4

12대 분야별 분석

가. 현 황

- 정부는 예산안 편성·발표 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국가재정을 12대 분야로 분류하여 공개
 - 보건·복지·고용 / 교육 / 문화·체육·관광 / 환경 / R&D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SOC / 농림·수산·식품 / 국방 / 외교·통일 / 공공질서·안전 / 일반·지방행정
 - － 가장 큰 증액 규모는 보건·복지·고용(181.6조원, 전년 대비 20.6조원 증가)
 - － 가장 높은 증가율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23.9조원, 전년 대비 27.5% 증가)

나. 분석의견

- 12대 분야 분류체계 분석
 - 프로그램예산제도에 따른 16대 분야 중 12대 분야에 포함되지 않는 과학기술 분야·통신 분야 및 별도 통계로 관리하는 R&D 분야 개선방안 검토 필요
 - － 16대 분야 중 과학기술 분야와 통신 분야는 2020년도 예산으로 총 16.0조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R&D사업으로 분류되는 8.2조를 제외한 비R&D 7.8조원은 12대 분야에 미포함
 - 국방부·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총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국방 분야 예산 집계방식 적정성 검토 필요
 - － 총계기준 집계방식으로 인해 ① 내부거래에 불과한 군인연금기금전출금(3.0조원)이 국방 분야 예산으로 분류되며, ② 병무청 예산(0.2조원), 주한미군기지가전특별회계(0.3조원)·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0.4조원), 군인복지기금(0.6조원) 등 16대 분야에서는 국방 분야로 분류되고 있는 사업비가 12대 분야에서 제외
 - － 국방비 시계열 유지 필요성과 분야별 예산 관리기준 일원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방 분야 예산 집계방식의 제도개선 방안 논의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46~192.

5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분석

5-1. 회계·기금 간 거래 개요

- 「국가재정법」 제13조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을 허용
 -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정부 내부거래는 286조 7,288억원으로 총계(1,148조 4,605억원)의 25.0%

5-2. 일반회계와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가. 현 황

- 2020년 일반회계는 13개 특별회계 및 23개 기금과 내부거래를 수행

나. 분석의견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에 대해서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의 성격을 감안하여 추진할 필요
- 연례적으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는 회계(소속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및 기금(양곡증권정리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구조개선 필요

5-3. 공공자금관리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가. 현 황

-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 설치·운영
 -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일반회계, 11개 특별회계, 36개 기금과 예수·예탁 방식의 내부거래를 수행
 - －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 총괄계정의 예수잔액은 43조 4,993억원, 예탁잔액은 720억 3,553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

나. 분석의견

- 타 회계·기금으로부터의 예수잔액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미래의 채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연례적으로 예수·예탁 대상이 되는 회계와 기금의 경우 재원구조 개선 필요
 - 2018~2020년까지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잉여재원을 예탁할 계획이 있는 특별회계는 교도작업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 기금은 국제교류기금 등 13개 기금
 - 2018~2020년까지 매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할 계획이 있는 회계는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7개 기금

5-4. 복권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가. 현 황

- 복권기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수익금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5개 기금과,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배분
 -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출금은 1조 6,009억 7,900만원 편성
- 복권기금 사업의 취소·축소·중단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복권기금을 통해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금액을 복권기금에 반납
 -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기금전입금은 2020년 272억 8,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복권기금으로 반납하여야 하는 금액 중 연례적으로 누락되는 소요가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17,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실집행 기준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지만, 2019, 2020년 복권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계획(안)에는 미반영

5-5. 4대 공적연금과 타 회계·기금 간 거래 분석

가. 현 황

- 공적연금은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은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4개 연금이 있음

나. 분석의견

-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건전성 관리 필요
 -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악화로 인하여 각각 1999년, 1973년부터 양 기금의 수지 적자분을 국가보전금으로 지원,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공무원 연금에 대한 보전금은 1조 2,611억원, 군인연금에 대한 보전금은 1조 5,779억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미수국가부담금 해소 필요
 - 2020년 미수 국가부담금은 전년 대비 136억 6,700만원 증가한 1,525억 6,9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5-6. 기타 사항

- 주택도시기금의 복권기금 전출,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계정에서 도로·철도계정으로의 전출금 세목이 잘못 편성되어 있어 정정할 필요

5-7. 소결: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단순화 필요

가. 현 황

-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구조는 「국가재정법」이 제정·시행된 2007년 1개 일반회계 16개 특별회계, 61개 기금에서 2018년 1개 일반회계, 19개 특별회계, 67개 기금으로 증가

나. 분석의견

-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재정구조의 단순화가 필요
 - 재정 구조의 복잡성을 증대시키고, 일반 국민으로 하여금 재정 구조를 이해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193~241

6

의무지출 사업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 의무지출은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
 - 2020년도 의무지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55.6조원으로, 총지출 중 49.8% 차지
- 2019년 예산 대비 2020년 유형별 예산안 증가율은 기타 의무지출 14.4%, 이자지출 12.9%, 복지분야법정지출 12.6%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의무지출 예산 소관 부처는 32개로, 예산안 규모는 보건복지부(27.6%), 교육부(25.0%), 행정안전부(20.5%) 순으로, 3개 부처의 예산안 규모가 전체의 73.1%임

나. 분석의견

- 복지지출 확대, 고령화 대응 등에 따른 의무지출 증가 추세 관리 필요
 -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기조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복지분야법정지출의 증가가 의무지출 증가 추세 주도
 - 2020년 의무지출 예산안 중 복지분야법정지출의 비중은 2019년 43.8% 대비 13조 1,000억원(12.5%) 증가한 46.1%로 의무지출 유형 중 가장 큰 비중 차지
 - 고용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농림부의 공익형직불제 사업은 향후 법률(안) 제·개정 심사 및 의결 여부에 따라 의무지출로 규정될 가능성
 - － 현재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재량지출 사업으로 반영되었으나, 의무지출 사업 재분류시 2020년 예산안 중 의무지출 규모는 256.8조원으로 재량지출을 상회하며, 향후 의무지출 비중이 2022년 50.7%, 2023년 50.5%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
 -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신축성과 경기대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무지출에 대한 종합적 관리 필요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 공익형직불제 등 법률 제·개정 등과 연계하여 의무지출 예산안 심사 필요
- 의무지출 증가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고려 필요
-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거나 부정확한 예산 추계의 우려가 있는 의무지출 사업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242~270.

7

정부 성과평가와 예산안 연계 분석

7-1.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예산안 연계

가. 현 황

- 2019년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48개 부처 기준 239개 사업이 ‘우수’, 834개 사업이 ‘보통’, 215개 사업이 ‘미흡’으로 평가
 - 제도 개편으로 ‘미흡’ 등급 사업에 대한 의무적 지출구조조정이 폐지, 각 부처는 미흡 사업 215개 중 33개 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 계획수립, 182개 사업은 성과관리개선대책을 제출

나. 분석의견

- 미흡사업에 대한 감액 규모가 전년대비 크게 감소, 지출구조조정·성과관리개선 계획이 예산안과 연계되지 않은 경우 발생
 - 지출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한 경우도 예산안 연계미흡 및 지출구조조정에 왜곡 발생, 성과관리개선계획이 성과부진사유와 연계되지 않아 평가의 실효성 저하
 - 평가보고서 정보의 충실성 미흡 및 다부처사업에 대해 부처별 상반된 평가결과가 조정되지 않아 적절한 환류조치에 한계
 - 실제평가와 환류조치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이행되나 지침상 단위사업이 기준이 되어 정보의 왜곡 발생
- 재정사업 자율평가 개선 필요
 - 미흡사업에 대한 환류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 부처별 자율평가 보고서에 공개되는 정보의 질적 제고 필요
 - 예산규모 기준으로 적정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침 강화, 다부처 사업에 대해 공동평가단 구성 혹은 동일 평가지표 설정 등으로 정합성 제고 필요
 - 성과평가와 환류조치 정보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으로 평가단위 변경 고려 필요

7-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예산안 연계

가. 현 황

- 2019년 말 기준 존속기간의 종료 및 연장기간의 종료가 도래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449개의 세부사업을 대상
 - ‘정상추진’ 155개 사업(34.5%), ‘즉시 폐지’ 4개 사업(0.9%), ‘단계적 폐지’ 8개 사업(1.8%), ‘통폐합’ 1개 사업(0.2%), ‘감축’ 105개 사업(23.4%), ‘사업방식 변경’ 176개 사업(39.2%)

나. 분석의견

- 2019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2020년 예산안 연계 여부 검토
 - 2019년 평가에서 보조금 규모의 감축 판정을 받은 사업 중 일부 사업들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상 감축규모가 감축 판정액에 미치지 못함
 -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생산유통조절지원 사업, 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 사업 등
- 2017년, 2018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와 2020년 예산안 연계 여부 검토
 - 여러 해에 걸친 감축 판정을 받았으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예산액 감축이 적게 나타나거나 감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송영상콘텐츠제작지원 사업, 산업자원통상부의 무연탄발전 지원 사업, 국가보훈처의 현충시설건립 사업,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농촌 교육 훈련지원 사업 등
 - 고용노동부의 합리적 노사관계 지원 사업 등 사업방식변경 판정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7-3. 기금존치평가와 예산안 연계

가. 현 황

- 2019년 23개 기금을 대상으로 평가 진행
 - 개별사업의 적정성 평가 결과 10개 기금의 32개 사업 개선·이관 등 권고
 - 재원구조의 적정성 평가 결과 8개 기금 재원조성방법 및 자산규모 부적정 평가
 - 기금존치의 타당성 평가 결과 2개 기금이 조건부 존치 및 폐지(일몰)판정

나. 분석의견

- 연례적으로 결과가 이행되지 않거나 권고에 대한 검토 결과 이행 필요성이 낮아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권고의 실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
 - 수산발전기금의 원양어선안전관리사업,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기사자료 디지털화 사업, 스마트 미디어 인프라 지원 사업, 기획취재지원 사업, 조사연구연수교육 사업, 청소년 육성기금 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지원사업 등 사업 개선권고에 대한 이행 미흡
 - 양성평등기금 등 재원구조 부적정성에 대한 개선조치 미흡, 조건부존치 권고를 받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예산안과의 연계성 미흡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271~305.

8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예산안 연계 분석

가. 현 황

-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 건수는 2015회계연도 2,061건 → 2016회계연도 1,805건
→ 2017회계연도 1,833건으로 나타남
- 2017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 중 직전 2개 연도(2015회계연도 또는 2016회계연도) 결산 시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한 번 이상 시정요구를 받은 반복 시정요구 사항은 200건

나. 분석의견

-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주로 정부의 시정조치가 적기에 이행되지 않거나 조치 내용이 미흡하여 시정요구 요인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며, 예산심의에 반영하는 등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반복적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편성에 있어 개선이 미흡한 사례가 있어, 2020년도 예산안 심사 시 고려할 필요
 - 반복 시정요구 사항은 정부위원회 소관 25건,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24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4건 등

(단위: 건)

소관 상임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소관 상임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국회운영위원회	4	행정안전위원회	10
법제사법위원회	24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3
정무위원회	2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0
기획재정위원회	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0
교육위원회	11	보건복지위원회	2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	환경노동위원회	9
외교통일위원회	15	국토교통위원회	14
국방위원회	5	여성가족위원회	5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306~362.

9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가. 현황

- 정부는 2020년도 예산안 제출 시 총 35개 부처, 284개 사업, 31.8조원 규모의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와 「2020년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제출
 - 2019년도와 비교할 때, 성인지 예산서 작성기관 수 2개 증가(33개→35개) 증가, 예산규모 6.4조원 증가(25.4조원→31.8조원), 사업 수 23개 증가(261개→284개)
- 대상사업 선정기준과 관련, 직접목적 사업과 간접목적 사업으로 분류하는 전년도 기준을 유지하면서 직접목적 사업에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을 포함함
 - 여성폭력에 관한 모든 사업(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성인지적 재정운용을 위한 중점방향 제시

나. 분석의견

- 2019년도 성인지 대상사업 전면 재검토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대상사업 선정 문제와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이 대상사업에서 누락되는 문제가 계속됨
 -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
 - 대상사업을 선정 또는 제외하는 역할을 하는 관계부처 상설협의체의 심사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
-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의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 필요
 -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의 성과지표가 다르거나, 동일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으나 목표치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성과계획서와 성인지 예산서를 서로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적 관점의 재정운용 방향성 제시 필요
 - 국가 전반에 걸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성 평등목표와 성평등 격차 해소를 위해 어떠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재원을 투자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재정운용의 방향성 제시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363~383.

10

2020년도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총괄분석

가. 현 황

-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총 88조 2,775억원으로 2019년 예산(추경) 77조 244억원 대비 11조 2,531억원(14.6%) 증액
 - 정부 총지출에서 공공기관 정부지원 예산(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16.2%(추경 기준)에서 2020년 17.2%(예산안 기준)로 전년 대비 1.0%p 증가

나. 분석의견

- 2020년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예산안 규모는 향후 위탁수입 및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 증가 요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정투입 방향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안 편성이 이루어져 공공기관에서도 산업·중소기업·에너지, R&D, 환경, SOC, 보건·복지·고용 사업의 확대가 나타남
- 출연금 예산과 보조금 예산이 동시에 편성되어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의 정비, 정부 지원방식 변경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출연금 예산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2020년도 정부지원 예산안에 출연금과 보조금이 모두 편성되어 있는 공공기관은 25개로 파악됨
- 실제 정부 재정지원 규모와 다르게 정부순지원수입을 공시하는 공공기관들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의 공시기준에 따라 정확하게 정부순지원수입을 공시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 pp.384~400.

Ⅲ 주요 정책과제 및 유형별 분석

1 신규사업 예산안 분석

가. 현황

- 신규사업은 해당 연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 다른 사업과 통폐합된 사업, 내역사업이 분리되어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업 등
 - 2020년도 신규사업 수는 481개, 4조 1,773억원, 2020년 총지출(513.5조원)의 0.8% 수준
 - － 사업규모 기준 교육부(6,690억원), 산업통상자원부(6,194억원), 환경부(4,656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4,341억원), 방위사업청(3,780억원) 순임
 - － 회계·기금별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273개 사업에 2조 6,649억원, 특별회계는 132개 사업에 1조 2,662억원, 기금은 76개 사업에 2,462억원 편성
 - － 세부사업별 규모 기준 교육부 ‘고등학교 무상교육’(6,594억원), 환경부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3,811억원), 방위사업청 ‘GPS유도폭탄(2000lbs급) 4차 사업’(1,125억원) 등의 순임

나. 분석의견

- 신규사업은 법적근거 마련 등 사전 준비 여부,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성 및 연내 집행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통합·연계 필요성 측면 검토 필요
 - 사전 준비가 내실 있게 수행되어야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적근거 마련, 사업계획 수립 등이 철저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산안 산출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편성되고 있는 등 예산 절감 측면에서 적정 수준으로 조정 필요
 - 재정누수 방지와 사업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기존 사업과의 사업 차별화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pp.1~11.

2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가. 현 황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 안정과 자립화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1조 182억원 증액된 2조 1,242억원 편성
 -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 1조 2,571억원(59.2%),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한 기반구축 목적의 R&D 사업 4,745억원(22.3%), 투자 및 용자를 통한 금융지원 사업 3,900억원(18.4%) 규모

나. 분석의견

(1)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지원 방향의 적절성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국산화가 시급한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지만, 무역환경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2019년 8월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분야 100대 전략품목을 설정하고, 1년 이내 20개, 5년 이내 80개 품목을 자립화할 계획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과제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기업 생산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예산 중심의 지원이 국산화 전략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
 -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 사업은 대학의 연구실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 가능한 기술로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양산 단계로 발전시키는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기업 수요 중심으로 R&D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요기업과의 연계 강화, 다양한 판로개척, 정부의 일관된 투자계획 수립과 같은 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할 필요

(2) 소재·부품·장비 예산 규모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 2020년 예산 확대로 인하여 향후 5년간 3.1조원 규모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장기 재정부담 및 신규 재정투자 여력, 일관된 투자 가능성을 감안하여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필요
-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중 일부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 조정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년대비 과제별 지원단가를 높이거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검토한 적정 장비구입비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한 사업의 경우 예산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
- 장기간이 소요되는 R&D 과제는 단기간 기획을 통해 일률적으로 추진할 경우 과제기획 부실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과제기획의 충실도 및 예산 지원의 시급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필요
-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소재·부품·장비 사업 중 2020년에 신규과제 선정 없이 이전에 선정된 계속과제만을 지원하는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에 따른 정확한 예산 규모를 재산출할 필요

(3) 중소·중견기업 지원

-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에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판로개척 및 사업화 성과로 연계된 실적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기업 구매 등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에서 2016~2018년에 종료된 241개 과제 중 수요기업의 구매로 사업화 성과가 발생한 과제는 17개(7.1%)
- 중소·중견기업의 R&D 수행 역량을 고려하여 기업별 적정 지원규모를 산출하고, 소재·부품·장비 R&D 사업에서 지원한 기업 중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과도한 R&D 자금이 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의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한계기업 비중이 2012년 2.9%에서 2017년 12.3%로 증가,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12년 2.5%에서 2017년 11.8%로 증가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비 중 상당부분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중견기업의 R&D 인력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 R&D 지원을 할 필요

- 소재산업 중 화합물 및 화학약품(의약품제외) 업종의 경우 기업별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8.8%에서 2017년 43.4%로 증가, 종업원 1,000명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서는 동 비중이 50% 이상으로 증가

(4)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자금 지원

□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대한 보증 및 융자 지원 기준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할 필요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은 국산화 목적으로 신규 투자를 하려는 기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

□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은행의 혁신모험펀드는 민간투자 촉진 측면에서 공공출자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는 과거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투자목적으로 조성된 자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였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 투자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투자 유치 노력을 병행할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pp.12~53.

3

국가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 2020년도 R&D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3% 증가한 24.1조원으로 편성
 - 혁신적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핵심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를 통한 핵심원천기술 자립, DNA·BIG3 등 혁신성장 선제 투자, 사회문제 해결 등에 중점 편성

[2020년도 R&D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

(단위: 조원)

구분	2019본예산	2020예산안
전체R&D	20.5	24.1
기초연구 및 인재양성	1.9	2.3
소재·부품·장비	0.8	1.7
혁신성장 선제 투자(DNA, BIG3 등)	2.4	3.1
사회문제 해결	2.4	2.9
기타	13.2	14.0

나. 분석의견

- 4년 이내 단기 신규 사업은 사업기간 내 성과 점검을 통해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예타 면제 신규 사업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일몰관리혁신 R&D 사업은 신규과제 지원규모 등이 기준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
- 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연구자의 예측가능성과 분야별 전략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이 필요하며, 인력양성 R&D 사업은 인력수급전망 등을 토대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DNA·BIG3 분야는 관련 법률 개정 추이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사업은 이미 추진 중인 시범사업의 성과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신규로 편성된 본 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54~92.

4

미래인재 양성 및 혁신성장을 위한 교육 투자 분석

가. 현 황

- 정부는 혁신성장을 가속화할 인재의 양성(미래인재 양성)과 이를 뒷받침할 대학교육의 혁신(대학교육 혁신)을 중점투자방향으로 정하고, 미래인재 양성에 6,449억, 대학교육 혁신에 11조 4,725억원 등 총 12조 2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임

나. 분석의견

- 지속적인 인력 양성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 등에 대한 노력 필요
 - 지속적인 교육 및 연구 등을 위해서는 AI, 빅데이터 등 핵심분야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인데, 새로이 도입된 AI 대학원의 경우에도 대학의 기존 전임교원 위주로 교원이 구성되는 등 핵심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할 교육인력이 부족함
 - 2018년 기준 46,879명인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규모를 늘려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인력의 유인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핵심 분야에 있어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충분한 인력의 양성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정부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글로벌 핵심인재 양성, AI 대학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4개 교육훈련 사업에서 5년(2019년~2023년) 간 12,000여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집행실적이 부진함
 - － 혁신성장 청년인재 집중양성: 2018년 교육이수자 1,107명(목표 1,200명 대비 92.3%)
 - －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시설 구축 지연으로 교육실시 지연
 -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도입된 조기취업형 계약 학과의 경우에도 모집정원(550명) 대비 입학인원(427명)이 77.64%에 그치고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pp.93~125.

5

생활 SOC 사업 분석

가. 현황

- 국민들이 생활하는 터전에서 손쉽게 접하게 되는 여가와 건강, 안전과 환경 분야 등과 관련된 지역단위의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개선하는 것
 - 2020년도 예산안은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2.4조원(29.8%) 증가
 - － 2020년도 생활 SOC 사업은 18개 부처의 145개 사업으로 구성

나. 분석의견

- 생활 SOC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추진할 필요
 - 생활 SOC 사업에는 보육교사 인건비, 교육비 등 일반적인 SOC 사업 범주와 관련이 미흡한 S/W 관련 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사업에 따라 운영비가 포함·제외되어 있는 등 지원내용도 일관성이 미흡한 측면
- 생활 SOC 시설의 이용·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적자 해소방안 마련 필요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현황」을 바탕으로 공공시설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공공시설 확대공급에 따른 운영적자 규모는 증가
 - － 개소당 순손실 규모: 2014년 7.9억원 → 2017년 10.4억원
- 재정 투입 즉시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 철저 필요
 - 정부는 재정투입 즉시 성과 가시화가 가능한 사업을 생활 SOC 사업으로 선정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이 포함
 - － 도시재생(국토교통부), 복합편의시설 건립(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업, 전통시장주환경개선사업(중기부) 등은 최근 3년간 연례적으로 집행부진
- 복합화 사업(2개 이상의 생활 SOC 시설을 하나의 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의 지역간 형평성 유지 및 서비스 수요 등을 고려한 사업 선정·배분 필요
 - 복합화 사업(2020년~)은 지역간 시설 불균형을 해소하고 이용의 시너지효과 제고 등을 목적으로 시행될 계획인데, 수도권에 다소 많은 비중의 사업이 선정
 - － 기초생활인프라 접근성 등급이 높은 수도권이 전체 사업건수의 약 30%를 차지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126~155.

6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통제현황 및 개선방안 분석

가. 보건·복지·고용 분야 2020년도 예산안 현황

- '20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은 총 181.6조원(정부 총지출 대비 35.4%)
 - '20년도 정부 총지출 전년 대비 증가분 43.9조원의 46.9%인 20.6조원 증가
 - －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예산이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80.1%

나.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특징 및 전망

- 보건·복지·고용 분야 비중 지속적 증가 추세에 대해 관리 필요
 - '15~'19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증가('15년 30.8% → '19년 34.3%), '19~'23년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9.2%)이 총지출 증가율(6.5%) 상회
- 의무지출(복지분야법정지출) 예산 증가로 경직성 증가 우려
 - '20년도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안(181.6조)의 67.5%인 122.6조원이 의무지출 이고, '19~'23 의무지출 중 복지분야법정지출 연평균 8.9% 증가 예상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중복 사업 추진 우려

다. 보건·복지·고용 분야 재정지출 관리 목적의 사전절차

-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 (취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하는 경우, 예산안 제출 전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를 실시하지 않고 국회 제출 사례 다수로 유사·중복 사업 발생 우려
 - － ① 고용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연령 조정으로 대상중복) ② 복지부 청년저축계좌와 지자체 저소득층 청년 자산형성 사업 ③ 복지부 자활사업 자활장려금과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지원범위 중복)
 - (개선방안) 신설·변경 사회보장사업 협의 내역 국회 제출 방안 등 검토 필요

□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 **(취지)**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중기재정지출 500억원 이상의 사회 복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근거를 법률에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 종합적 고려 필요 ②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또는 면제 없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필요
- **(개선방안)** ① 차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시 시범사업 진행경과 및 평가결과 등 보고, ② 사업성격·취지를 고려하여 신규 내역(유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실시 근거 명확화 등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

□ 의무지출 사업 법령 제·개정을 통한 지출규모 확정

- **(취지)** 의무지출 사업은 지출대상과 지출금액이 법령에서 확정되는 사업
- ‘사업계획 수립 → 법률 제·개정 → 예산 심의’ 순서가 의무지출 취지에 적합
- **(현황 및 문제점)** 근거법률 제·개정 전 연례적 의무지출 예산 편성·심의 및 확정
-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취업지원제도, 체당금 지급 사업 등 법률 제·개정 전 예산안 편성
※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예산 의결 후 차년도 관련 법률 제·개정(’18, ’19년)
- **(개선방안)**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응하여 예산을 심의·확정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Ⅱ」, pp.156~183.

7 8대 사회보험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 2020년도 8대 사회보험 지출은 전년대비 16.9조원 증가한 164.9조원으로 추계
 - 2015~2020년 동안 연평균 9.5% 증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17.4%), 고용보험(14.9%), 국민연금(10.0%), 건강보험(9.7%) 순으로 나타남
-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복지부 자체 중기운용계획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 지출은 2019~2023년 동안 연평균 8.8% 증가할 것으로 전망

나. 분석의견

- 적정예산 편성 필요
 - 국민연금 급여지급액 및 사학연금기금 의무지출 추계 정확도 제고 필요
 - －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 연례적 과다편성, 사학연금기금 의무지출 매년 계획변경 발생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규모 산정 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편성기준 마련 필요
- 관리체계 강화 필요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복지지출 비중 과소 추계, 통합재정 파악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부 재정에 편입할 필요
 - － 2020년 예산안 기준 정부총지출 규모 513.5조원, 복지지출규모(비중) 181.6조원(35.4%)이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을 포함하면 588.3조원, 256.4조원(43.6%)으로 상승
 -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료율은 시행령으로 결정되어 타 보험료율에 비해 인상되기 수월한 측면 존재
 - － 건강보험료율은 2012년 5.80%에서 2019년 6.46%로 11.4%,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같은기간 6.55%에서 8.51%로 29.9%, 고용보험료율은 1.1%에서 1.6%으로 45.5% 상승
- 지출관리 필요
 -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건강관리를 통한 의료비 증가 억제 필요
 - 고용보험의 경우 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통해 실업급여 증가 완화 필요
 -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예방 사업을 통한 산업재해의 선제적 예방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pp.184~217.

8

일자리 사업 예산안 분석

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안 현황

- 2020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안은 25.8조원으로 전년 대비 4.5조원 (21.3%) 증가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이 전년 대비 2.4조원 증가(+30.9%)하여 가장 크게 증가 하였으며, 직접일자리(8,462억원, +40.7%), 고용장려금(8,283억원, +14.3%) 순임

[유형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및지원	합 계
2019(본)	20,779	19,610	9,867	57,883	25,097	79,139	212,374
2020(안)	29,241	22,917	12,133	66,166	23,631	103,609	257,696
증감	8,462	3,307	2,266	8,283	△1,466	24,470	45,323
증감률	(40.7)	(16.9)	(23.0)	(14.3)	(△5.8)	(30.9)	(21.3)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일자리 사업 예산안의 유형별 자원배분 검토

- 최근 5년간 유형별 예산 변화 추이
 -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유형은 가장 큰 비중('16년 39.0%→'20년(안) 40.2%)이며, 고용서비스 유형은 가장 낮음('16년 4.6%→'20년(안) 4.7%)
 - 고용장려금 유형, 직접일자리 유형의 규모가 증가('16년 2.8조원, 1.6조원→'20년(안) 6.6조원, 2.9조원)하는 반면, 직업훈련 유형과 창업지원 유형의 비중은 감소('16년 13.5%, 12.9%→'20년(안) 8.9%, 9.2%)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내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의 비중이 높으며, 직업훈련, 창업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직접일자리, 고용장려금은 고용지표 개선에 긍정적이나 지속적인 재정부담 우려가 있을 수 있음.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및 창업지원 등은 실효성을 제고하여 민간일 자리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
- 현재 일자리·경제 상황에 비추어 재정투입의 효과 및 중장기적인 재정부담, 일자리의 질과 지속가능성 등을 균형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 자원 배분 필요

다. 일자리 예산 내 의무지출 비중 증가 검토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내 의무지출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16년 6.5조원 → 20년(안) 11.9조원)하였으며, 2020년 비중은 46.2%(전년 대비 +2.6%p)임
 - 주요 증액 사업은 구직급여(+2조 3,330억원), 모성보호육아지원(+880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심사형(10만명 분, 1,247억원)임
 - － 구직급여는 지급자 수 증가율이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자 수 증가에 따른 지출 소요액이 더 커질 우려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관련법 제정 시 요건심사형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이 의무지출로 규정되어, 재정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할 여지가 있음
- 전체 일자리 예산의 재원배분 및 규모 결정 시 의무지출 증가 추이를 고려할 필요

라. 일자리 예산 증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필요

- 고용보험기금은 일자리 예산 주요 재원(59.2%)으로,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 2020년(안)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3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둘 다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
 - 실업급여 계정은 보험료율 인상 등 수입 증가(전년 대비 1.3조원, 14.1%)에도 불구하고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로 지출 증가(2.1조원, 22.5%)가 큼
 - 고안·직능 계정은 일반회계 전입금(4,000억원), 일부 사업의 이관(△2,582억원)에도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비 증가(+1,813억원)로 적립배율이 여전히 낮음

마. 공공부문 일자리 예산의 재정 투입 효과 검토 필요

- 2020년도(안) 기준 사회서비스 일자리 9.6만개 확대 예정(전년 대비 1조 2,703억원 소요)
- 정부는 신규창출인원 및 추가소요예산만 발표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전체에 대한 총량 및 총소요예산은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
 -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일자리 유지를 위해 매년 재정투입이 이루어짐에도 전년 대비 소요예산만을 발표하고 있어 전체 재정투입의 규모 및 효과를 파악할 수 없음
- 전체 인력 현황 및 재정투입 현황을 관리하여 재정투입의 효과 검토할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pp.218~243.

9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 2020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 예산안은 총 6조 8,597억 8,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414억 2,100만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사회보험 사각지대해소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일부 사업의 지자체 이양에 따른 것
 - 소상공인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제조업 등 일부 업종 10인 미만)인 소기업, 자영업자는 혼자 또는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통계청 기준)를 의미
 - 2017년 소상공인 사업체는 318만 8,006개, 2018년 자영업자는 563만 8천여명
 - 2018년 취업자수대비 자영업자비중이 25.1%로 OECD 평균 15.3%보다 높은 상황

나. 분석의견

- 금융지원 확대 정책에 대한 보완 검토 필요
 - 금융지원 정책만으로 소상공인의 장기존속을 보장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구조·환경적인 여건으로 영업을 장기 지속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지원을 통해 일정 기간 영업을 지속함으로써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 발생 우려
 - 금융지원 예산 규모는 2016년 1조 8,684억원에서 2020년 2조 6,798억원으로 증가
 - 일시적으로 경영상황이 좋지 않은 소상공인에게에는 금융지원과 더불어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구조·환경적인 요인으로 영업유지에 한계가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금융지원보다 재취업지원을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정책 전환 검토 필요
- 사회안전망 확충 위한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필요
 -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기업 5년 생존율이 평균 27.3%에 불과한 만큼,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사회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필요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신규가입실적 저조
- 소상공인 실태조사 강화 필요
 - 중장기적으로 표본수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실태조사의 신뢰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표본 및 조사 방법 등을 정교하게 설계할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244~271.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분석

가. 현 황

- 정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비급여를 2022년까지 전면 급여화하는 등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2017.8.)하고 추진 중
 - 최근 발표(2019.7)한 주요 성과에 따르면 2017.8~2019.7월 약 2년 동안 3,600만명이 2.2조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음
- 2020년 건강보험 재정규모는 총수입 74조원, 총지출 76.7조원으로 전망됨

나. 분석의견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실적
 -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전환(급여화)하는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지연되고 있는 측면이 있음
 - 불필요한 의료비 상승 억제를 위해 (가칭)공사보험 연계법이 발의되었으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의 주관부처에 대한 합의 지연 등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음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는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간호인력 수급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므로 간호인력 수급 해소를 위한 다각적 방안 모색 필요
-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관리
 - 2018년 급여비 실적이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의료비 총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 이용 증가에 대한 관리가 병행될 필요
- 재정의 지속가능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건강보험 재정의 적정 규모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중장기재정전망 실시 필요
 -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일반회계)은 지원 규모 조정에 따른 감액조정으로, 매년 14%에 미달하고 지원 비율도 일정하지 않아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합리적인 편성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272~295.

11

저출산 대응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사업 분석

가. 현황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저출산 대응 재정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32조 7,073억원
 - 생애주기별로 ① 산모·신생아 1,444억원, ② 영유아 11조 6,647억원, ③ 아동 1조 8,916억원, ④ 유자녀 가족 2조 9,727억원, ⑤ 청년·신혼부부 15조 9,856억원, ⑥ 기타 483억원
 - 과제별로 ①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과제 2조 7,279억원, ②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최대화 과제 1조 6,850억원, ③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 과제 10조 168억원, ④ 모든 아동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 과제 2,973억원, ⑤ 2040세대 안정적인 삶의 기반 조성 과제 17조 9,803억원

나. 분석의견

- 추진체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수립과 예산안 검토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역할 명확화 및 저출산 대응 사업 관리 기능 강화 필요
- 영유아 보육
 - 2020년 3월 보육체계 개편 시 새로 도입되는 연장보육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 정부는 2020년 연장보육반 전담 교사 2만 2천명 채용 계획이나, 연장보육반 최소 예상수요는 약 3만 4천개 반
 - － 담임·원장교사 겸임으로 운영될 경우 보육체계 개편 취지 퇴색 우려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지원하는 관련 사업들을 체계화하여 정부 지원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
 - － 영유아 보육료 지원(복지부) 단가는 표준보육비용과 차이가 있고,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교육부) 단가는 표준유아교육비와 차이가 있음
 -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외에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어 정부 지원 단가의 적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아동 돌봄

- 온종일돌봄체계를 구성하는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관리 필요
 - 2019년 4월 기준, 초등돌봄교실은 최종 확대 계획(2022년 28만 2천명)보다 8,400명 많은 29만 356명이 이용 중
 - 다함께 돌봄은 2019년 8월 1,700명이 이용하여, 최종 확대 계획(2022년 9만명)보다 8만 8,300명 적은 상황

□ 유자녀 가족 일·생활 균형

- 사업장 규모에 따라 모성보호급여 지급률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모성보호급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2019년 1~8월 고용보험의 18~44세 피보험자 1천명 대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8.69명, 1,000인 이상 사업장은 21.98명
 - 2019년 1~8월 고용보험의 18~49세 피보험자 1천명 대비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단축 지급자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성이 8.37명, 남성이 1.48명,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여성이 24.06명, 남성이 5.28명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경우 실질적인 사각지대 해소 효과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필요
 - 고용보험 미적용자 중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출산급여 지급을 위해서는 출산일 현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 동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기 어려운 구조

□ 청년·신혼부부 주거

- 저출산 대응 측면에서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 지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필요
- 행복주택에 대한 신혼부부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2019년 상반기 신혼부부 행복주택 청약률 0.8:1
-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의 높은 중도포기율이 지속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업 내실화 필요
 - 청년 전세임대 계약률 2018년 60.1%, 2019년 1~8월 57.3%
 - 신혼부부 전세임대 계약률 2018년 59.1%, 2019년 1~8월 51.1%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Ⅱ」, pp.296~345.

12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사업 분석

가. 현 황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정)」(2019.2.)에 기초한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재정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대비 2조 786억원(11.1%) 증가한 20조 7,330억원
 - 과제별 예산안 규모는 노후소득보장(16조 8,799억원), 노인건강·돌봄(1조 9,080억원), 고령자 사회참여기회 확대(1조 3,155억원) 순임

나. 분석의견

- 재원배분
 - 의무지출 비중이 높고(전체 예산안의 69.6%) 예산 증액 속도가 빠르므로 재정여건 및 사업의 효과성을 고려하여 증액 규모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
- 노후소득보장
 - 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제도 전반의 보장 범위 및 수준을 점검할 필요
- 중장년층 생활안정 및 노후준비 지원
 - 퇴직이 예상되는 중장년층과 실업 초기 중장년에 대한 취업 지원을 강화할 필요
- 고령자 사회참여 기회 확대
 -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대한 수요가 높으므로 실제로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
- 노인 건강 및 돌봄
 -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시행 전에 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등급외자에 대한 욕구조사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고령자 대상 주거 지원
 -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건설형 임대주택의 복잡한 유형 체계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신청 및 청약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1~37.

13 교육재정 지출구조 분석

가. 현 황

- 교육 분야는 ① 유아 및 초·중등교육, ② 고등교육, ③ 평생·직업교육, ④ 교육 일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교육부에, 고등교육, 평생·직업교육 및 교육일반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편성
 - 2020년도 예산안의 교육 분야 총지출은 전년 대비 1조 8,339억원(2.6%) 증액된 72조 4,829억원으로, 전체 정부 총지출의 14.1%

나. 분석의견

-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재원 규모 및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 필요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증가하는 반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향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 － 학령인구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0년 442만원에서 2018년 922만원으로 연평균 9.6% 증가
 -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정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므로 한시법 종료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 누리과정 예산안은 2020~2022년 3년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연장 운영하는 내용을 근거로 편성,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안은 2020~2024년 동안 한시적으로 증액교부금을 신설·운영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전제로 편성
 - 교부율 인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으로, 지방소비세 인상 및 교부율 인상 등 관련 법안 개정 추이 등으로 고려하여 교부금 예산안 심의 필요
 - － 지방소비세 인상(2018년 11%→2019년 15%→2020년 21%)에 따른 내국세 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18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19년 20.46%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은 20.79% 인상을 전제로 교부금 편성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규정사항으로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

□ 고등교육 부문 예산의 방향성 정립 필요

- 대학재정지원 사업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자율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 정원 대비 입학생 미달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대학 혁신을 바란직한 방향으로 유도 필요
 - 대학혁신지원(R&D)의 2차년도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
 - ※ '18~'22 중기재정계획 상 최고 지원단가가 '19~'23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최저 지원단가(예시: I유형 지원단가 30.72~40.84억원 → 40.84~72.04억원)
 -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평가에 따라 재정이 차등 지원되어야 하나, 2020년 예산안 규모가 확대되어 당초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성과평가 인센티브의 효과 미흡
 - 예산 확대가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한계 대학 생존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혁신의 지원을 초래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정부는 국가장학금의 지원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향후 국정과제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 필요
 - 정부는 국가장학금 I유형의 중산층 계층(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채감 가능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한 2018년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발표(2018년 2월)
 - ※ 2019년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반값등록금(사립대 평균등록금의 반값 수준, 368만원)을 지원하고 2020년부터 중위소득 200% 이하 계층에 대한 지원 단가 현실화
 - 정부는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해 2019년 반값등록금을 중위소득 130% 계층까지 확대하는데 그쳤으며 2020년 예산안에서도 소득구간별 지원단가 인상을 계획하지 않고 있음. 한편 학업성적, 학생역량 등을 평가하여 지원하는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전년대비 171억원(87.1%) 증가한 368억원으로 확대
 - 정부가 소득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지만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 우수학생 국가장학금을 확대하였지만, 소득 최하위계층(기초~3구간)의 등록금 부담 경감률이 94.9% 이상으로 등록금의 대부분을 지원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소득층을 명확히 타겟팅한 지원 확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38~59.

14

지방재정 및 지방교부세의 현황과 개선과제

가. 현 황

- 2019년 기준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입은 208조 4,028억원, 통합재정지출은 230조 7,488억원
- 2020년 지방교부세 프로그램 예산안은 총 52조 3,052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546억 8,600만원 감액 편성

나. 분석의견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 현황
 - 정부는 재정분권 1단계(2019~2020년) 추진과 관련하여 2020년에 지방소비세를 6%p 인상(2019년 5%p인상)하여 2년간 총 10%p의 지방소비세를 인상
 - － 이에 따라 2020년 기준 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 총액의 21%(2018년 11%)
 - 2020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더불어 정부는 2019년 예산 기준 3.6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 사업 등 보조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이양
- 정부는 이양사업의 급격한 사업축소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세 확충분(약 8.5조원) 중 3.6조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배분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양사무에 해당 경비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3년간 배분 예정
 -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의 사용목적에 제약하는 것으로 재정분권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해당 재원의 이양사무 사용에 대한 확인을 목적으로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활용할 예정인데 당초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재정형평성 확보 목적인 해당 기금의 운용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추가적으로 이양사무 중 재난안전 관련 사무 등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사무로 이양시 사업규모의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어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중앙정부 차원의 진흥 노력 필요

-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의 산정과 관련하여 지출감소 유도 및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수요자체노력 분야에 신설된 일자리 창출 지원 지표는 동 분야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영 지표는 인건비 절감 지표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해당 지표의 수정 필요
- 정부는 재정분권 추진 및 소방직 국가직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당초 2019년 35%(기존 2018년 20%), 2019년 45%로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함
 -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예산은 교부세율을 하반기부터 35%로 인상하는 것을 예상하여 인상분의 절반을 반영하여 27.5%의 교부세율로 편성) 및 2020년 예산안(45%의 교부세율로 편성)도 이에 기반하여 편성
 - 하지만 2019년의 경우 소방직 국가직화 논의가 지연되면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역시 지연되어 인상분에 해당하는 교부세 1,536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될 예정
- 정부는 소방직 국가직화 및 이에 따른 소방직 충원의 재원 보전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율을 인상하였고, 소방직 충원은 2017년 하반기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분은 관련 법률개정,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절한 배분 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할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60~85.

15 국방 분야 사업타당성조사 분석

가. 현 황

- 국방사업 사업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방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하고, 사업추진 계획 및 소요예산의 적절성을 사전분석하는 제도로써, 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전력유지·시설 사업(국방부)과 방위력개선사업(방위사업청)
 - 2005년 국방부 자체 사업타당성조사가 실시된 이후, 2011년부터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국방연구원이 수행
-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총 209건 수행(전력지원체계 22건, 무기체계 187건)

나. 분석의견

① 사업타당성조사의 법령 근거 보완 필요

- 국방사업 사업타당성조사의 근거는 기획재정부 지침인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이며, 동 지침은 「국가재정법」 및 시행령 상의 총사업비 관리 제도를 근거로 하나, 현재 총사업비 관리 규정에는 국방사업이 명시되지 않음.
-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국방 분야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법령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② 무기체계 사업의 사업타당성재검증¹⁾ 비중 축소 노력 필요

- 무기체계 사업타당성조사 187건 중 43건(23.0%)이 사업타당성재검증으로 수행되었는데, 특히 사업타당성조사를 기수행한 사업에 대해 실시된 사업 타당성 재검증은 21건(11.2%)으로 10건 중 약 1건에 대해 재검증 수행
- 소요군 및 국방부는 소요결정 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소요 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방위사업청 및 기획재정부는 사업추진 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비 증액요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

1) 사업타당성재검증은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35조에 따라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한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검증을 통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하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는 재검증 절차

③ 효과적 사업타당성조사를 위한 선행절차 준수 노력 필요

- 국방 분야 획득사업은 사전 조사·분석 절차(소요검증, 선행연구 등)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들 절차가 수행되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가 지연되거나, 유사한 분석이 동시에 수행되어 각 제도의 취지가 형해화되는 사례가 발생
 - ‘합동해안양륙군사지원체계’ 사업은 소요결정 절차에서 소요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타당성조사가 지연되었고, 해상초계기-II 사업 및 Link-16 성능개량 사업은 소요검증, 선행연구, 사업타당성조사가 비슷한 시기에 수행된 사례
- 선행절차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사업타당성조사에서 검토되어야 할 선결요건(소요적절성, 사업추진계획)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타당성조사가 실시되어 조사가 지연되거나 효과적인 조사가 수행되기 어려운 문제 발생

④ 양산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선정기준 개선 필요

- 기획재정부는 2016년 사업타당성조사 선정기준을 신설

[사업유형별 사업타당성조사 선정기준 신설 규정]

사업유형	선정기준
연구개발/구매	선행연구를 완료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사업추진기본전략을 수립한 사업
양산	운용시험평가를 기초로 한 전투용사용 적합 여부를 포함하고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양산계획이 수립된 사업
시설 및 기타	선행연구에 해당하는 연구를 완료하고,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된 사업

자료: 「국방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

- 동 규정의 신설로 인해 연구개발 이후 양산 단계에 진입하는 사업은 전력화 지연 및 시제업체 설비·인력의 유희문제가 발생하면서, 기획재정부 등은 실질적인 양산계획(안)을 통해 사업타당성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검토 수행
- 그러나 현재의 양산 사업 대상요건은 최종 확정된 ‘양산계획’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일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수립단계와 확정단계에서의 양산계획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86~107.

16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 분석

가. 현 황

-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서 재난·안전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해 ‘지자체 노후 기반시설 개량’, ‘재난·안전 인프라 고도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등 세 부문에 대한 중점 투자 방향을 제시
 - 2020년 예산안은 3조 5,796억원으로 2019년 2조 9,064억원 대비 23.2% 증가
 - － 지자체 노후기반시설개량 5,528억원, 재난·안전 인프라 고도화 5,038억원,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2조 5,230억원

나. 분석의견

- 재난·안전 인프라 과제 적정범위 설정 필요
 -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 사업과 ‘잠수요원 양성배차’ 사업 등은 시설물을 비롯한 인프라 구축과는 무관한 사업으로 재원투입 규모 과대평가 우려
- 재정상황 등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한 노후상수도 정비 보조율 검토 필요
 - 개별 지방자치단체마다 급수인구, 유수율, 요금현실화율, 노후도 등 재정이나 운영 등의 측면에서 수도사업의 여건 상이
- 산재예방시설 용자 사업과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차별화 필요
 - 2018년 2개 사업으로부터 동시에 지원받은 기업이 85개소에 이르고 상당수의 지원 품목이 중복
- 자치단체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의 최근 3년간 실행행률은 70% 미만으로 정체, 특히 내역사업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018년 집행률이 47.8%에 불과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개선
 -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후 교통사고발생감소율’의 목표 대비 실적은 2016년 95%, 2017년 79%, 2018년 82.5%로 목표치에 미달
 -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은 재해발생 피해 등 객관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지표 반영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pp.108~128.

17

국민참여예산 사업 분석

가. 현 황

- 국민참여예산 제도는 「국가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2019년도 예산부터 본격 추진
 - 재정의 민주성·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국민의 의사가 예산에 직접 반영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2020년도 신규사업 수는 38개, 1,114억원, 2020년 계속반영사업 수는 27개, 1,569억원
 - 2020년 예산안 기준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4대 부문별 예산비중은 사회 부문 42.0%, 경제 부문 29.5%, 복지 부문 18.7%, 일반행정 9.7%
 - 부처별 2020년 예산안 규모는 환경부가 600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았으며, 산림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순으로 300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를 보임

나. 분석의견

- 2019년도 사업 중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정책단계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집행률 제고 및 국민 사업체감도 향상 필요
 - 2019년도 국민참여예산 사업의 실집행률은 45.4% 수준
-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 중 제안취지와 부합도가 낮거나 추진체계의 재설계가 필요한 사업이 존재하므로, 사업목적과 추진 체계를 당초 제안취지에 맞게 보완하여 사업의 효과성 극대화할 필요
-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 운영 주체인 예산국민참여단의 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
 - 사전교육의 질적 향상, 구체적 설명, 동영상 교육수준 향상 등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예산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예산교육을 강화할 필요
- 국민참여예산 사업이 대부분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의 공개를 보다 확대하고 실적정보를 함께 제시하여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129~153.

18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분석

가. 현 황

-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제도
-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을, 제2항은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 10개 유형의 면제 사업을 규정

나. 분석의견

-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적인 추진 필요성에 따른 면제 비중이 급증
 - 면제 사업 수는 2015년 13건에서 2019년 9월 기준 40건으로 증가
 - 이 중 국가 정책적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을 사유로 면제된 사업 수는 2015년 1개에서 2019년 9월 기준 25개로 증가
-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가 불가피하더라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예산액과 총사업비 등의 규모를 첨부하여 제출 필요
- 신규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 향후 사업규모 확대 등의 경우 타당성 조사 필요
 - ① 예산안 편성 시점에서는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규모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이 있거나, ② 신규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하고 시범사업 수행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는 사업이나, ③ 단기 사업으로 기획된 R&D사업의 경우, 향후 중·장기 사업으로 확대될 시 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한 조사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154~183.

19

총액계상사업 분석

가. 현황

- 총액계상사업은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 사업과 같이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하거나 예산집행 단계에서 세부내역을 정하는 것이 집행에 있어 보다 효율적인 경우 총액으로만 예산에 계상하는 사업
 - 2020년도 총액계상사업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4개 부처에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2조 3,921억원 대비 83억원(0.3%) 감액된 2조 3,837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총액계상사업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일부 사업은 총액 계상사업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편성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 고려 필요
 - 문화재청 소관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은 사업대상지가 특정되어 있고 연차별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어 있어 세부내역을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으로 보기 어려움
- 총액계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총액계상사업 방식 편성·집행 지양 필요
 - 국토교통부 소관 ‘일반국도 조사설계’ 사업이나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은 총액 계상사업이 아님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총액계상방식으로 편성·집행하여 부적정
- 일부 총액계상사업의 경우 연례적인 이·전용이나 집행부진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유의할 필요
 - 국토교통부 소관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연례적으로 타 사업으로 전용·조정되고 있고, 해양수산부 소관 ‘항만시설유지보수’ 사업 및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등은 연례적 이월 및 불용액 발생으로 실집행 부진
- 총액계상사업의 실질적 규모를 감안하여 총 규모의 한도 조정방안 검토 필요
 - 총액계상사업은 국회의 예산 사전심의원칙의 예외라는 점에서, 총액계상사업의 한도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 pp.184~197

20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분석

가. 현 황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포함 사업, 정보화 사업 등과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연구개발사업이 대상(「국가재정법」 제50조)
- 2020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33개 부처, 총 693개 사업이 있고, 2020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총사업비 합계는 219조 1,546억원
 - 연도별로 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수는 2018년말 766개에서 2019.9월말 기준 728개, 2020년 693개
 - － 2020년도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산출 시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2019년 종료 예정인 사업들을 제외함에 따라 사업수와 총사업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20 신규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될 사업 수는 80개
 - － 80개 사업의 총사업비 합계는 25.9조원, 2020년도 예산안은 3,199억원

나. 분석의견

- 예산안 첨부서류의 개선 필요
 - 「국가재정법」 제34조제3의2호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첨부서류에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도록 규정
 - 그러나 국회에 제출된 총사업비 관련 첨부서류는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 기금사업 제출에 대한 법적근거 미흡으로 제출자료의 신뢰성 및 책임성 확보 곤란
 -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첨부서류지만,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목록이 2019년 6월말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2020년 신규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또는 2019년 7월 이후 새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으로 편입 예정인 사업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pp.198~214

21

민간투자사업(BTO/BTL) 분석

가. 현황

-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말함
 - BTO 예산안은 2020년 1조 4,761억원으로 2018년 1조 1,121억원보다 3,640억원(32.7%) 증가
 - BTL 예산안은 국방부 등 11개 부처에 편성되었으며, 2020년 1조 4,323억원으로 2019년 1조 3,975억원보다 348억원(2.49%) 증가

나. 분석의견

- 적격성분석에 적용하는 할인율 재검토 필요
 - KDI 공공투자관리센터는 BTL에 대한 적격성분석 시 조달금리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분석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재고될 필요
- BTO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국회 승인 절차 마련 필요
 - BTO 실시협약은 국고채무부담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정부는 국회의 건설보조금 예산 승인을 전제로 민간투자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보다 BTO 실시협약 체결 이전에 국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
-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방안 검토 필요
 -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지원과 통행료 인하를 위해 사업재구조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 방안도 적극적 검토 필요
- 민간투자사업 추진 취지 고려 필요
 - 민간투자사업은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자고속도로 요금 등의 민간투자사업 시설물 사용료를 재정사업 수준이 되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회계연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215~261.

22

정보화사업 분석

가. 현황

- ‘정보화사업’이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2호)
- 2020년도 정보화사업 예산안은 52개 부처·청에 4조 4,036억원이 편성되어 2019년 추경예산 4조 872억원 대비 3,165억원(7.7%) 증가

나. 분석의견

- 효과적인 정보화사업 현황 관리 체계 마련 및 정보화사업 예산편성절차 준수 필요
 - 정보화사업 현황에 대한 통일된 집계 기준이 부재하여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정보화사업 규모에 차이
 - － 2019년도 본예산 기준 기획재정부 3조 6,060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조 6,339억원
 - 일부 신규 사업은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거나, ‘업무재설계(BPR)’, ‘정보화전략계획(ISP)’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안을 편성
- 전자정부 정보화사업 운영·유지보수 비용의 절감 노력 필요
 - 2014~2018년 정보화사업의 운영·유지보수 비용은 6조 8,261억원(38.8%)으로 가장 큰 비중
 -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측정지표인 ‘운영의 적정성’, ‘유지의 용이성’ 평가 점수 하락
 - － ‘운영의 적정성’은 ’14년 4.36점에서 ’18년 3.78점, ‘유지의 용이성’은 ’16년 3.11점에서 ’18년 3.02점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 방안 마련 필요
 - ‘전자정부 클라우드 플랫폼 구축’노력에 비해 행정·공공기관의 도입률은 저조
 - － ’18년 조사기준 행정·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이용률은 5.61% 수준으로, 정보보안 우려, 경제성 미흡, 도입절차의 복잡성 등 클라우드 도입의 장애요인 개선 노력 필요
 - 소프트웨어 도입·운영비용 절감을 위한 공개소프트웨어 이용 촉진 필요
 - － ’18년 조사기준 공공부문 소프트웨어의 상용SW는 83.4%, 공개SW는 16.6% 차지
 - － 정부는 「제5차 공개소프트웨어 활성화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공개소프트웨어가 행정, 공공기관에 체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pp.262~285.

23

법정부담금 수입 예산안 분석

가. 현 황

- 2020년도 전체 법정부담금 예산안은 13조 9,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9,677억원 ($\Delta 6.5\%$)이 감소
 - 특별회계에 귀속된 법정부담금 예산안은 3조 4,384억원, 기금에 귀속된 법정부담금 예산안은 10조 5,577억원
 - 법정부담금 예산안이 가장 많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총 4조 7,814억원이며, 다음으로 보건복지부 2조 8,924억원, 환경부 1조 8,272억원 순임

나. 분석의견

-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한 기금의 부담금 요율 인하 등의 검토 필요
 -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여유자금의 축소 방안 및 적정한 부담금 부과요율에 대한 검토 필요
- 최근 실적치를 고려한 부담금 수입 계획 수립 필요
 - 폐기물 발생량의 예측과 징수율 등을 고려한 실적치를 바탕으로 폐기물부담금 수입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 관광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출국납부금 수입 계획안의 산출 기준에 있어, 최근 연도 실적 및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증가율을 반영하여 수입계획안 규모를 적정하게 산정할 필요
- 산출 기준 적용의 적정성 검토
 -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은 개정된 고시 내용에 따라 수입계획안을 작성할 필요
- 부담금은 근거 법률에 부과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
 -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광물 수입·판매 부과금, 방제분담금 등은 부담금의 산정기준, 산정방법 및 부과요율 등이 법률에 미규정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286~302.

24

법령·지침과 예산안 연계 분석

가. 현 황

- 법률은 예산의 편성·집행에 근거를 제공
 - 법률안의 제·개정을 전제로 편성된 예산의 경우 법률안에 대한 심의 결과와 연계하여 예산안을 살펴볼 필요
 - 예산안에는 사업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지출의 근거가 될 법령이 미흡한 경우에는 법령을 제·개정하여 근거를 보완하거나 예산안을 조정하여야 할 것
- 재정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검토 필요
 - 「국가재정법」은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절차 등을 규정
 - “예산안 편성지침”은 예산요구서 작성 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기준·단가 등을 규정

나. 분석의견

- 법률 제·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안 편성 사례
 - 9개 부처 11개 사업
-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이 필요한 사례
 - 7개 부처 9개 사업
- 「국가재정법」 등 재정관련 법령 및 “예산안 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편성 사례
 - 1개 부처 1개 사업

[참 조] 「2019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Ⅲ」, pp.303~308.

25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의 예산안 연계 분석

가. 현황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은 기준연도에 집행률이 70% 미만이고, 기준연도를 포함한 최근 4년간 집행률이 평균 70% 미만인 사업을 의미
 - 2019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총괄 분석」을 토대로 최근 4년간(2015~2018년) 평균 집행률이 70% 미만이면서, 2018년도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을 분석

나. 분석의견

-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2019년 9월말 기준 중앙관서의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208개
- 이 중 2020년도 예산안이 전년대비 증액 또는 동일하게 편성되어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총 89개이며, 이들 사업에는 전년대비 54.3% 증액된 3조 1,974억 7,500만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89개 사업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9개 기관으로, 집행부진 유형별로 보면 사업추진 지연이 40개 사업으로 가장 많고, 관계기관 간 협의지연 14개 사업, 집행사유 미발생 9개 사업 등으로 나타남
- 따라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진에 대한 개선 상황, 정부의 예산 편성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사업 분석 구조]

연례적 집행실적 부진 사업 중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	264개
↓	
2019년 9월말 기준 중앙 부처의 집행률이 50% 미만이거나 보조사업자의 실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208개
↓	
2020년도 예산안이 전년 대비 동일하거나 증액된 사업	89개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III」, pp.309~340.

제 2 부
위원회별 분석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I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개별 사업 분석】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정책연구 사업 개선 필요

가. 현 황

-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260-02목)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 감액된 2억 4,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은 대통령의 국정수행 등 직무를 보좌하는 참모 조직으로서 중앙행정기관과 별도로 직접 수행하여야 하는 정책연구의 고유한 영역과 수요를 면밀히 점검하여 이를 전제로 정책연구비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정책환경에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기관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정책연구 소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사업추진체계를 갖출 필요
- 국정운영관리 사업의 정책연구비 집행률은 2017년도 23.7%, 2018년도 63%임. 2019년의 경우 9월말 현재 19.3% 수준이며,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계약액과 정책연구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기로 결정한 계약 예정액을 합한 전체 집행 예상액 1억 7,700만원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정책연구비 집행실적은 예산현액의 60%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4~6.

II

대통령경호처

【개별 사업 분석】

1

대통령경호처 상용임금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 대통령경호처의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사업 상용임금(110-03목)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규모인 31억 4,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대통령경호처의 상용임금 예산 집행실적 부진은 공무원 근로자의 잦은 이직 및 퇴직 문제에 기인하고 있는 바, 공무원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 상용임금 예산의 집행실적 부진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
- 대통령경호처 공무원 근로자는 2018년도에 연중 월별 지급인원이 정원 79명 대비 75명 수준으로 4명 정도의 인원이 결원된 상태로 운영되었으며, 2019년의 경우 8월말 현재 정원 98명 대비 연중 20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한 상태로 운영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2~14.

III

국회

【개별 사업 분석】

1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국회사무처는 국회도서관의 자료보존 공간 부족 문제해결 등을 위해 부산광역시에 자료보존관을 건립하는 사업(총사업비 417억 5,600만원)을 추진 중이며, 2020년 예산액은 129억 1,100만원

나. 분석의견

- 국회도서관 자료보존관 건립 사업은 부지변경 등으로 두 차례 기한연장이 있었던 만큼 연장기한 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21~23.

IV

국가인권위원회

【개별 사업 분석】

1

인권익식증진을 위한 웹드라마 제작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인권문화콘텐츠 개발·보급사업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인권익식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액은 3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8% 증가

나. 분석의견

- 인권문화콘텐츠 제작·보급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웹드라마 제작·보급 사업의 성과분석 및 대안마련으로 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30~33.

2

국가인권통계 생산 및 분석사업의 적정예산 편성 및 단계적 추진 필요

가. 현 황

- 국가인권통계 생산을 통해 인권상황을 체계적으로 진단·평가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 인권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 증가한 6억 9,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국가인권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2019년 사업 성과를 분석하여 자료의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34~36.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운용 개선 사항

1-1. 기금 수입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2020년도 수입 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벌금 세입을 기반으로 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824억원(79.6%)이며, 공공자금관리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인 ‘기금예수금’ 100억원이 신규로 반영

나. 분석의견

-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주요재원인 벌금 수납액이 감소 추세에 있음을 감안 하여, 향후 안정적인 수입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1-2.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 지원 강화 필요

가. 현 황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치료비, 긴급생계비, 범죄피해자보호 관련 사업 등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해 지원

나. 분석의견

- 법무부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의 지출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48~54.

2

교도작업 특별회계 운영상의 문제점

2-1. 교도작업 정역 집행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교도작업 사업은 수형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이에 따른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일련의 작업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으로 549억 3,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형법」에 따라 작업 의무가 부여된 수형자 중 일부가 작업에 종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작업장 확보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19년 7월말 기준, 작업적격 수형자 23,687명 중 1,705명은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작업장에 미배정

2-2.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규모 조정 필요

가. 현 황

- 법무부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사업을 통해 2020년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총액의 44.5%를 차지하는 566억 3,30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할 계획

나. 분석의견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규모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맞는 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55~61.

【개별 사업 분석】

1 전자공증 이용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법무부는 2010년부터 전자공증제도를 도입·운영 중인데,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전자공증시스템 운영’은 전자공증시스템 유지보수 및 화상공증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업
 - 공증제도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00만원 증액된 7억 4,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화상공증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자공증 이용 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전자공증에 대한 홍보강화 등 이용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62~64.

2 난민심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사업은 난민, 외국인체류자 등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사회적응과 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5억원 증가한 128억원

나. 분석의견

- 연도별 난민신청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걸맞은 난민심사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65~67.

3

치료감호소 유휴병동 활용을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치료감호자 수용·관리 사업은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범법자 등을 치료감호소에 수용하고, 치료재활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9,000만원 증액된 76억 2,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법무부는 인력확보를 통해 유휴병상을 최소화하여, 치료감호소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68~69.

4

대체복무 운영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대체복무 시설개선 및 운영 사업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 규모는 259억 2,600만원

나. 분석의견

- 법무부는 대체복무 도입의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관련 예산 편성에 신중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70~72.

5

추징금 등 범죄수익환수 노력 강화 필요

가. 현 황

- 몰수금 및 추징금 사업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7억 4,300만원 증가한 1,149억 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법무부는 범죄수익환수 전담조직의 활동을 강화하는 등 범죄수익환수에 역량을 집중하여 향후 몰수금 및 추징금 수납률을 제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73~75.

II

법제처

【개별 사업 분석】

1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 계획의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 행정기본법제 개선 사업은 인허가, 제재처분 등 행정작용 전반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
 - 2020년도 동 사업 예산안 규모는 6억 4,600만원

나. 분석의견

- 행정기본법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의 추진 시기를 앞당기거나, 행정기본법안 제출 시기를 포함한 사업계획의 일부 수정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82~84.

2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 외국법제기관 교류 사업은 아시아 법제 전문가회의를 비롯한 법제관련 국제 교류를 실시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 4,400만원 증가한 4억 8,4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인도네시아 법제정비 관련 연구용역의 발표를 위한 세미나 비용을 편성한 만큼, 해당 비용의 적절한 집행을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85~86.

III

감사원

1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 필요

가. 현 황

- 준공 후 46년이 경과한 제1별관 건물을 재건축함으로써 안전성을 확보하고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신규 내역사업
 - 2020년 예산안은 23억 8,600만원

나. 분석의견

- 감사원은 제1별관 재건축 사업이 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되어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경주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92~94.

IV

대법원

【주요 현안 분석】

1

대법원 신규 정보화사업 분석

1-1.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방식의 문제점

가. 현 황

- 대법원 신규사업인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일반회계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사법서비스진흥기금의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여 추진

나. 분석의견

- 대법원은 차세대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재원을 분리 편성하여 추진함에 있어서 통합적 사업 관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완 방안 강구 필요
 -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과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스마트 법원 구현을 위한 차세대 사법정보화 사업 마스터플랜 하에 동시에 병행 추진되는 사업으로 통합적 사업 관리 필요

1-2.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자원 운용 문제

가. 현 황

- 대법원 신규사업인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에 소요되는 자원 규모는 구축 기간(2020~2024년) 동안 연평균 218억원 수준

나. 분석의견

- 대법원은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수입의 정확한 추계와 일반회계 전출 사업의 적정한 편성·집행 등 등기특별회계의 세입 세출을 면밀하게 관리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04~114.

【개별 사업 분석】

1 상임전문심리위원 수당지급 기준 정비 등 필요

가. 현 황

- 대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하여 대법관회의에서 의결한 내용과 다르게 월 900만원의 정액 지급방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 왔으며, 반면 예산(안)은 실적수당만을 근거로 산출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20년도 예산안 14억 8,200만원(14명×12월×12.6건×700천원)

나. 분석의견

- 대법원은 상임전문심리위원에 대한 수당지급 방식을 상근직역으로서의 근무 형태와 실적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적용하고, 관련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제시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15~117.

2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 추진과 관련한 문제점

가. 현 황

- 2020년도 상근조정위원 수당 예산안은 상근조정위원 15명(2019.10월 현재 9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조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수당 금액 8억 8,600만원이 증액된 13억 5,400만원

나. 분석의견

- 상근조정위원제도 확대는 수당지급 방식에 대한 검토, 제도운영의 성과에 대한 분석,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제도 운영 현황의 파악 및 정비 등 체계적인 제도화 과정을 거쳐 추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18~121.

V

헌법재판소

【개별 사업 분석】

1

청사증축 연계사업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사업관리 등 필요

가. 현황

- 2020년도 본부운영지원 사업에는 본관청사 리모델링 및 별관의 본관청사 이전 사업 예산으로 22억 8,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헌법재판소는 2020년도에 증축청사 준공을 전제로 다수의 연계사업을 동시에 병행하여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차질없이 관련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청사증축 사업의 불필요한 추가적 지연사유 발생 방지와 공정관리는 물론, 증축청사 준공을 전제로 수행하여야 하는 연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헌법재판소 청사증축 사업(국유재산관리기금)은 2019년도 계획현액 147억 9,600만원 중 43억 9,600만원이 2020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고, 2019년도 청사증축 후속사업(헌법재판소 일반회계) 예산 24억 6,100만원도 청사증축 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 일부가 2020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관)」, pp.128~131.

제3장

정무위원회

I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주요 현안 분석】

1 미세먼지 대응 관련 개선과제

가. 현 황

-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운영 사업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미세먼지개선기획단을 설치하여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사무·운영 지원과 미세먼지 정책 조정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8억 3,2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미세먼지 저감 목표가 지속적으로 상향됨에 따라 그 목표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현실성 있는 목표 및 정책이 설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정부는 2014년 대비 2021년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35.8%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2018년 말 기준 (예상)목표달성률은 26.3%에 불과
-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측정에 2~3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으로, 정책 효과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배출량 통계자료의 적시성·정확성 있는 제공 필요
 -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국내배출량 통계는 2016년 자료로, 미세먼지 관리대책 시행에 따른 국내배출량 감축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미세먼지 관련 총괄기구인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정책협조 등이 이루어질 필요
 - 국가기후회의의 주요역할 중 하나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을 정부에 제안하는 것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는 올해 11월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국가기후회의의 정책제안은 2020년 이후로 예정되어 있어 기구 간 기능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 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4~18

【개별 사업 분석】

1

규제샌드박스에서의 규제개혁위원회 역할 강화 필요

가. 현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사업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10억 9,6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 규제개혁 총괄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의 역할 강화 필요
 -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 조건 하에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어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국무조정실 총괄 하에 4개의 제도 주관부처(과기부/산자부/중기부/금융위)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 샌드박스 관련하여 의견제출·권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견제출·권고를 한 사례는 없는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9~24

2

부패예방감시단의 정규직제 추진상황 검토 필요

가. 현황

- 부패예방감시단 운영 사업은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7억 3,3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부패예방감시단은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한시조직으로, 존속 여부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 현재 정규직제화를 추진 중으로, 그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25~29

II 국민권익위원회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재정 환수제도 운영 관련

가. 현 황

- 2020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재정 환수제도를 운영하고,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4억 3,5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주관기관으로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처리뿐만 아니라 부정청구된 공공재정지급금의 실제 환수에 이르기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36~40

2 디지털소통팀 운영에 따른 예산 집행상 주의 필요

가. 현 황

- 청렴권익정책알리기 사업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익구제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대국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13억 6,500만원이 편성

- 디지털소통팀 운영을 위하여 내역사업이 2020년 예산안에 2억 5,400만원 신규로 편성

나. 분석의견

-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디지털소통팀을 운영하기 위한 내역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기존 권익증진 정책홍보 내역사업 내 뉴미디어 홍보를 위한 예산은 조정하지 않았으므로 새로 편성된 예산이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중복하여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41~43

3

다부처·복합민원 조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가. 현 황

- 종합민원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은 국민으로 하여금 고충민원·일반민원·복합민원을 한 곳에서 상담하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1억 7,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다부처·복합민원의 소관 결정 후 실제 민원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원 조정의 이행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44~46

III

국가보훈처

【주요 현안 분석】

1

보훈보상제도의 중·장기적 제도개선 필요

가. 현 황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하여 보상금·수당 등 보훈급여금을 지급.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2.4% 증액된 4조 3,255억 1,4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보훈급여금 수준의 공식적인 결정절차가 정해져있지 않고 매년 기획재정부와의 예산협의를 따라 보훈급여금이 결정되고 있어, 보훈급여금 지급대상별 합리적이고 적절한 목표 설정 필요
 - 보훈급여금 인상률을 살펴보면, 보상금의 경우 연도별 인상률은 3.5%~7.0%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수당의 경우 뚜렷한 인상기준이나 목표 없이 단가가 정해지고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57~65.

2

철저한 집행관리가 필요한 건립사업

가. 현 황

- 국가보훈처는 현충시설 건립, 국립묘지 조성, 보훈병원 재활센터 건립 등 다양한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현충시설 건립 사업은 국내외 다양한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225억 6,300만원이 편성
 - 국립묘지조성 사업은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94억 9,200만원이 편성

-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은 4개 지방병원(광주·부산·대전·대구)에 재활 센터를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188억 3,2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현충시설 건립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 사업은 연례적으로 사업예산 상당액이 이월·불용되어 온 사업으로, 올해 예정되었던 건축공사도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국립묘지조성사업의 내역사업인 ‘제주국립묘지조성 사업’은 공사 입찰방식 변경에 따라 입찰공고가 지연된 상황으로, 10월 말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11월경 착공을 진행할 예정임. 당초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된 바,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의 내역사업인 ‘광주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부산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사업은 각각 2019년 10월, 12월에 공사계약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공사계약 진행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이 연장되면 이에 맞추어 예산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66~73.

【개별 사업 분석】

1 광복회관 임차보증금 등 수납 필요

가. 현 황

- 국가보훈처는 2013년 광복회 소유 광복회관을 일부 임차하였다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청사를 이전할 때 임차보증금 7억 4,600만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2018.12.31.일 기준 연납·연체이자 2억 1,160만원이 발생

나. 분석의견

- 임차보증금 등 채권이행연기가 3차례 이루어진 상황으로, 현재 납부기한은 2020년 12월 31일. 광복회로부터 미수된 임차보증금 등을 2020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74~76.

2 인천보훈병원의 건립·운영계획 미흡

가. 현 황

-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사업은 인천보훈병원에 응급실을 설치하고 진료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25억 6,4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인천보훈병원 응급실 설치 사업은 인천보훈병원이 건립·운영되기 시작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는 사업으로, 당초 건립·운영계획이 미흡했다고 보이며, 향후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사업계획을 명확히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77~80.

3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3억 5,6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수유리 애국선열 묘역 사업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예 따라 관리규정, 계획 등을 마련할 예정으로 법률 개정안의 심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81~83.

4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의 일부 내역사업 이관 필요

가. 현 황

-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은 2020년 6·25전쟁 70주년 등을 기념하여 노후화된 국립묘지 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81억 1,9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특별주기 국립묘지 정비사업은 2020년에만 진행하는 단년도 사업으로, 동 사업 내에 편성된 다년도 내역사업은 다른 세부사업으로 이관할 필요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대전현충원 충혼당 건립 관련 후문도로 확장 공사’ 사업은 사업기간이 2020~2022년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사업으로 이관하는 것이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84~86.

5

88골프장 매각여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

가. 현 황

- 보훈기금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 수입 중 기타재산수입에 88골프장 매각대금 1,180억원, 입장료수입에 골프장 운영수입 207억 200만원, 기타잡수입에 카트 수입 등 잡수입 102억 6,300만원이 계상

나. 분석의견

- 88골프장 매각은 10년 가까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매년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매각대금을 수입에 편성하는 것을 지양하고, 매각 여부에 대한 조속한 방향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87~90.

6

최근의 금리상황이 미반영된 대부사업의 예산조정 필요

가. 현 황

- ‘국가유공자등 대부’ 사업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제대군인대부 사업’은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게 대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보훈기금운용계획안에 국가유공자등 대부 사업은 282억 4,000만원, 제대군인 대부사업은 22억 2,9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국가보훈처는 2018년도 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연 1.5%→1.75%)을 주요 근거로 하여 2019년 대비 이차보전금을 증액하여 편성하였는데, 올해 7월, 10월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1.75%→1.50%→1.25%)
- 시중의 저금리 상황을 고려할 때 대부실적 저조가 우려되고, 현재의 이차보전금 계획안은 최근의 금리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어, 이차보전금을 조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91~95.

IV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분석

1-1. 과징금 수납률 제고 및 환급 관리 필요

가. 현 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소송 패소, 직권취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 근거가 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과징금을 환급하고 있으며, 과징금 환급액은 과오납금으로 취급되어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환급결정이 이루어진 해당연도의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이 차감

나. 분석의견

- 과징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저조하므로 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과징금 부과 처분에 있어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해석을 철저히 함으로써 행정소송 패소 등으로 인한 과징금 환급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1-2. 사익편취 행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

가. 현 황

- 사익편취 행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총수일가 지분이 일정비율(비상장사 20%, 상장사 30%) 이상인 계열회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친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익편취행태개선사업에 2020년 예산안 2억 6,7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익편취 행태를 개선하도록 적극 유도할 필요
-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부당성 여부 판단을 엄밀히 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 소송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

1-3.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가. 현 황**

- 신고로 인한 적발이 효과적인 14가지 행위유형에 대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불공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사업에 2020년 예산안 11억 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신고포상금 지급 실적이 2018년의 경우 예년에 비하여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신고포상금제도가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02~116.

【개별 사업 분석】

1

상품비교 정보생산 지원 사업 연구용역 개선점

가. 현 황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사업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품의 가격·품질 등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5억 6,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상품 비교정보 생산 사업을 통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소비자단체의 수가 증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
- 동 사업을 통한 연구용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포털 사이트인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공개되나, 연구용역 제출 후 상당시일 경과 후에 업데이트하고 있고, 일부 단체가 생산한 상품비교정보는 조회수가 낮은 문제점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17~121.

2

워크숍 예산 증액 적절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2020년 예산안에 직원 워크숍 수행을 위한 예산 1억 2,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직원 워크숍 수행을 위한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으로 증액 편성하고 있어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22~124.

3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내 고용부담금 감액 필요

가. 현 황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은 상품·안전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11억 8,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사업 내 고용부담금은 예산 편성 과정의 착오로 인하여 과다하게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감액이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125.

V

금융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핀테크 지원사업 분석

1-1. 혁신금융서비스 사업화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2019년 총 32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받아 53건 지정
 - 5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중 2019년 9월말 기준 11건의 서비스 출시

나. 분석의견

-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의 소비자 편의성 개선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속한 법령정비 추진 필요
 - 금융 분야 규제 샌드박스(「금융혁신지원 특별법」)는 산업·정보통신 등 다른 분야와 달리 법령정비 미완료 시 유효기간 연장 간주규정이 없음

1-2. 금융회사-지정대리인 간 업무위탁계약 면밀한 관리 필요

가. 현 황

- 금융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 사업은 핀테크 기업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를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지정대리인 지정 이후 업무위탁계약 체결단계까지 면밀한 사업관리 노력 필요
 - 24건의 지정대리인 중 위탁계약체결이 완료된 건수는 3건에 불과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36~147.

【개별 사업 분석】

1 정책금융기관 BIS비율을 고려한 예산심사 필요

가. 현 황

-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각각 450억원씩 총 900억원의 출자예산을 편성
 - 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은 2019~2021년 3년간 총 15조원의 자금공급 계획

나. 분석의견

-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의 BIS기준 자본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운영 초기단계의 선제적인 정책금융기관 손실보전 적정성 검토 필요
 - 총자본비율(2019.6.): 산업은행 14.70%, 중소기업은행 14.50%
 - － 금융감독원 규제비율(바젤Ⅲ): 10.5%, 경기대응완충자본(2.5%) 포함 시 13.0%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48~152.

2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적정 출자금액 산정 필요

가. 현 황

- 소상공인 특별자금 지원(1.2조원), 혁신기업 특별자금 지원(1.0조원)을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2,400억원의 출자예산 편성
 - 동 사업의 2019년도 예산은 2,000억원

나. 분석의견

- 출자규모 산정기준을 BIS비율 유지방식에서 손실액 보전방식으로 변경
 - 손실액 보전방식을 사용하면서 목표이익률(0.53%)을 출자필요액에 포함하여 계상
 - － 목표이익률을 대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53~157.

3

기업구조혁신펀드 사업 예산안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황

- 금융위원회는 부실징후 중소·중견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 확대를 위해 산업은행에 1,000억원 신규 출자예산 편성
 - 기존에는 정부재정 없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 등이 각각 출자하여 1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 → 재정이 투입되는 2020년 2조원으로 확대 계획

나. 분석의견

- 2019년 9월 현재 결성된 1.5조원의 펀드 중 미투자 금액이 1.1조원에 달함
 - 현 시점에서 1조원 이상의 추가투자여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펀드 추가 확대 필요성 및 재정투입 적정성 등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58~165.

4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 사업 예산안 규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황

-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동산금융 전체에 대한 신뢰를 부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억원 편성
 - 2020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출자됨

나. 분석의견

- 동산담보 대출목표(2019년 말 1.5조원, 2020년 말 3조원), 부실채권 매입비율(5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예산심사 필요
 - 2019년 8월 현재 전체 은행의 동산담보 대출 잔액은 7,500억원 수준
 - 현재 동산담보 회수율은 11~16% 수준인 반면 부실채권 매입비율 50%로 높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66~174.

5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위한 신규상장 지원 적정성 검토

가. 현 황

- 코넥스 신규상장 기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 12억 3,500만원 신규 편성
 - 신규상장 소요비용 중 지정자문인 선임비용, 외부감사비용의 50% 지원

나. 분석의견

- 신규상장 필요비용에 대한 보조금 지원조치가 코넥스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 지정자문인 선임 및 외부감사 실시는 코넥스시장 상이익간 동안 계속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이므로 일시적(1~2년) 보조금 지원 효과 제한적일 우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75~179.

6

혁신모험펀드의 적극적인 민간자금 유치노력 필요

가. 현 황

-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는 사업
 - 2020년 3,000억원 편성으로 2019년(1,000억원)에 비해 200% 증액

나. 분석의견

- 성장지원펀드를 통해 성장기업에 보다 많은 민간자금이 투자되도록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 대신 펀드 출자라는 간접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공공부문 출자를 마중물로 한 민간 투자자금 유치에 있음
 - －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재정 2,000억원)의 공공출자비율(60%) 적정성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소관)」, pp.180~183.

7

우리금융지주 매각 로드맵을 고려한 수입예산 편성필요

가. 현 황

- 국공채수입은 당해연도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의 자체수입으로 충당이 곤란한 만기도래 부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조달을 위해 편성되는 과목
 - 2020년 3,0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우리은행 매각 로드맵(2019.6.25.)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여 채권발행 최소화 필요
 - 우리금융지주 주식이 계획대로 매각되는 경우 별도의 신규채권 발행 없이도 만기도래 채권 원리금(2.5조원)을 포함한 지출금액 충당 가능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84~186.

8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가. 현 황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금리 외에 법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농어민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저소득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기금재구조화 추진 필요
 - 기금존치평가 등 기금에 대한 외부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저소득층 위주 사업운영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제도개선 필요
 - － 가입기준 변경(자산기준→소득기준) / 예산사업 전환(한은 출연금 폐지) 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소관)」, pp.187~190.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I

기획재정부

【주요 현안 분석】

1

국유재산관리 관련 개선사항

1-1. 국유재산특례지출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정부는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매년 작성한 후,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안 첨부서류의 하나로 국회 제출

나. 분석의견

- 2019년 이후 국유재산특례지출이 민간부문 포함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
-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이양 등 다년도에 걸친 대규모 특례지출은 사전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운용할 필요

1-2. 국유재산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의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정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예산안 제출시 국회 제출. 또한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결산보고서 제출시 그 첨부서류로서 국회 제출

나. 분석의견

- 국유재산종합계획과 실적간 괴리가 크므로, 수립 및 실적 집계 정확성 확보 필요
- 국유재산종합계획상 수입액과 정부예산상 수입액이 별도로 편성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두 계획간의 정합성 확보 필요

1-3. 국유재산종합계획 국회 제출 관련 제도개선 사항

가. 현 황

- 정부는 현재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 중

나. 분석의견

-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 입법 실무상 이는 ‘관련 상임위원회’가 아닌 ‘국회’ 제출로 해석
- 국유재산종합계획이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에만 제출되고 있어 다른 기관·부서의 공식적인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 정부는 「국유재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제출처를 변경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3~25.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 관련 분석

2-1. 신규 시스템의 기능개선 방안 제언

가. 현 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크게 업무시스템과 재정분석시스템으로 구성되며, 후자는 업무시스템의 축적 자료를 통계로 제공 또는 자체 생성하게 하는 보조시스템

나. 분석의견

- 재정사업의 목적별 분류 기능을 신설할 필요
- 시계열 자료 산출 기능 도입시 예·결산 연계 및 실질적으로 연속성 있는 사업들의 연계도 함께 고려할 필요
- 기금계획 자체변경 내역도 재정분석시스템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

2-2.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규모 조정 필요 등

가. 현 황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정보화)은 노후화된 기존 D-Brain시스템을 대체하는 신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

나. 분석의견

- ‘사업관리조직(PMO) 운영’ 내역은 실제 계약금액상 낙찰차액을 고려하여 위탁사업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
- ‘보안 컨설팅’ 내역은 일정상 2020년에는 착수 소요 정도만 필요할 것으로 보므로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른 선급금 수준으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응용프로그램 개발’ 내역 중 ‘프로그램 분석·설계 및 구현’ 공정 예산은 2019년 사업 지연에 따른 2020년도 공정 순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2-3. 총사업비 산출의 정확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 정부는 이 사업의 총사업비를 1,367억원으로 추산·보고한 후 예산을 승인

나. 분석의견

- 그러나 정부는 2020년 예산안 국회 제출시 총사업비를 다시 1,565억원으로 198억원 증액·제시하였으며, 증액분 전액은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는 5년간의 유지·보수비라는 입장
- 이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이므로 2019년 예산안 심사는 이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 정부 설명에 따르면 5년간 유지·보수비는 2019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시 총사업비(1,367억원)를 수정 보고할 때 이미 포함시켰어야 함. 향후 신규사업 예산 편성시에는 관련 규정을 보다 면밀하게 살펴 정확한 총사업비를 제시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26~37.

3

복권기금 운용 분석

3-1.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의 건전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청년·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청년층에 대한 ‘대학생·청년 햇살론’ 상품을 운용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2012~2018년간 운영된 ‘대학생·청년 햇살론’ 상품의 대위변제율이 2012년 대출 기준 5년 초과시 대학생 11.3%, 청년 20.6%로 과도한 상황이므로, 해당 선례를 참고하여 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이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임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제출된 9월 이후에야 융자금리·기간·자격요건 등의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있으므로, 주관 부처는 향후 복권기금 사업 신설시 국회 심의 일정을 고려하여 조속히 사업 계획을 확정할 필요

3-2. 복권기금의 타 기금 전출사업 반납금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복권기금은 계정성 기금으로서 다른 기금에 대한 전출사업을 다수 수행. 복권기금의 기금전입금은 이러한 전출사업의 불용액을 반환받는 세입과목

나. 분석의견

- 2017~2018회계연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전출사업 불용액 반납금이 2년 이후까지 복권기금 수입계획안에 미반영
- 이와 같이 연례적으로 누락되는 반납 소요가 향후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38~45.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
해소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 지역지원계정 전출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여유재원을 지역 지원계정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2,876억 3,7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지역자율계정은 최근 3년간 세출예산 이월액이 결산상 잉여금을 초과하여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이 발생. 누적규모는 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3,552억원 수준
- 2020년 지역사업의 대규모 지방이양으로 지역자율계정에 여유재원이 발생하여 지역자율계정의 재정구조 정상화를 위한 적기로 판단. 정부는 「국가재정법」의 취지에 따라 누적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 이월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46~49.

5

국고채 이자상환 계획액의 적정 규모 편성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고채 이자상환 사업 정부안은 19조 8,555억 7,500만원으로 계획됨
 - 2014~2019년 동안 국고채 이자상환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규모는 0.7조원~1.9조원 수준이며, 2014~2018년 동안 불용 규모는 0.5~1.0조원 수준에 이름

나. 분석의견

- 2019년 국고채 이자상환의 집행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도 정부안의 국고채 이자상환 편성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50~55.

6

외국환평형기금의 자금 확보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2020년 외평기금의 원화자금 확보규모는 5조 7,862억 9,800만원이며, 외화자금 확보규모는 15억 달러(1조 7,850억원)임
- 2016~2018년 결산을 살펴보면 외평기금은 공자기금으로부터 매년 5~6조원의 원화자금을 확보하였고, 2019~2020년에도 각각 5.8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계획

나. 분석의견

- 2020년 외평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확보하는 원화자금 5.8조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시 2018.7.1.~2019.6.30.동안 외환시장 안정조치로 외화를 매도하고 그만큼 원화를 확보한 점을 고려할 필요
- 2020년의 환율 시장의 특징을 반영하여 외평기금의 신규자금 조성규모를 판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56~61.

7

공공자금관리기금 기금 예수금 관리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기금 예수금(공자기금 수입)은 전년에 비해 2조 7,131억원 증가한 17조 9,170억원이 계획되었으며 기금 예수원금상환(공자기금 지출)은 전년에 비해 7,086억 5,700만원 감소한 14조 7,445억 2,300만원이 계획됨

나. 분석의견

- 2020년 타 기금으로부터의 공자기금 예수잔액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미래의 채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각 기금의 여유 재원 상황을 살펴 효율적 재정운용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62~65.

8

대외경제협력기금 대개도국차관 사업의 집행 개선 방안 마련

가. 현 황

- 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의 대개도국차관 계획안은 1조 2,048억 7,900만원이며, 아시아차관사업은 집행률이 다소 저조했음(63.6%)에도 불구하고, 신북방·신남방정책 정책 기조 등에 따라 2020년 4,215억 7,300만원을 계획함

나. 분석의견

- 2020년 정부안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하였다고는 하나 과거 집행부진의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집행률을 제고하려 노력할 필요
-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소액차관사업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66~72.

【개별 사업 분석】

1

협동조합활성화사업의 실질적 성과 확보 필요 등

가. 현 황

- 협동조합활성화사업은 협동조합 정책을 위한 기본경비성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억 8,400만원이 증액된 71억 1,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협동조합 제도도입 후 7년이 경과하였음을 고려하여, 협동조합 설립규모 등 양적 성과뿐 아니라 재정상황·운영실태 등 보다 실질적인 성과도 제고할 필요
- 청년창업 지원 내역사업은 2019년 지원대상 60팀 선정을 위해 사업신청 받은 결과 109팀이 신청하여 신청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중. 2020년 사업대상이 100팀으로 확대되는 만큼 예비창업팀의 지원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73~76.

2

국유재산관리기금 공용청사취득의 적정 계획액 계상 필요

가. 현 황

- 대법원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은 대구고등법원·고등검찰청 등의 종합청사를 신축·이전하는 사업. 2020년 계획안은 전년대비 91억 300만원 증액된 191억 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이전지역인 대구 연호 공공주택지구의 부지조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건설 보상비 170억 300만원은 부지가 완공되는 2021년 이후 편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77~79.

3 관련 법률안 심의결과에 따른 목적예비비 조정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0.5조원이 증액된 2.3조원의 목적예비비 편성.

나. 분석의견

- 정부가 목적예비비를 대규모 증액한 것은 현재 ‘2019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소요를 고려한 것
- 향후 관련 법률안 심의과정에서 ‘2019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지급단가의 산출 기준인 목표가격이 합의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여 예비비 예산의 조정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80~82.

4 대외경제협력기금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사업의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 경험증진자금 이차보전(ODA)사업은 대개도국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도입한 경험증진자금 제도 중 한국수출입은행이 저양허성차관을 운용함에 있어 발생하는 이자손실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 20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됨

나. 분석의견

- 대출소요비용을 과다계상하지 않도록 주무부처는 사업별 이차보전 승인 시 이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 경험증진자금 지원방식은 OECD의 ODA 규범 준수를 위해 비구속성 원칙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원조사업 수행사로 선정되지 못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원조사업 참여율이 저하되는 단점도 상존하는 점을 감안해야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83~85.

II

국세청

【개별 사업 분석】

1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의 과제별 사업관리 검토 필요

가. 현 황

- 빅데이터센터 구축사업은 기존 내부자료 이외의 다양한 외부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기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2020년 104억 7,200만원)

나. 분석의견

-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별 분석과제 분리발주방안 검토 필요
 - 국세청은 분석과제(연간 73억원, 25개 내외) 전부를 일괄 발주
 - － 빅데이터 분석 가능 기업이 많지 않아 현재 유효한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운 여건이나 추후 빅데이터 플랫폼 안정화 시 활발한 중소기업 참여 독려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93~95.

2

역외탈세 대응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역외탈세대응활동 사업은 역외탈세 차단을 통해 국세수입을 확충하려는 사업
 - 2020년 67억 2,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신규편성 국외위탁교육 사업의 차별화 노력 필요
 - 역외정보 전문인력 양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노력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96~99.

3

공매수수료 수입대체경비 수입·지출 일치 필요

가. 현 황

- 국세청 소관 수입대체경비는 공매수수료 수입(기타잡수입)과 이를 공매 대행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급하는 사업으로 분류
 - 기타잡수입 9억 2,500만원 / 공매수수료 지급 5억 9,300만원

나. 분석의견

- 수입대체경비로 편성된 기타잡수입과 공매수수료 사업의 예산산출근거 및 예산액 상이
 - 공매수수료는 공매대행기관이 지출한 비용을 공매수수료로 징수하여 이를 대행 기관에 지출하는 것이므로 예산편성단계에서는 수입과 지출을 일치시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00~103.

4

모바일 고지를 통한 전자송달 방식 확대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국세청은 과기부 시범사업(대국민 고지·안내문 전자화) 선정에 따라 성실신고 안내, 근로·자녀장려세제 안내 등 2020년 일반우편의 70%를 모바일 발송 계획

나. 분석의견

- 일반우편의 모바일 전환 성과를 바탕으로 모바일 송달방식을 국세 전자고지에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재는 「국세기본법」에 연계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송달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모바일을 통한 납세고지 불가
 - － 개인정보 보안성, 국민편의 제고효과, 행정비용 절감효과 등 종합적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04~107.

5

합리적인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실시기준 마련 필요

가. 현황

-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은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소형 오피스텔(꼬마 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실체가치를 반영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사업(2020년 신규사업 24억 2,400만원 반영)

나. 분석의견

- 감정평가 실시대상 부동산과 기존 계산방식 적용 부동산 간 합리적 구분기준 마련 필요
 - 아파트 등 다른 재산과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08~111.

III

관세청

【주요 현안 분석】

1

관세국경에서 감시·수사 역량 강화 필요

1-1. 방첩기관 지정에 따른 정보수집·수사 역량 강화 필요

가. 현 황

- 북한산 석탄 반입 등 안보위해 물품 반입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세청이 2018년 11월 방첩기관으로 신규 지정

나. 분석의견

- 관세청이 신규로 방첩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방첩업무를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방첩 전문인력 확보 및 기존 직원들의 방첩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에 있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

1-2. 밀수 단속을 위한 감시장비 도입 및 운영 관련

가. 현 황

- 감시장비 운영관리사업은 세관이 보유한 감시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195억 4,500만원 편성
- 조사감시장비 현대화 사업은 세관이 보유한 조사감시장비를 신규도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177억 9,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감시정 축소에 따른 감시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조 강화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

1-3. 비위행위에 대한 내부감찰 강화 필요성

가. 현 황

- 최근 관세청 일부 직원들이 업무 과정에서 밀수입을 묵인하거나 밀반입에 가담하였다는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드러남

나. 분석의견

-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감찰 강화 및 제도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18~128.

【개별 사업 분석】

1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분석

가. 현 황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수출입화물 검사결과 수출입에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검사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이 신설되었고, 2020년 예산안에 100억 5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수출입화물 검사지원 사업 예산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의 근거법률 개정안이 2019년 10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으로, 국회 심사 경과에 따라 동사업의 예산이 결정될 필요
- 동 사업은 적극적인 세관검사 수행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2020년 적정 검사율 수준을 현재검사율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는 문제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29~131.

2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사업 예산 편성 문제점

가. 현 황

-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 사업은 인천신항 신설,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신축 및 인천항 내항 재개발에 따른 기존 세관검사시설 폐쇄로 해상특송화물이 집중되는 인천 신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세관 통합검사장을 신축하려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에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관리기금에 관세청 청사시설 취득 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인천항 세관통합검사장 신축 예산 240억 400만원이 편성
 - 2020년 예산안에 관세청 소관 일반회계 세부사업으로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예산이 13억 9,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신축사업 예산은 사업 진행 일정에 맞추어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32~134.

3

여행자통관 지원(그린캡) 운영 관련 개선사항

가. 현 황

- 여행자 통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이 30억 5,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외국인 여행자의 통관을 지원하기 위한 그린캡 요원의 추가 고용은 국내 방문 여행객 수의 국적별 분포를 반영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35~137.

IV

조달청

【주요 현안 분석】

1

비축물자사업의 원활한 이관 관련 고려사항

가. 현 황

- 조달청은 물가안정 및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생산지원을 위하여 금속비축 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6종과 망간 등 희소금속 9종을 비축하였고, 한국 광물자원공사는 크롬 등 희소금속 10종을 비축하고 있음
 - 2019년 6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한국 광물자원공사 등 관계기관 합의에 따라 조달청이 비철금속, 광물자원공사는 희소금속을 비축하는 것으로 결정

나. 분석의견

- 조달청은 한국 광물자원공사와의 금속비축사업 업무분장에 따라 희소금속 9종의 구체적인 이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진행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46~148.

2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의 국유화 제고 필요

가. 현 황

- 조달청은 각 부처의 국유재산 관리 실태를 조사 및 점검하여 관리하고 있음

나. 분석의견

- 조달청은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및 은닉재산의 조속한 국유화 진행을 위해 유관기관 공조 및 협업을 통해 국유화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49~153.

【개별 사업 분석】

1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조달청은 조달시장의 불공정 조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조달가격 적정성을 상시적으로 검증하고 있음

나. 분석의견

-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업체의 자체기준표로 대체하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으므로 사후적으로 불공정 조달행위를 더욱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여 근절시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54~157.

2

하도급 지킴이 확대 ISP 수립 시 유사 시스템 고려 필요

가. 현 황

- 하도급 지킴이 확대 ISP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19.6.19 시행)에 따른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의무화에 따라 사용자 불편사항 개선, 미비한 청구 및 지급절차를 구현 등 개선안을 마련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하도급 지킴이 서비스 확대 ISP 수립 사업에서 민간 및 지자체의 하도급 지킴이와 유사한 시스템과 관계를 정립할 필요
 - 기업 및 중소기업은 하도급거래 관리 및 인센티브 획득을 위해 기업 내부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등을 통해 하도급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서울시는 ‘대금바로시스템’, 경기도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 강원도는 ‘강원대금알림시스템’, 중소기업벤처부는 ‘상생결제시스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채불e제로시스템’을 구축·운영 중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58~160.

V

통계청

【주요 현안 분석】

1 인구주택총조사의 철저한 사전준비 필요

가. 현 황

- 통계청은 우리나라 인구 및 전체 가구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여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할 예정

나. 분석의견

- 인구주택총조사 시험조사 실시 결과 인터넷조사 참여율이 낮아 이에 대한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표본조사에 따른 오차율 감소를 위한 무응답률 최소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통계청은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면접도구인 태블릿 PC의 향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방문면접조사원의 위험상황 발생 가능성이 있어 안전대책 마련 및 사전 홍보 방안 마련이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66~173.

2 인공지능 챗봇서비스의 설계 및 구축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 통계청은 국가통계포털에 접속하여 통계검색에 어려움을 겪는 통계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Hi~ KOSIS'라는 인공지능 기반 대화형 챗봇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

나. 분석의견

- 인공지능 챗봇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검색엔진 고도화와 함께 서비스 설계와 데이터 변환에 보다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74~178.

【개별 사업 분석】

1

통계빅데이터센터 인력의 효율적 운영 필요

가. 현 황

- 통계청은 데이터 리터러시 지원을 위해 자료분석 및 DB 구축 인력을 2019년 15명에서 2020년 25명으로 10명 증원(사회서비스 일자리 2단계 사업)할 계획

나. 분석의견

- 서울의 통계빅데이터센터 이용실적이 급증하고 있어 인력증원계획에 앞서 대전의 통계빅데이터센터에 집중되어 있는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계획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79~181.

2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은 자체 통계 조직이 없거나 취약한 기관에서 신규통계 개발시 통계작성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인해 부실통계가 작성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각 부처 등 통계 작성기관 소관 통계를 수입대체경비를 운용하여 대행 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는 연례적인 초과지출이 발생하고 있어 2020년 예산 편성 시 통계생산대행의 수요조사 결과가 적절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2020년 통계생산대행 수입대체경비 사업 및 기타잡수입(통계생산대행) 예산안은 9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각각 13억 4,800만원을 증액시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획재정위원회 소관)」, pp.182~183.

제5장

교육위원회

I

교육부

【주요 현안 분석】

1

고등학교 무상교육 사업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가. 현 황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시·도 교육청에 증액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6,594억원 규모(신규)

나. 분석의견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예산안은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검토 시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시행근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사항이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고지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사항임
 - － 국고지원은 증액교부금(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 총소요액의 47.5%)을 2020~2024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설·운영
 - 교육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해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기획재정부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미통과로 ‘보류’를 통보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9월 2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2019년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은 지속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하는 의무지출이므로, 한시법 종료 이후에는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제도 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속가능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전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1년부터는 1조 9,951억원의 총비용이 소요되며, 이중 국가, 시도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9,466억원, 9,466억원, 1,019억원을 부담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12~18.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법 개정 추이 점검 필요

가. 현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내국세와 교육세에 연동되어 결정되며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으로 구성
 -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78억원(0.5%) 증가한 55조 4,967억원

나. 분석의견

- 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교부율 인상(20.46 → 20.79%)을 전제로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법 개정 추이 등을 점검 필요
 - ‘지방재정분권 추진 방안(2018. 10. 30., 관계부처 합동)’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4%p)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 21%(+6%p)로 인상 추진 중(개정안 제출)
 - 지방소비세 인상에 따른 내국세 감소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을 2018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019년 20.46%로 인상하였으며, 2020년은 20.79% 인상을 전제로 교부금 편성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 규정사항으로 교부율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전제될 필요(2019년 10월 29일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
 - ※ 한편, 교육부가 2020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안 산출에 제시한 교부율은 20.46%로 교부금 규모와 교부율이 불일치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19~22.

【개별 사업 분석】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법 개정 추이 반영 필요 등

가. 현 황

- 정부는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해 3년 한시법(2017~2019년)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설치·운영
 - 2020년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안은 전년대비 307억원(0.8%) 감액된 3조 7,846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종료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심의시 법 개정 여부 반영 필요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3년(2020~2022년) 연장하는 법률안이 2019년 8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2019년 10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한시법이 종료되는 2022년 이후에는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 마련 필요
 - 학령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교육재정 여건도 변하고 있으므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의 중장기적인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수립 필요
 - －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 1인당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2018년 920만원으로 2010년 441만원의 2배 이상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내역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누리과정 무상교육 비용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항목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법과 고시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 비용 이외에 방과후과정비, 어린이집 치우개선비 및 운영비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어 법 취지와 일부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23~28.

2

대학혁신지원(R&D)의 체계적인 사업추진 필요

가. 현 황

□ 대학혁신지원(R&D)은 대학의 자율혁신을 위해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47억원(41.3%)이 증액된 8,035억원 편성

유형	대상	지원 조건	2019	2020
I 유형(자율협약형)	자율개선대학(131교)	대학의 자율 혁신	5,350억원	6,540억원
II 유형(역량강화형)	역량강화대학(12교)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 대학 특성화 전략	296억원	362억원
III 유형(지역혁신형)	3개 지역 및 지역대학	자주채와 자주혁신 컨소시엄 구성 지역혁신 추진	-	1,074억원

※ 2019년 대학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통합·개편

나. 분석의견

□ 대학혁신지원(R&D)은 예측 가능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학의 자율 개선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학 혁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필요

- 대학혁신지원(R&D)의 2차년도 중기재정계획 재정투자 규모가 대폭 확대
- '18~'22 중기재정계획 상 최고 지원단가가 '19~'23 중기재정계획에서는 최저 지원단가
※ 예시: I유형 지원단가 30.72~40.84억원 → 40.84~72.04억원
- 대학의 자율혁신 성과평가에 따라 재정이 차등 지원되어야 하나, 2020년 예산안 규모가 확대되어 당초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성과평가 인센티브의 효과 미흡
- 예산 확대가 중장기 사업계획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한계 대학 생존을 지원함으로써 필요한 혁신의 지원을 초래하는 부작용 발생 우려

□ III유형(지역혁신형)의 구체적인 사업계획 마련 필요

- III유형은 기존 I, II유형과 사업추진체계(대학단독 vs 지자체와 지역대학 컨소시엄), 재정지원방식(대학기본역량 진단결과와 연계+대학별 포괄적 지원 vs 미연계+ 컨소시엄 당 총액 지원) 등에서 차이
- 지역별 예산배분, 선발요건·선발방식 등 집행방식 등에 대한 사업 구체화가 부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29~35.

3

사학연금기금 의무지출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대표적인 의무지출은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 2020년도 예산안은 연금급여 3조 1,364억원(18.2% 증), 재해보상급여 539억원(23.1% 증), 퇴직수당급여 6,553억원(2.8% 감)

나. 분석의견

- 사학연금기금의 의무지출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여, 기금의 수입 및 지출, 재정수지를 적절하게 계획·관리 필요
 - 교육부는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의무지출 추계를 위해 별도의 방법론을 개발하여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 증가율을 적용해 산정
 - 2019년 연금급여 1,138억원 등 동 급여에 대한 계획변경이 매년 발생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36~38.

4

BK21 플러스 사업의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가. 현 황

- BK21 플러스는 우수 대학원의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873억원(29.4%) 증가한 3,840억원 규모로 편성

나. 분석의견

- 4단계 BK21 사업의 예산 규모는 3단계 대비 약 1.5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사업비 예산을 연구장학금 예산과 비례하여 증액하는 등 사업비 구성 내역이 일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39~43.

5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의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우선 지원 필요

가. 현 황

-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선취업 후진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3년 이상)인 대학생(1~4학년)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91억원(33.1%) 감소한 385억원 규모

나. 분석의견

-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으로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이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교육부는 동 사업의 지원요건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 등으로 완화하였으며, 지원대상은 2019년 9,000명에서 2020년 11,000명으로 확대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44~47.

6

교육부 소관 R&D 사업의 사업기간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 교육부 소관 R&D 사업은 대학혁신지원(R&D) 등 23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보다 5,134억원(22.3%) 증가한 2조 8,201억원 규모

나. 분석의견

- R&D 사업의 집행가능성과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을 12개월로 산정한 신규 과제의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
 - 교육부는 23개 R&D 사업 중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과제에 대해서도 연구기간을 모두 12개월로 편성
 - － 2020년 3개 사업 총 예산안 2,422억원 중 신규과제에 대해 12개월 기간을 반영한 예산 규모는 1,030억원(42.5%)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48~50.

7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고등학생들에게 취업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이 당면한 고졸 기술·기능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327억원(41.9%) 증가한 1,107억원 규모

나. 분석의견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경우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 및 장려금 지급이 연도 내에 이루어지는 비중이 낮으므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24,000명에 대해 3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 735억원이 편성되었으나 연도 내 집행액은 95억원(집행률 13.2%)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단가 인상(300만원→400만원)은 취업 유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므로 사업효과성에 대한 엄밀한 검토 필요
 - 교육부는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구직촉진수당 등이 대학진학 및 진로 결정 유인의 유인이 있으므로 고등학생의 취업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지원단가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
 -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해서도 고졸 후학습자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은 소득기준 등에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과 차이가 있음
- 현장실습 지원금은 기존 국가시책특별교부금 사업(현장실습 수당)의 지원 단가를 인상하고 재원을 교부금에서 국고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사업효과성,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여건 등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수당은 2017년부터 국가시책특별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왔으며 2019년 예산은 60억원 규모(3만명, 월 20만원), 2020년 예산안 규모는 324억원(2.7만명, 월 60만원)으로 확대되었으며, 교육부 일반회계에 편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51~56.

8

중앙취업지원센터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안정적 운영 필요

가. 현 황

-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고등학교 취업지원을 위한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간 협력체계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차원의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18억원 규모(신규)

나. 분석의견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중앙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강화 필요
 -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의 근거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 규정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57~59.

9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 설립은 전국단위 모집 장애학생 예술 중·고등학교(부산대 부설) 및 진로·직업교육 특성화고등학교(공주대 부설) 설립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80억원(665.3%) 증가한 207억원 규모로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0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2019년에 설계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업이 지연되어 2020년 초에 설계 계약 및 착수, 2020년 10월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계획
 - 그러나 총공사비 중 1년차 공사비 편성 비중이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경우 40%,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의 경우 50%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60~62.

10

국립대병원 지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 반영 필요

가. 현 황

- 국립대병원 지원은 국립대병원의 신축, 이전, 환경개선, 의료장비, 개원준비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06억원(16.8%) 증가한 737억원 규모로 편성

나. 분석의견

- 충남대학교 분원 건립사업을 위한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결과(2019년) 보다 총사업비를 증액(303억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완료 이전에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예산안 심의 시 재검토 결과를 반영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63~65.

11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현장실습 기업현장교육 지원은 기업의 현장실습 지도·관리 및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추진할 계획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보다 182억원(791.3%) 증가한 205억원 규모로 편성

나. 분석의견

-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기업현장교사 수당의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교육부 이관 후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기업현장 실습의 안전관리 및 수당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고용노동부 사업의 경우 2018년 3,0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450개 기업에게 1억 8,500만원(집행률 20.6%)을 지원하는데 그쳤으며, 2019년 1,500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9월말 150개 기업이 신청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 소관)」, pp.66~70.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I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현안 분석】

1 사업단 신설을 통한 R&D 신규사업 수행 방식의 문제점

가. 현 황

- 사업단 신설을 통해 수행하는 2020년 4개 신규 R&D 사업*은 사업단 운영비로 전체 사업비의 3.8~12.0% 규모로 편성
 - *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치매극복 연구개발, 동북아지역연계 초미세먼지 대응 기술개발,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 사업
- 범부처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 치매극복 연구개발 사업은 사업단 운영비 외에 전문기관의 기획평가관리비로 전체 사업비의 1.9~2.7% 규모로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단 운영비는 구체적인 사업단 구성·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적정규모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할 필요
- 사업단과 전문기관 간 역할을 명확히 분담하고, 적정규모의 기획평가관리비 지원 필요
- 사업 종료 후 사업단 해산 및 성과관리 방안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사업단을 통한 R&D 사업 관리의 부작용(생성자료 보관 및 사업 종료 후 성과관리 부실 등)을 최소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6~23.

2

혁신적·도전적 R&D 신규사업의 검토 필요사항

2-1.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의 활용가능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혁신성과 도전성이 높은 범부처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혁신도전 프로젝트(18억원)와 G-First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48억원)을 2020년 신규사업으로 편성

나. 분석의견

- 혁신도전 프로젝트 시범사업은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본 사업 기획에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기존의 대형 프로젝트 추진 사례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방향 등을 마련할 필요

2-2. G-First 사업의 충실한 선기획 필요

가. 현 황

- G-First 사업의 내역사업인 G-First(원천기술창출형) 사업은 혁신성과 파급성이 높은 핵심원천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신산업 창출을 위해 후속 연구가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선기획 6억원을 편성
- 동 사업은 2019년 10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인 ‘G-First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됨

나. 분석의견

- G-First(원천기술창출형) 시범사업은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 중이므로, 선기획을 충실히 한 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지원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24~32.

3

연구자주도 기초연구 R&D 사업의 개선과제

3-1.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예측가능성 및 전략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개인기초연구 사업은 학문 분야별 특성에 맞추어 개인단위의 기초연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12억원(26.7%) 증액한 1조 2,408억원을 편성
- 동 사업은 연구자 생애주기로 구성된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지원 수가 연도별로 변동이 크고, 일부 기술분야는 우수연구 사업 내 지원 비중이 감소하는 문제

나. 분석의견

- 이공분야 개인연구자의 지속적·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해 매년 선정하는 신규과제 수를 일정하게 증가시키는 등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
- 우수연구 지원계획 수립 시 지원 분야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3-2. 기초연구실 규모 확대에 따른 과제 선정 및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기초연구실 사업은 대학의 소규모 기초연구 그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79억 1,900만원(54.2%) 증가한 1,079억원을 편성
- 동 사업은 2009년 사업 착수 이후 매년 평균 18.2개의 신규과제를 선정해 왔고, 최근 3년간 신규과제 수도 40개 이하였으나 2020년 예산안에 150개의 신규과제를 편성

나. 분석의견

- 급격한 신규과제 수의 증가가 사업성과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지 않도록 과제 선정 및 성과 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33~42.

4

사업출연금으로의 예산과목 변경 신중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 사업출연금(350-02목)은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는 기존에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상당수(민간경상보조 22개, 민간위탁 11개)가 사업출연금 예산과목으로 변경

나. 분석의견

- 사업출연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예산집행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및 사업 수행 기관의 집행관리가 약화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출연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
 - 출연사업자는 개별 법률이나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종료 후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 의무가 없어 국회에서 출연금 예산의 실행 및 이월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가 어렵고, 사업비 정산절차와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 등이 완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43~46.

【개별 사업 분석】

1

R&D 예산 배분·조정 및 심의절차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주요R&D 예산안은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16.9조원)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2.7조원이 증액된 19.6조원 규모로 편성
 -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R&D 예산편성 결과에 대해 심의하면서 현행 R&D 예산 심의절차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

나. 분석의견

- R&D 예산에 대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이후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기술적 타당성과 전문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R&D 예산 배분·조정 및 편성 체계 개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47~50.

2

단기 신규 R&D 사업에 대한 중간평가 체계 검토 필요

가. 현 황

- 2020년 예산안에는 전체 신규 R&D 사업 201개 중 95개 사업의 사업기간이 4년 이내임
 - 4년 이내 단기 R&D 사업은 현행법 체계에서는 사업기간 내에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를 받지 않게 되어 있음

나. 분석의견

- 4년 이내의 신규사업도 사업기간 내 성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류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51~55.

3

과학기술분야 R&D 인력양성 사업의 체계적 개편 필요

가.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11개 세부사업에서 과학기술분야 R&D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1.3% 증가한 861억원을 편성
 -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에 따라 각 부처의 R&D 인력양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편하기로 하였으나, 타 부처와 달리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기존 체계대로 편성된 문제

나. 분석의견

- 과학기술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2020년도 R&D 투자방향에 부합하지 않게 편성되었으므로, 기존사업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개편한 후 신규사업 추진 시 이를 반영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56~60.

4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의 체계적 준비 필요

가. 현황

- 동 사업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가 공동으로 대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 체계를 시범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43억원을 편성(과기정통부 소관 예산)

나. 분석의견

- 시범사업 이후 2단계, 3단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추진 전에 예비타당성조사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시범사업 이후 의료정보의 활용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관련 법률 개정 추이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1~65.

5

달 탐사 사업의 총사업비 증액 규모 확정 및 사업 성공가능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550kg급 달 탐사선 제작 및 발사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달 탐사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03억원으로 전년대비 76.2% 감액 편성
 - 동 사업은 2018년 사업 추진 중 기술적 견해 차이 등으로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었으나, 과기정통부의 특별점검 이후 2019년 9월 사업계획을 변경함

나. 분석의견

- 달 탐사 사업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 규모를 조속히 확정하고, 사업 지연과 중단이 재발하기 않도록 객관적인 평가와 점검을 통해 사업목표와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일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66~70.

6

나노융합2020 사업후속관리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필요

가. 현 황

- 나노융합2020 사업은 나노기술을 보유한 공공기관과 사업화 아이디어를 보유한 수요기업을 연계한 사업화 R&D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종료예정이며 예산안은 63억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후속관리 내역사업(3억원)은 2021년에 집행되는 예산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감액 조정하고 2021년에 편성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1~72.

7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실적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 동 사업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활동과 지원단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원이 감액된 38억원을 편성
 - 동 사업의 일반수용비(회의체 운영, 홍보 등) 예산은 2017년 6억원 중 3억원을 불용하였고, 2018년 17억원 중 10억원을 불용하는 등 집행실적이 부진한 상황

나. 분석의견

-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의 일반수용비는 불용액과 집행가능규모를 고려하여 2020년도 예산안 규모 조정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3~76.

8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의 총사업비 관리 및 기존시설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 전문과학관 건립 사업은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역의 과학체험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을 선정하여 전문분야 과학관을 건설하는 사업
 - 2020년도 신규 내역사업으로 1개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건축사업이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설계 시부터 총사업비를 관리할 필요
- 기존의 BTL전문과학관지원 사업과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타 부처 및 민간의 유사시설 현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77~82.

9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 비목변경의 종합적 검토 필요

가. 현 황

-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방송통신 관련 주요 국제기구 의제 대응 및 협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8억원을 편성
 - 동 사업은 2019년도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통해 사업방식 변경을 권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으로 변경

나. 분석의견

- 국제기구 활동 지원체계 구축 사업은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비목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 KISDI에 대한 기관운영출연금으로의 변경은 부적절하며, 사업출연금으로 변경할 경우 보조금이 아닌 자체사업으로 변경하도록 한 보조사업 평가 결과와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3~85.

10

ICT기반 사회문제해결 기술개발 사업 면밀한 검토 필요

가. 현 황

- ICT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생활안심, 재난안전대응, 복지증진, 도시·환경문제 개선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을 실시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60억 3,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여러 부처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설계 차별화 필요
 - 2018년 기준 15개 부처, 총 111개(세부사업 기준)의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사업이 실시되고 있으며, 해당 R&D 사업들도 최근에는 다양한 ICT기술을 활용
- 사업비 및 국비투입 규모, 기존 사회문제해결 R&D사업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86~92.

11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필요 등

가. 현 황

- 광주지역 주력산업과 인공지능기술 융합을 위해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 단지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융합 기술개발 및 창업 기반 조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R&D사업 66억 6,800만원, 비R&D사업 359억 2,800만원

나. 분석의견

- 연구 인프라 등 조성 시기를 감안하여 연차별 R&D과제 및 창업·사업화 지원 추진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고, 비R&D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여부를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93~97.

12

5G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사업 편성절차 미흡, 수요처 확보 방안 필요

가. 현 황

- 5G기반 장비·단말부품 및 디바이스 사업은 5G장비 및 단말기 등에 필요한 핵심부품 및 디바이스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102억 9,600만원

나. 분석의견

- 이 사업은 사전 기획연구가 완료되지 않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충분한 검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국산화 기술개발 결과물에 대한 수요처가 부족한 경우 예산투입 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수요처 확보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98~101.

13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 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필요

가. 현 황

- 데이터 바우처 사업은 각종 자료·정보 수집 및 활용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를 지원하여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6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19년 데이터 바우처 신청 경쟁률이 평균 1.7대 1로, 지원 수요가 많지 않은 상황이므로, 바우처 수율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데이터 판매 및 가공업체의 제품·서비스 가격과 실적 등의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고, 바우처 사용에 관한 수요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을 높일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02~105.

14

버스 와이파이 신규 구축 물량 추가 신중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 버스 와이파이 확대구축 사업은 전국 시내버스에 무료 와이파이를 구축하여 버스 이용객의 통신비 절감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33억 5,000만원

나. 분석의견

-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버스 와이파이 데이터 이용실적 등을 고려할 때 와이파이 구축물량을 추가하는 것은 신중히 결정할 필요
 - 당초 24,000대에서 5,100대를 추가하여 와이파이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나,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 정부지원의 재검토가 요구된다는 등의 이유로 ‘미흡’ 평가
- 데이터 사용량 등 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설정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06~110.

15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대상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 교육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 사업은 고등학생(교육급여 수급가구 우선 지원)이 EBS제공 콘텐츠에 사용하는 데이터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48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잔여 예산의 규모에 따라 하반기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보다 지원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 후 그에 따라 예산규모를 결정할 필요
 - 현행과 같이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대상을 변경하기보다 지원대상 범위를 저소득층으로 한정할지, 아니면 가입을 원하는 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할지 명확히 한 후 그에 따라 예산규모 결정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1~113.

16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 방송통신발전기금 기금관리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징수·운용·관리 등 기금 운용업무와 기금사업 관리·평가·성과관리 등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19억 5,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방송통신발전기금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위탁받아 운용·관리하고 있음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외업무여비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예산 제외 필요
 - 기금관리비에는 민간위탁금 외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반수용비, 국외업무여비, 사업추진비 등이 편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4~116.

17 정진기금의 ICT연구개발전담기관운영비 등 지원근거 미흡

가. 현 황

- 정보통신진흥기금에는 ICT연구개발전담기관 인건비 116억 7,000만원과 운영비 70억 1,400만원, ICT산업진흥기관 운영비 40억 9,200만원이 각각 편성

나. 분석의견

-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ICT연구개발전담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ICT산업진흥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할 필요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기금의 용도 등)에는 ICT연구개발전담기관과 ICT산업진흥기관의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7~118.

18 우편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우편에 관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별도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설치된 특별회계로, 2020년도 전체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전년대비 2,823억 1,800만원(5.7%)이 감소한 4조 6,374억 3,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수납 또는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부 세입과목 및 세출 사업의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
 - 세입예산안 중 우편사업수입과 전년도이월금, 기금예탁이자수입, 세출예산안 중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사업이 과다 계상된 것으로 보임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19~121.

19

사업비 이자반납액 세입처리 위한 기타재산수입 편성 필요

가. 현황

- 기타경상이전수입은 국고보조금과 출연금 등 사업비, 급여 등을 회계연도가 경과한 이후에 정산 및 반납하는 경우 세입처리하는 과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기타경상이전수입 예산안은 635억 1,600만원

나. 분석의견

- 사업자의 이자수입 반납액을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한 것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타재산수입으로 세입 처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기타재산수입 예산안을 편성할 필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이자수입 반납액을 기타경상이전수입으로 처리하여 왔으며, 그 금액(일반회계 기준)은 2019년 9월말 기준 37억 2,400만원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22~123.

II 방송통신위원회

【개별 사업 분석】

1 국악방송지원 사업의 보조금사업 평가결과 반영 및 성과지표 개선 필요

가. 현 황

- 국악방송지원 사업은 국악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를 위해 국악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0억원이 증액된 67억원을 편성
 - 동 사업은 2019년도 보조금사업 연장평가 결과 ‘감축’ 의견을 받았으나, 증액 편성

나. 분석의견

-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여 평가와 예산 간 연계·환류를 강화할 필요
- 성과지표 중 프로그램 제작실적은 투입지표로 창출된 성과 측정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33~136.

2 유료방송 이용자 권익보호 기반조성 사업의 신설 불필요

가. 현 황

- 유료방송 시장의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500만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유료방송 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은 기존사업인 불공정행위 행태개선 사업에서도 수행 중으로 별도 신규사업 신설 재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37~140.

3

공동체라디오방송 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로 추진 필요

가. 현 황

-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2억원을 편성
 - 「방송법 시행령」제13조2에는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재원은 기부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방송광고수입금, 협찬고지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하도록 규정

나. 분석의견

- 방송 권역이 소규모인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41~143.

4

지역맞춤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식 필요

가. 현 황

- 소상공인의 방송광고 제작을 지원하고, 이를 지역·중소 방송광고 매체와 연계하여 송출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규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16억원을 편성
 - 국내 광고시장은 방송광고 중심에서 유료방송·온라인 광고 중심으로 다각화되고, 지역방송사의 매출액도 광고수입 중심에서 재송산·프로그램 제공·협찬수입 등으로 다변화
 - 동 사업의 성과지표는 ‘지원받은 소상공인과 지역방송의 만족도’로 설정

나. 분석의견

- 국내 매체별 광고시장 흐름 등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을 통한 지역·중소방송사 발전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지원자의 만족도로 구성된 성과지표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44~147.

5

교육훈련기관 파견 공무원의 시간외수당 편성 부적절

가. 현 황

- 방송통신위원회는 본부인건비(총액대상) 사업 예산안에 1개월 이상 장기 교육 훈련 파견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1,200만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1개월 이상 장기 교육훈련 파견 공무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불가하므로, 해당 예산안은 감액 조정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48~149.

III 원자력안전위원회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 환경방사능 감시망 확충 강화 필요

가. 현 황

- 동 사업은 국내·인접국 원전 사고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전국 생활주변에 환경 방사능감시 체계를 확충하는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 13억원을 편성
 - 중국 원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서·남해안 중심 대기감시망을 추가 설치(23개소)하고, 해양기상부이에 대기·해수 감시망(2개소)을 구축하는 예산으로 구성

나. 분석의견

- 예산안 편성 이후 일본의 방사능 해수 유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양시료 감시핵종 확대 및 해양기상부이 대기·해수 감시망 추가 구축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58~162.

2 방사선안전기반조성 사업의 면허자 보수교육 수행방식 적절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면허자 보수교육을 한국원자력안전재단, 한국원자력아카데미, 한국방사선진흥협회, 한국원자력연구원의 4개 기관을 통해 실시 중

나. 분석의견

- 방사선 면허자 보수교육을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훈련의 효율성과 교육대상자의 편의성 측면에서 수행방식의 적절성을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63~170.

3

원자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 증대에 따른 활용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자체수입 증가에 따라 여유자금 규모가 2016년말 148억원에서 2020년말 1,18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자체수입은 원자력관계사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법정부담금, 민간출연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으로 구성

나. 분석의견

- 원자력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금의 용도에 맞는 여유자금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71~174.

4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과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 간 연계 추진 검토 필요

가. 현 황

-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은 대학에 원자력안전규제 관련 강의 개설 및 교육 인프라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 10억원을 편성
 - 이와 별도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운영지원 사업에서 후발국가의 원자력방사선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09년부터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을 지원 중

나. 분석의견

- 신규사업인 원자력안전 사전실습 교육강화 사업과 기존사업인 국제원자력안전 석사과정은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등을 상호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pp.175~178.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I

외교부

【주요 현안 분석】

1

전략사업비 사업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전략사업비는 정상회담 및 고위급 차원의 약속사업 등을 fast-track으로 진행할 수 있게 별도의 총액을 확정하고 해당 사업이 있을 경우 수시배정 절차를 통해 집행하는 ODA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0% 증가한 60억원

나. 분석의견

-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측면에서 전략사업비 편성의 타당성 재검토 필요
 - 사업의 목적과 용도 명시하지 않은 예산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어려우며, 사전검토의 미흡으로 집행과정에서 사업취소·변경 과다 반복적 발생
 - 신속한 정상외교 후속조치 필요성 측면에서 실제 일반 ODA예산편성 절차 따른 사업과 사업착수 소요기간에 차이 크지 않음
 - 긴급구호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필요성 측면에서 기 편성된 해외긴급구호지원 예산을 통해 지원 가능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8~13.

2

지역별 원조사업(ODA)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적정예산편성 및 사업관리 강화 필요

2-1.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 지역별 원조사업(ODA)은 30개 세부사업에 3,096억 6,100만원 편성, 집행률이 1% 미만으로 사업 집행이 매우 부진한 47개 사업(23.9%) 모두 최초계획에 따른 연차별 소요액 편성

나. 분석의견

- 집행실적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2020년도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업은 원인분석에 근거한 대응방안 마련 및 예산 조정 필요

2-2. 신북방·신남방지역 사업포트폴리오의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외교부는 ‘ODA를 활용한 정책시너지 효과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신남방(전년 대비 29% 증가, 1,122억 3,600만원)·신북방(전년대비 73% 증가, 278억 8,300만원) 지역 원조예산규모 확대

나. 분석의견

- 신북방·신남방지역에 국가협력전략(CPS)이 수립되지 않은 비중점국가 지원 예산이 확대 및 순증되어 면밀한 사전검토 및 실행가능성을 감안한 예산조정 고려 필요

2-3. 사업관리 강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지역별 ODA사업 중 2019년 종료예정이었으나 당해년도 계획변경에 의한 사업연장으로 추진되는 사업 총 31건, 2020년 사업종료 예정사업 중 추가 연장된 사업 14건,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이 24건이며 2020년도 종료예정인 ODA사업의 37.3%가 공정률 50% 미만으로 2020년도에 기간 연장될 가능성 농후

나. 분석의견

- 지역별 원조사업이 착수 후 장기간 방치, 표류하지 않도록 사업별 적정 공정률 관리를 강화하고, 실질적 중간평가 및 환류를 통한 사업관리 내실화 노력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4~27.

3

아세안 및 동남아시아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내역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3-1. 대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의 예산편성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내역사업인 동남아국가 파트너십 강화사업은 동남아 국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해 정세파악 및 다각적 분석을 통한 대 동남아 외교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대베트남 교류협력을 위한 여비 및 연구용역비와 명예영사 보조금으로만 구성되어, 별도 내역사업으로 구성할 실익이 없으므로 한·동남아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등 기존 사업을 통해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3-2. 신남방 외교강화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신남방 외교강화사업은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현지에서의 정책홍보 강화 등을 목적으로 편성된 사업으로 예산안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8억 5,000만원

나. 분석의견

- 신남방외교강화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부족하고, 중장기 전략이 미흡한 상태에서 일회성 행사 위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예산안 심사시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8~38.

【개별 사업 분석】

1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의 실효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은 다양한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해외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여 사건·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내역 사업으로 2020년 예산은 재외국민보호제도 인지도 제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12억 5,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해외안전의식 제고사업은 홍보예산 증액을 통한 인지도 제고 노력에 앞서 외교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만족도 및 재사용의사 저조문제의 원인분석에 근거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실효성 제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39~41.

2

선진문화국가 이미지제도사업의 신규내역사업 필요성 검토 등

2-1. 한스타일 공간연출 신규내역사업의 검토 필요

가. 현 황

-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한류문화 홍보공간 및 문화외교의 장으로 활용한다는 목적 하에 전라북도의 ‘재외공관 한스타일 연출사업’을 지원하는 한스타일 공간연출 신규내역사업에 3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한스타일 공간연출사업은 기존 사업의 활용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계획 대비 소요예산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검토 필요

2-2. 전략적 문화교류증진사업 글로벌 문화교류사업과 통합·연계 필요

가. 현 황

- 전략적 문화교류증진사업은 우리와 교류가 상대적으로 미진하거나 외교관계 증진이 필요한 국가들의 문화를 우리 국민들에게 소개하여 외교관계 강화기반 구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전략적 문화교류 증진사업은 국제교류재단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문화교류 사업과 사업목적 및 내용에 있어 유사하므로 통합·연계 등 사업정비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46~48.

3

효율적인 대미 정책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체계 정비 필요

가. 현 황

- 외교부는 대미외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 중임
 - 국제교류재단의 한미미래비전 네트워크사업은 한미 동맹관계 발전 등을 위한 대미 정책공공외교 사업 수행, 예산액은 전년대비 115.1% 증가한 57억 4,400만원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 관계강화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동맹기반 강화사업에서 네트워크강화사업 등을 위해 전년대비 49.3% 증가한 36억 700만원 편성
 - 공공외교 역량강화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대미 정책공공외교 그랜드 디자인 사업에도 대미 우호지지기반 구축 등을 위한 예산 3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대미 정책공공외교 관련 사업은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사업들 간 통합·연계를 통한 실효성 제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49~52.

4

한·중 기업교류 강화사업 기존사업들과의 통합·연계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 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활동을 지원 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6% 증가한 44억 7,200만원이며, 증가액 25억 7,700만원 중 25억 2,200만원은 신설된 한·중 기업교류 강화 내역 사업 예산액

나. 분석의견

- 한·중 기업교류 강화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모호한 상태에서 일회성 행사 위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에 외교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활용하여 추진 가능한 사업들이므로 예산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53~56.

5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 예산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외교센터(12층, 27,122㎡)의 새로운 사용계획에 따른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사비 91억 1,400만원 편성(공사기간 약 6개월)

나. 분석의견

-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은 공사비 예산이 중기사업계획 심의 결과보다 3배 이상 증액된 사유가 불명확하며 인테리어 공사비 소요계상 근거가 미흡하므로 적정소요의 재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57~59.

6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액 미편성 문제

가. 현황

- 재외공관 국유화 원금상환사업은 재외공관 청사·관저의 국유화 사업을 위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에 원금상환액은 편성되지 않고 이자상환액 4억 4,800만원만 편성
 - 이전 차입금 중 미상환 원금잔액과 해당 이자에 대해 상환 중이며 2020년에는 원금 약 69억 4,506만원과 이자액 약 3억 9533만원 상환 필요

나. 분석의견

- 외교부 예산안에 국고채무부담행위 차입자금의 원금상환을 위한 소요예산이 미편성되어 연체에 따른 불필요한 이자지출 발생 우려
 - 약정된 원금 미상환시 연체이율에 따른 차차년도 예산 추가소요 발생, 국가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 제반문제 고려하여 해결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60~62.

7

인도적 지원(ODA)의 사업방식 개선 필요

가. 현황

- 인도적 지원사업은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에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액은 전년대비 16.5% 증가한 1,003억 4,300만원

나. 분석의견

- 재난에 대한 긴급구호가 상황별 대응방식 운영되고 있으므로, 중·장기 지원 전략에 근거한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국 선정을 위한 심의과정과 의사결정 절차의 투명성 제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63~66.

8

영사콜센터 리모델링 공사 예산의 적정성 검토 및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으로 통합 필요

가. 현 황

- 외교센터의 9층 입주예정인 영사콜센터의 외교센터 인테리어 설계 및 상담실 인테리어, 시설공사비가 포함된 예산 9억 3,000만원 재외국민 보호사업의 내역사업으로 별도 편성

나. 분석의견

- 영사콜센터 상담실 리모델링 사업은 외교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사비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므로 적정예산에 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67~68.

II

통일부

【주요 현안 분석】

1

남북협력기금의 자원 운용 문제 검토 등

1-1.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실질적인 국회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지출계획안에는 경협기반(무상) 사업의 기타경제협력 사업(비공개) 및 경협기반(유자) 사업의 편성내역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나. 분석의견

-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두 사업에 대한 편성내역 제출 필요
 - 두 사업에 편성된 계획안 규모가 전체 사업비 1조 2,176억 3,600만원의 38.4%에 달하는 규모이고, 전년 대비 500억원(12.0%) 증액된 가운데 사업별로 대규모 증감 조정이 이루어진 상황임

1-2. 남북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재원 운용의 문제

가. 현 황

- 2020년도 남북협력기금 수입계획안의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00% 증액된 2,000억원으로, 이 중 남북협력기금 사업비 충당을 위한 부분은 1,368억원

나. 분석의견

- 통일부는 명확한 사업 소요의 발생 등 집행여건과 여유자금 조달 가능성 등 제반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일반회계 전입을 적정한 규모로 실시함으로써 일반회계 전입재원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일반회계 전입이 명확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금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려는 본래 취지와 달리 여유자금 적립을 위한 방편으로 전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81~92.

【개별 사업 분석】

1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 예산안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 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내역사업인 통일대비 정책 개발 및 법제 체계화 추진 사업에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 예산으로 2억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

나. 분석의견

- 신한반도체제 구상 추진 사업의 국민과의 대화 및 전문가정책연구용역은 통일 정책 관련 사회적 합의 형성 사업의 통일국민협약 사회적 대화 추진 및 정책 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하여 추진할 수 있으므로 관련 예산안의 조정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93~96.

2 북한인권재단 기관운영출연금 편성 필요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8억원
 - 동 예산안은 기관운영출연금으로, 재단사무실 설치비 4억원, 재단사무실 임대보증금 3억원과 2개월분 임대·관리비 1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북한인권재단 출연금은 재단설립 절차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경우 예비비 편성을 통하여 조달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재단사무실 임대보증금 등 일부 소요를 반영한 기관운영출연금을 본예산에 미리 편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정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97~98.

3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의 정규조직화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개성공단 운영 제도화 사업 예산안은 전년 대비 0.4% 증액된 2억 7,500만원으로, 동 사업에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운영 예산안 2억 9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은 15년 이상 존속하고 있어 사실상 정규조직이므로, 직제 반영을 통한 정규조직화 검토 필요
 - 2004년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최초 설립 이후 한시조직 성격의 직제를 개정하여 조직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거나, 부서 명칭만을 변경하여 기존 조직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형식으로 동 조직을 운영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99~101.

4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을 통한 신진연구자 지원 개선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정책연구개발(R&D) 사업 예산안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9,000만원으로, 통일부는 동 사업에 편성된 연구개발비의 일정액을 신진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할당하는 방식(5개 과제, 과제당 1,000만원)으로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 수행

나. 분석의견

- 정책연구개발(R&D) 사업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일부를 일률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특정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신진연구자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정책연구개발(R&D)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신진연구자 지원 방식 개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02~105.

5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건립비용 편성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계획안은 전년 대비 5.5% 증액된 115억 9,000만원으로, 동 사업에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계획안 101억 1,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은 DMZ 관련 사업의 추진체계상 기존의 종합계획을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에 부합하도록 조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건립비용 계획안 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필요
 - DMZ 관련 사업은 2018년도 이후 기능별 편제가 변경되고 있음. 또한, 2020년도에 편성된 계획액은 종합계획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 600억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2019년도에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편성된 계획액 31억 9,000만원을 자치단체보조(330-03목)으로 전용하여 DMZ 평화의 길 조성 사업을 추진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06~109.

6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보험금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 계획안은 전년 대비 50.0% 감액된 47억 5,000만원

나. 분석의견

- 경제교류협력보험 사업에 편성된 보험금은 2020년도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 집행요건 상 다른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에 비하여 2020년도 집행가능성이 낮고, 계획안 산출 시 적용한 수령기업 비율(2.84%)의 합리적인 근거가 불분명한 가운데 계획안 규모가 편성의 실익이 크지 않아 보이며, 보험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확정되어야 하는 등 제도의 시행에 관련된 제반 사항도 불확실한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10~112.

7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대출금 계획안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 2020년도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 계획안은 전년 대비 15.8% 감액된 200억원
 - 교역자금 대출 40억 3,800만원, 경협자금 대출 80억 7,500만원, 광업협력 대출 56억 5,300만원, 국제협력 대출 22억 3,400만원

나. 분석의견

- 경제교류협력대출 사업에 편성된 대출금 계획안은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사업과 관련성 있는 교역자금 및 경협자금 대출금 항목을 중심으로 조정 검토 필요
 - 향후 북한 비핵화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호전되는 등 집행여건이 조성되는 경우에도 남북 간 경제교류협력 사업은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시작으로 재개되어 그 경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큼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13~115.

III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성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3월부터 홈페이지 상에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며, 이후 2019년 8월 말까지 총 186건의 건의만이 온라인상에 게재되어 월 평균 6건 수준의 매우 저조한 활용도를 보이고 있음

나. 분석의견

- 자문위원 온라인 통일정책 건의 시스템의 활용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하여 부적절하므로, 동 시스템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22~124.

2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실의 사용허가 후 운영 필요

가. 현 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총 246곳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는데, 이 중 39곳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2019년 8월 말 기준 해당 행정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음

나. 분석의견

- 사용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입주하고 있는 지역회의·지역협의회사무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25~127.

제8장

국방위원회

I

국방부

【주요 현안 분석】

1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전 부처 재정소요 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 두 번째 해인 2020년 병 인건비 사업의 예산안을 전년 대비 4,045억 1,600만원(23.9%) 증가한 2조 964억 7,900만원으로 편성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6월 26일 2018년 병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인상(병장 기준 21만 6,000원 → 40만 5,700원)하고, 이후 2020년에는 40% 수준, 2022년에는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병 봉급 인상 계획을 발표
 - 2017년 최저임금(7,530원)을 적용하는 경우 병 봉급은 병장 기준 2020년에 54만 900원, 2022년에 67만 6,115원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재정소요를 병에 국한하지 않고 전 부처 차원에서 파악하여 관리할 필요
- 병 봉급 인상에 따라 병 급여 중 특수업무수당의 비중이 감소하게 되어 격오지 근무에 대한 보상이 상대적으로 악화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병 급여 중 특수업무수당은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함정근무수당, 항공수당으로 구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43~146.

2

부서관 역량강화 목적 신규 내역사업의 적정성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국방부는 부대자체교육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육군 부서관 혁신과제 교육 지원 사업과 해군 부서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을 편성
 - 육군 부서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2억 2,600만원이고, 해군 부서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6,700만원

나. 분석의견

- 국방부가 부서관의 전투역량강화를 위해서 2020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모두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서관 보수교육 프로그램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각 소속부대에서 기본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의무교육사항의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동 사업들의 신규 예산 편성은 부적절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부서관 보수교육 과정을 보완·강화하고 각 부대의 전입 장병에 대한 교육훈련체계를 재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함으로써 부서관의 전투역량강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
- 육군 부서관 혁신과제 교육지원 사업과 해군 부서관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이 계획하고 있는 교육내용은 소규모 특기의 직무 보수교육이라기보다는 육군 부서관학교 및 병과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내용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부대자체교육 세부사업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부적절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47~151.

【개별 사업 분석】

1

육군 재난안전망 기반 하 첨단 ICT 구축 추진 사업의 사업명 변경, 계획 보완 및 사전연구 수행 후 추진 필요

가. 현 황

- 동 사업은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의 2020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재난안전 통신망을 기반으로 첨단 ICT 기술을 부대관리, 경계작전 등에 도입하는 5개년 사업(총사업비 299억 9,300만원, 사업기간 2020~2024년)
 - 2020년 예산안은 1개 연대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자산취득비 25억 4,800만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부적절하므로, 사업내용을 분리 하고 사업명을 변경하는 등 명확성을 제고할 필요
- 동 사업은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보완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성에 대한 사전 연구를 실시한 후 추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52~155.

2

기존 사업의 집행부진을 고려한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동 사업은 「국방개혁 2.0」 부대개편 추진 계획에 따라 2020년부터 시작되는 39개 부대 구조개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기 위한 4개년 사업
 - 총 사업비는 6,539억 5,100만원이며, 2020년 예산안은 106억 5,900만원

나. 분석의견

- 육군 부대개편 5차 사업은 과거 육군 부대개편 1·2·3차 사업이 신규로 반영된 첫해에 집행 실적이 부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56~159.

3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결 필요 등

가. 현황

- 육군3사 합동교육 실시 사업은 육군3사관학교 생도와 타 사관생도의 합동교육을 통해 타군 이해, 합동작전 필요성 인식, 인적네트워크 형성 등 합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1억 7,100만원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사관학교 합동교육 및 육군3사관학교 합동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학군 및 학사장교 등 다른 간부양성과정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친선의 밤 만찬 행사 등을 위한 예산을 기타운영비로 편성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해당 예산의 비목을 조정하여 편성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60~162.

4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재검토 필요

가. 현황

- 동 사업은 정훈문화활동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디지털 정신전력 교재를 제작하여 장병주간정신전력 교육에 활용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3억 8,700만원

나. 분석의견

- 국방부는 장병 주도형 맞춤형 디지털 교재 제작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에 대해 철저히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63~166.

5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 추진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동 사업은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면접 체계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AI기반의 면접기법 시범적용을 위한 체계 사용료 지급을 위한 일반수용비(210-01목) 6억 1,6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AI 기반의 면접체계 활용 사업은 온라인 면접의 특성상 충분한 지원자 검증이 제한된다는 점, 면접 결과의 객관성 담보가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67~170.

6

신증후군출혈열 백신 확대 보급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국방부는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의 확대 보급을 위해 2020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91억 4,900만원 증액된 95억 2,500만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특정 지역 중심의 접종대상 확대만을 골자로 하는 신증후군출혈열 백신확대 보급 사업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배분의 관점에서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백신 확대 보급에 앞서 체계적인 접종대상 선정 기준 설정 및 발병자 식별·상급병원 후송체계 보완 등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기울일 필요
-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한 강화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 본부의 국가예방접종 체계 하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71~174.

7

화력장비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 해소 필요

가. 현 황

- 화력장비 사업은 EOD 로봇, 활주로 폭발물 원격제거장치 등 폭발물처리반장비와 쌍안경, 나침반 등 관측 및 방향유지 장비를 획득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7% 증액된 425억 9,100만원

나. 분석의견

- 화력장비 사업은 연례적인 집행부진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향후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주의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75~179.

8

의무장비획득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 의무장비획득 사업은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진단, 검사 및 치료 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7% 증가한 413억 2,700만원

나. 분석의견

- 의무장비획득 사업은 연례적으로 큰 규모의 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계획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사례가 일부 나타나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방부는 향후 철저한 집행관리를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80~184.

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 규모 최소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의 2019년 말까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상 누적액은 4조 343억원으로 전망되며, 2018년까지 8,792억원이 상환되었고, 잔여 예수금은 2019년 994억원, 2020년 2,884억원 등 예수금 7년 거치 후 원금 상환 원칙에 따라 상환이 예정

나. 분석의견

- 2020년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중 2,295억 6,800만원은 만기가 도래하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활용될 예정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면밀한 토지 매각계획 수립을 통한 자체수입 확보를 바탕으로 공자기금예수금을 최소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85~187.

10

평택기지이전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평택기지이전사업은 용산 9개 기지 및 LPP 4개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2,683억 1,600만원

나. 분석의견

- 평택기지이전사업은 연례적인 사업 지연으로 인해 상당한 규모의 예산 이월 액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88~190.

11

환경치유기준 합의 방안의 조속한 마련 필요

가. 현황

- 환경조사 및 치유 사업은 주한미군 반환 및 공여지에 대한 환경오염을 조사하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1.4% 증가한 216억 7,900만원

나. 분석의견

- 환경치유기준(KISE)에 대한 한·미 양측 간 이견으로 주한미군기지 반환 협상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반환협상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환경치유기준에 대한 합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91~193.

12

학자금대부 수요 감소에 따른 계정 존치 여부 검토 필요

가. 현황

- 군인복지기금 학자금대부계정의 지출은 군인 본인 및 자녀에 대한 대학 학자금 대부를 위한 것으로, 학자금 대부, 일반회계전출금,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등 총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41억 2,300만원(△16.7%) 감소한 703억 600만원

나. 분석의견

- 군인복지기금 학자금대부 사업은 학자금대부계정의 핵심 사업임에도 학자금 대부 수요 감소에 따라 사업비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자금대부 계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94~196.

13 수당 성격의 항공전력강화비 등 지급 부적절 등

가. 현 황

- 항공전력강화비 및 조종전문형관리비는 숙련된 전투조종사의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항공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종사에게 지급하는 포상금(310-03목)으로, 2020년 예산안에는 지상방위 기본경비, 해상방위 기본경비, 항공방위 기본경비 사업에 전년과 동일한 총 11억 4,6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포상금(310-03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항공전력강화비 및 조종전문형관리비를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동 예산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 시정조치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97~198.

14 육아휴직수당 예산의 정확한 편성 노력 강화 필요

가. 현 황

- 2020년 육아휴직수당 예산은 장교인건비 사업에 전년 대비 60.0% 증가한 60억 3,600만원이, 부서관인건비 사업에 전년 대비 72.6% 증가한 88억 5,600만원이 편성되어 총 148억 9,200만원

나. 분석의견

- 연례적인 육아휴직수당 예산 부족 및 상당 규모의 조정액 발생 문제 해소를 위해 국방부는 육아휴직계획 사전 조사 등 정확한 육아휴직자 추계 및 육아휴직수당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199~202.

II

방위사업청

(비공개)

III

병무청

1

모병면접장 예산 증액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병무청은 2020년 모병면접장 비품, 별관 사무실 집기류 등 자산취득비를 전년 대비 9,200만원 증액된 9,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병무청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상시 운용하고자 하는 체험형 장비는 필요성 및 시급성, 현역병 모집 사업 목적과의 관련성 등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장비 구입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62~264.

2

병역명문가 지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가. 현 황

-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자율적 병역이행의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마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500만원 증액된 3억 3,900만원

나. 분석의견

- 병역명문가 선양 사업은 확대 추진되고 있으나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범위에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병무청은 이를 시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65~268.

3

적정 수준의 연가보상비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병무청은 인건비 사업 예산으로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0년 연가보상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6% 감소한 15억 3,300만원

나. 분석의견

- 병무청이 편성한 2020년 연가보상비 예산안은 과거 집행수준 및 연가사용 확대 기조를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연가보상비 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소관)」, pp.269~270.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지방교부세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1-1.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자체노력 항목 관련 문제점

가. 현 황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요 자체노력의 경우 7개 항목에 인센티브 1조 927억원, 페널티 1조 5,973억원, 총 5,046억원의 기준재정수입액 순증가효과 발생

나. 분석의견

- 지출감소 유도 및 효율적인 지출을 위한 수요 자체노력 분야에 신설된 일자리 창출 지원 지표는 동 분야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영 지표는 인건비 절감 지표와 상충

1-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세율 인상 관련 고려사항

가. 현 황

- 소방안전교부세의 2020년 예산안은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20% → 45%)에 따라 전년대비 2,9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8,287억 7,2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정부는 소방직국가직화 및 이에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 등 관련 법률 개정, 각 지방자치단체별 적절한 배분 기준 마련 등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에 따른 후속 절차를 원활하게 수행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5~15.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사업성과에 기반한 사업규모 확대 등

가. 현 황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는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743억 4,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지역경제활성화 및 소상공인 진흥과 관련된 면밀한 성과검증에 기반하지 않은 동 사업의 규모 확대
 - 예비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 예산을 포함하면 2018년 100억원 → 2019년 884억원 → 2020년 1,203억원 지원예정
- 동 사업은 사업예산(지자체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를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각 재원의 사업추진절차가 상이하고, 특별교부세의 경우 연도 중 지원규모의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부적절
- 동 사업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보조사업 예산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실집행 정산을 수행 예정이지만, 보조금이 완전히 집행되는 시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실집행 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6~23.

3

지방자치단체 공통 이용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 행정안전부는 2020년에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지방세정보시스템(위택스),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차세대 시스템으로 신규 또는 계속사업으로 개발 예정
 - 2020년 예산안에는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10억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224억 9,300만원,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10억원이 각각 편성

나. 분석의견

- 지방자치단체 공통이용 시스템의 경우 시스템별로 국비 분담 비율의 격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지원 기준 마련 필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비용의 국비 분담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차세대 표준인사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국비	3,000	48,200	3,000
지방비	26,721	112,627	28,510
합계	29,721	160,827	31,510
국비분담 비율(%)	10.0	30.0	9.5

자료: 행정안전부

-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차세대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 활용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특별시는 자체적으로 제작한 정보시스템을 운용한다는 사유로 제외되어 있는 바 국민 편의의 관점에서 서울특별시도 새롭게 구축되는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공통활용 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노력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24~28.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관련 법률 개정 필요 등

가. 현황

- 공공자원 개방·공유 관리시스템 운영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자원 개방·공유 제도의 효율적 운영 및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지원 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7억 8,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 달리 국유재산의 경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무상 대부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상황으로 관련 법률의 제·개정 필요
-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공공자원을 개방·공유하게 되면 장·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 정보소외계층의 공공자원 이용이 제약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29~33.

2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관련 개인정보의 무분별한 활용 방지 필요

가. 현황

-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 사업은 정보주체인 국민이 보다 능동적으로 정보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53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시스템 구축으로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유통가능할 경우 민간기관의 개인정보 무분별한 활용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34~37.

3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의 기존 사업과 차별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인구감소 지자체 지원 사업은 인구감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단체의 특성 및 현장 수요에 따라 청년지원사업,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주민참여 지역문제해결 확산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1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기존에 추진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같은 세부사업의 다른 내역사업인 지방소멸대응 사업과 사업 목적 및 내용이 유사한 측면이 있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별화된 운영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38~41.

4

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사업의 충분한 검증을 통한 사업 확대 필요

가. 현 황

- 업무용PC 개방형 운영체제(OS) 도입 사업은 공개 소프트웨어인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개방형 운영체제를 공공기관 인터넷망 PC에 적용하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정보자원관리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3억 9,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시범사업을 통해 개방형 운영체제의 보안성 및 호환성을 충분히 검증할 필요가 있고, 전 부처 확산은 해당 운영체제의 민간 활용이 활성화 된 이후 추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42~45.

5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확산 모델을 확정하여 예산안
편성 필요**

가. 현 황

-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모델 확산 사업은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사업에서 개발된 공공서비스 모델을 다른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촉진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은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은 13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행정안전부는 동 사업의 확산 대상 사업을 확정된 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의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산 대상 공공서비스 모델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절차 개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46~48.

6

**공직선거 추진 사업의 지자체 교부 예산을 보조사업 형태로 편성
필요**

가. 현 황

- 공직선거 추진 사업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법정사무 중 선거권자 명부작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직선거관리 및 지방의회역량강화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78억 6,700만원이 증액된 82억 5,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예산을 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에 해당하는 비목으로 편성하고 있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편성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49~51.

7

연료운반선 건조기간에 따른 연도별 사업비 분할 편성 필요

가. 현 황

-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은 연료운반선 건조를 지원하여 섬 주민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연료운반선 건조는 지방자치단체 집행에 2년이 소요됨으로 보조예산을 2년에 걸쳐 분할 편성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52~54.

8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

가. 현 황

- 재난안전사업평가 사업은 재난안전사업 평가 및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2억 5,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을 통해 운용하는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 결과, 투자축소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 중 일부는 2020년 예산 자연감소분이 예정된 사업이나 종료 사업 등이 선정되고 있어, 사전협의 제도의 취지를 반감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55~58.

9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의 공개 근거 법령 개정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가. 현 황

- 국가안전정보 통합 공개시스템 구축 사업은 대형사고 및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건축물 정보, 소방시설 점검 결과 등 안전점검 결과를 건축물 단위로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16억 9,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구축 예정인 DB 및 시스템의 공개 관련 법률 근거는 갖추어졌지만 2021년 및 2022년에 구축되어 공개될 정보의 법률 근거는 대부분 미비한 상태로 해당 정보의 법률근거 마련을 위해 소관 부처 등과 적극적 협력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59~63.

10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의 지원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노후 유도선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은 20년 이상 노후 선령의 대체건조를 위한 대부자금 이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가안전대진단 및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1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과 유사한 해양수산부의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 사업이 사업초기에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기피로 불용액이 컸다는 점을 고려하여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64~68.

11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기술 개발 사업의 현장 활용성 고려 필요

가. 현 황

- 폭염 등 기후재난 대응기술 개발 사업은 폭염 등 기후재난에 의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연구개발 사업(R&D)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12억 4,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연구과제 중 ‘도심 환경을 고려한 폭염 저감 기술 최적화’ 사업은 폭염 저감 기술의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한 평가기술 개발사업인데 폭염 저감 기술은 공간 별로 설치 가능한 기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한 공간에 복수적용이 가능한 기술들에 대한 평가 기술 위주의 개발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69~72.

12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 장기적으로 전 국가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융합망 구축·운영 필요

가. 현 황

- 국가융합망 구축 및 운영 사업은 각 기관별로 운용중인 개별통신망을 통합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90억 9,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일부 기관의 경우 국가융합망 수용 계획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행정안전부는 장기적인 수용 계획을 마련하여 전체 국가기관의 통합망으로 국가융합망이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73~76.

13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ODA)의 수원국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가. 현 황

- 재난안전 신기술 해외보급 사업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분야 기술 이전 및 교육을 추진하는 공적개발원조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억 700만원이 감액된 1억 2,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라오스에 대한 ODA 사업의 경우 수원국의 사전 절차 이행 지연으로 인해 ODA 사업 예산 전액이 반영되지 못하여 2020년 사업 추진이 어려운바 향후 사업 추진 시 수원국의 사전 절차 이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77~80.

14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간 지원방식 통일 필요

가. 현 황

-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사업은 과거 국가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전문적 치유센터를 조성·운영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9억 4,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에서 지원하는 광주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에 대한 지원 방식이 보조사업(광주), 출연사업(제주)으로 달라 통일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81~84.

II

인사혁신처

【주요 현안 분석】

1

보수연혁 조사 사업의 연구용역 내용보완 필요

가. 현 황

- 보수연혁 조사 등 사업은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연혁 및 외국 공무원 보수제도에 대한 연구를 위한 사업으로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는 1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보수연혁 조사 등 사업에서 조사하려는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제도의 연혁에 대한 기록 관리는 인사혁신처의 고유업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인사혁신처는 동 연구용역을 통해 단순한 보수제도의 연혁에 대한 기록보다는 최근의 보수 제도 개혁과 관련되어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분석방법론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한 보수제도의 연혁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연구용역 내용 보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91~93.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재 인원의 선임비율 제고 필요

가. 현 황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내실화 사업은 국가인재 정보 관리 및 서비스 기능 강화를 통해 공공부문의 인적자원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6억 6,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추천 대상 직위 수 대비 선임율이 하락하고 있어 개선 방안 모색 필요
- 글로벌 국가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핵심인재 발굴 및 조사 내역사업은 글로벌 인재가 실제 임용되는 사례가 적어 사업방식 개편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94~97.

2

임대주택건립 사업일정 지연 예방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임대주택건립 사업은 무주택공무원에게 시중 전세금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건립·임대하여 공무원 주거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공무원연금기금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계획액은 전년대비 379억 3,900만원이 증액편성된 799억 4,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신규 재건축 단지인 고덕 8단지의 경우 유사한 사업인 개포 9단지 재건축 사업의 사업지연을 고려하여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설계비 등 사업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98~100.

III

경찰청

【주요 현안 분석】

1

경찰청 신규 R&D 사업 분석

1-1.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개발(R&D) 사업 취지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개발(R&D) 사업은 긴급하지 않은 민원 업무 처리에 활용될 AI민원 챗봇(chatbot)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으로 12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경찰청은 미래형 국민 치안서비스 개발(R&D) 사업의 최종 목표를 명확히 하는 한편, 사업 시행에 앞서 그에 걸맞은 정책적 검토를 실시할 필요

1-2.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탐지기술 개발(R&D) 사업의 면밀한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 탐지기술 개발(R&D)사업은 주요 성범죄 약물을 포함한 마약류의 신속 탐지가 가능한 휴대용 센서 기술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으로 25억 8,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약물이용범죄 사전예방을 위한 신속 탐지기술 개발(R&D)사업의 일부 과제는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찰청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09~115.

【개별 사업 분석】

1

AI 기술 활용 피해자 조사에 대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원’ 내역사업은 음성인식 AI 기술을 활용, 수사관과 피해자간 조사 내용을 자동 문서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예산안에 4억 1,400만원을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경찰청은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성폭력피해자 조사-지원’ 사업 실시에 앞서, 시범사업 성과 등 제반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실시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16~118.

2

수사민원 상담센터 운영에 유의할 필요

가. 현 황

- ‘수사민원상담센터’ 사업은 경찰서에 고소·고발 등 민원 접수 시, 변호사가 참여하여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 규모는 전년대비 22억 7,200만원 증액된 32억 8,500만원

나. 분석의견

- 경찰청은 업무 효율성 확보 및 민원서비스 수준의 제고와 같은 ‘수사민원 상담센터’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과정에서 유의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19~121.

3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 운영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사업은 여성안심귀갓길에 방법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전년대비 10억 2,800만원 증액된 15억 1,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경찰청은 ‘여성범죄예방인프라구축’ 사업을 통해 설치된 방법 시설물 등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순찰 강화 등을 통해 범죄예방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22~124.

4

학대예방경찰관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 ‘가정폭력·아동 등 학대근절활동’ 사업은 학대예방경찰관(APO : Anti-abuse Police Officer) 운영을 통해 가정폭력과 아동·노인·장애인 학대를 예방·단속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3,500만원 증가한 12억 2,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경찰청은 증가하는 가정폭력 등 학대사건 대처를 위한 학대예방경찰관의 인력 충원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25~127.

IV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 예산 중 군인, 경찰공무원에 대한 선거공보
발송요청 우편요금 적정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선거운동관리 사업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벽보 첩부·철거, 선거공보 발송 등 선거운동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국회의원선거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은 2020년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284억 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에 편성된 군인 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요청 우편 요금의 경우 최근 선거에서 해당 요청의 온라인 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예산 편성 필요
 -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준으로 16만명이 우편 발송요청을 할 것으로 예상하여 7억 4,300만원 편성
 -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의 서면 발송요청자 추이를 볼 때 감액 편성 필요

[군인·경찰공무원의 선거공보 발송요청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유형별	
		서 면	홈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395,765	164,084(41.46)	231,681(58.54)
제19대 대통령 선거	344,291	58,577(17.01)	285,714(82.99)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325,671	46,993(14.43)	278,678(85.5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33~136.

2

재외선거의 투표율 개선 필요 등

가. 현 황

- 재외선거관리 사업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 관리를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8억 5,700만원이 증액된 85억 2,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재외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상승하고는 있지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필요
 - 재외국민 수 대비 투표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2.5%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3.2%
- 재외선거 투표지의 국내 회송 요금은 기존 국회의원 선거의 재외선거 투표율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편성 필요
 - 추정 재외선거권자수 213만 7,762명의 8%(투표율)인 17만 1,047명이 투표할 것으로 예상하여 7억 9,400만원 편성
 - 17만 1,047명은 직전 국회의원 선거(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확정 선거인 수보다도 많은 인원이라는 점을 고려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37~140.

【개별 사업 분석】

1

(사이버 선거연구 및 교육 사업) 콘텐츠 변환 대상 교육과정 중 일부 과정의 변환필요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사이버 선거연수 및 교육 사업은 사이버 선거교육 콘텐츠를 관리·운영하여 선거와 관련된 직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 사업의 내역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1,300만원 증액된 5억 6,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이버교육 동영상 교육콘텐츠 변환 대상 교육과정 중 일부는 최근 수강실적이 저조하여 교육콘텐츠의 변환 필요성이 낮음
 - 31개 변환대상 과정 중 5개 과정은 최근 3년간 수강생이 없거나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pp.141~143.

V

소방청

【주요 현안 분석】

1

국립소방연구원 운영 및 사업의 문제점

1-1. 국립소방연구원 연구인력 비중 확대 필요 등

가. 현 황

- 국립소방연구원은 중앙소방학교 내 과(課)단위 부서였던 소방과학연구실을 확대하여 연구형 책임운영기관으로 독립시킨 신설기관

나. 분석의견

- 국립소방연구원의 연구직렬 정원 비중 확대를 통해 전문적인 소방 분야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필요
 - 국립소방연구원 정원 43명 중 실제 연구 수행 전문인력으로 볼 수 있는 연구직 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은 총 20명(연구관 7명, 연구사 정원 12명, 전문경력관 가급 1명)으로 전체 정원의 46.5% 수준
- 전문경력관(가군, 의사면허 소지자)은 현재 지원자가 없는 상황이므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1-2. 직접수행 연구 사업 별도 편성 필요 등

가. 현 황

- 소방청은 R&D 사업 중 일부 과제는 국립소방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 사업으로 편성
 - 2018년까지 직접 수행하는 R&D 사업은 리빙랩 연구 사업 뿐이었으나, 자체 전문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위한 현안문제 연구로 2개 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추진

나. 분석의견

- 국립소방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 사업은 별도 세부사업으로 독립 편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직접 수행 연구과제들은 사업목적, 추진방식, 예산구조에서 일반 R&D 사업과는 다른 성격을 지니므로,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편성하는 한편, 성과지표도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달리 구성될 필요

1-3.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가. 현 황

-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R&D) 사업은 제한된 공간에 VR을 활용한 복합훈련 공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8억 5,300만원 증액된 28억 5,3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실감기반 첨단소방훈련체계 구축연구 사업은 업체 이의 신청으로 착수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조정할 필요

1-4.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비 자료 제출 필요

가. 현 황

- 국립소방연구원은 舊소방과학연구실 소재지인 충청남도 아산에 소재하고 있으나, 연구기능 확대 및 교육연구 협업 등을 위한 청사 이전을 계획(사업비 188억원)

나. 분석의견

- 국립소방연구원 이전 사업은 국유지 사용승인 결정 지연(2019. 8.)으로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이전 사업비 적정 수준 반영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51~162.

【개별 사업 분석】

1

소방장비 표준규격 활용성 제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소방장비기본규격 개발 사업은 소방장비 품질향상 및 시·도별 장비의 성능 확보를 위한 표준규격 개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3억 9,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시·도 소방본부의 소방장비 구매 시 표준규격이 활용되지 않고 있으므로, 표준규격의 활용성 제고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63~166.

2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지원에 관한 유사사업 추진 현황 고려 필요

가. 현 황

- 고시원 등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사업은 화재안전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 산후조리원 등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에 간이스프링클러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13억 6,000만원 편성(총 255개소)

나. 분석의견

- 서울특별시 유사사업이 2020년에도 추진될 경우, 서울특별시 사업 수행분만큼 예산 불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서울특별시의 차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를 추가제출할 필요
 - 소방청은 2020년 서울특별시의 자체사업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잔여 255개소 전체에 대한 예산을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사업 추진여부는 불확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소관)」, pp.167~170.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생활SOC 사업 분석

1-1.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은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등의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494억 3,500만원이 증액된 2,692억 1,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는 바, 2020년도에 증액편성하여 추진하는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이 실집행률 부진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2.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의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통해 체육활동 참여 여건 및 경기관람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91억 9,000만원이 증액된 783억 8,500만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주체인 지자체가 행정절차 이행, 지방비 확보 등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점검을 할 필요가 있고,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3.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필요

가. 현 황

-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 노후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에는 48개 작은도서관 조성에 46억 3,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다 면밀히 점검·평가한 중장기적인 조성 계획 수립 필요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를 보면 최근 폐·휴관 건수 2016년 355개, 2017년 931개, 2018년 714개로 증가 및 전체 이용자 수 감소(17년 37,072천명 → 18년 37,030천명)
 - 장기 조성목표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 없이 2023년까지 전국 6,956개 조성목표 설정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3~26.

2

실감형 콘텐츠 체험관 관련 사업 분석

2-1.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준비 철저 필요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광화문 지역을 실감콘텐츠 체험공간으로 집적화하여 우리의 기술·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계획
 - 2020년도에는 광화문 지역에 실감형 체험관 2개소 조성 예정으로 40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5G 실감형 광화문 프로젝트 사업은 광화문이라는 역사적 상징성과 특수성을 가지는 공간에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 여론수렴 등 충분한 사전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필요

2-2.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조성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 필요

가. 현 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국립중앙박물관 등 4곳을 시작으로 국립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에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 추진
 - 2020년도에는 국립박물관과 국립중앙도서관 등 총 10곳에 실감콘텐츠 체험관 구축에 100억원 편성, 체험관에 설치하는 실감콘텐츠 제작비용으로 1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동 사업예산을 감액한 취지와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체험관 조성 및 콘텐츠 제작이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내년도 실감콘텐츠 체험관 추가 조성의 타당성 및 적정 증가규모에 대한 논의 필요
 - 국회는 2019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일부 박물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120억원을 감액하였고, 2019년도 추경 심사에서는 본예산 감액예산을 다시 증액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사유 등으로 60억원의 증액안 전액 감액

2-3. 박물관·미술관 실감형 체험관 조성 시 활용도 제고 방안 필요

가. 현 황

- 박물관·미술관 협력강화 사업은 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전국 40개 박물관 및 미술관에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관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총 213억 2,5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지방 소재 박물관·미술관의 이용실태, 운영 여건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참여관을 선정하고 관람객 유치 및 재방문 효과 증대를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콘텐츠 제작 및 활용계획 수립하여 추진 필요
 - 중복되는 콘텐츠 제작을 지양하고 기획·순회 전시 통해 활용도 제고 필요
 - 실감형 콘텐츠를 계획하거나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 중인 부처와 연계 협력방안 강구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27~36.

3

한류 콘텐츠 확산 및 한류축제 활성화 관련 사업 분석

3-1. K-컬처 페스티벌 사업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 정부는 최근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2019.4.12.)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에서 ‘K-pop 페스티벌’을 연 2회 상설화한다는 계획 제시
 - 이러한 K-Pop 페스티벌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K-컬처 페스티벌이라는 사업명으로 61억원 신규편성
- 문화체육관광부는 K-pop 공연을 중심으로 한식·뷰티·문화체험 등 다양한 부대행사 개최로 한류 콘텐츠 전반에 대한 호감도 제고 및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하고 외래 관광객 유치에 기여한다는 계획

나. 분석의견

- 동 사업 추진 시 사업의 결과가 연관 산업의 성장과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세부 성과지표를 마련하여 투입된 예산만큼 성과를 달성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
 - K-Pop 공연은 1회성 이벤트로 끝나기 쉽고, 일부 인기 K-Pop 연예인에 의존하는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의 수익이나 효과에 머물 우려, K-Pop 공연 개최가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과 외래 관광객 유치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성과평가가 용이하지 않은 측면
- K-컬처 페스티벌 하반기 개최 시 기존 사업에서의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10월에 국가나 지자체, 민간에서 주최하는 K-POP 공연이 많으므로 개최 시기와 지역을 조율하는 등 외래관광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K-컬처 페스티벌은 10월 중 1개월 가량을 주요 지자체 K-Pop 공연과 연계하여 개최할 계획인데, 지자체 K-Pop 공연 개최 지원이나 홍보·마케팅 지원이 기존 사업에서의 지원과 중복될 소지

3-2. 모꼬지 코리아 사업의 전략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모꼬지 코리아 사업은 K-Pop 등 한류콘텐츠를 활용하여 해외 현지에 진출한 서비스업 및 중소기업 등과 연계하여 한국 생활문화 및 한국 상품에 대한 소개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한류 콘텐츠에 대한 수용도를 제고하는 사업
 - 신남방 및 신북방국가 3개국을 선정하여 국가당 1주일 간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0년도 예산안에는 21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모꼬지 코리아 사업 추진 시 과도한 상업성이나 수출전략 차원의 일방적인 접근이 아닌 상호 문화이해 및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관점에서 접근하여 전략적으로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

3-3. K-Pop Experiences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K-Pop Experiences 조성·운영 사업은 올림픽 체조경기장 내에 K-Pop 음악관련 관람객 참여형 체험·전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35억원 신규편성

나. 분석의견

- 올림픽 체조경기장 리모델링 추진으로 K-Pop Experiences 사업예산이 불용 또는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K-Pop Experiences가 조성될 예정인 올림픽 체조경기장은 내년도에 리모델링을 추진 중으로, 리모델링을 마치는 2020년 12월이 되어야 K-Pop Experiences의 실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K-Pop Experiences 조성·운영 사업예산 중 전시·체험관 운영예산의 경우 12월 개장에 따라 일정부분 불용되거나 이월집행하는 등 연내집행이 불확실한 측면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37~48.

【개별 사업 분석】

1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가. 현 황

-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사업은 전 세계의 문자자료를 수집·전시하기 위해 전시시설, 교육·연구시설, 수장고 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3억 4,200만원이 증액된 247억 8,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이월예산액과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조정 검토 필요
 - 2020년도 공사비 편성 예산액 중 약 60억원 불용 예상, 예산액 일부 조정 필요
 - － 공사비 관련 '19년도 예상 집행잔액(이월예산액 60억원), '20년도 예산액(220억원), '20년도 공사비 집행예산액(220억원)을 감안하면 '20년도에 약 60억원 불용예상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49~51.

2

창업·기업가 양성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창업·기업가 인재양성 사업은 예술분야 창업, 기획, 유통, 홍보 분야에서 종사하기를 원하는 현장 경험이 없는 예비 종사자에게 창업교육, 직무교육, 현장실습 기회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3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의 추진 절차와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 필요
 - 프로그램별 교육(11개월) 및 참여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고려하여 사업추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52~56.

3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사업의 전달체계 개선 등 필요

가. 현 황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사업은 열악한 예술계 현실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 (소액)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사업
 - 2020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105억원이 증액된 19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지역별로 융자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 개선 필요
 - 각 지역 예술인들의 융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 문화재단 등을 활용하는 등 지역 전달체계의 개선 필요
 - 2019년 융자자금 신청 통계결과 수도권 이용자 비율이 전체 이용자의 약 78% 구성
 - 신청접수 창구가 서울에만 위치하므로 지역 문화재단 등 접수창구 다변화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57~60.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가. 현 황

-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보유한 지자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가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지자체 경상보조(보조율 50%)로 10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지역 고유의 특성과 차별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 지역의 개별 특성과 고유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수립 필요
 - 문화도시 사업 전담기구 설치 등 예비 도시들의 사전준비 사항 모니터링 강화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61~63.

5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 증액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가. 현황

- 문화체육관광부는 모태펀드의 예산을 2배로 확대하고 기존 투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약 600억원을 기획·개발단계의 콘텐츠 분야에 투자(모험투자펀드 신설)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00억원(95.2%)이 증액된 1,23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 출자금 증액의 적정성 등 검토 필요
 - 최근 펀드 규모 확대에 따른 펀드 결성 지연 추세로 출자액 증액에 따라 적기 투자 어려울 수 있음
 - 수익률 악화($\Delta 3.36\%$)로 인해 동 펀드의 안정적·지속적 운영에 대한 우려 제기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64~68.

6

효과적인 매체별 광고 집행계획 수립·추진 필요

가. 현황

- 매체활용 정책홍보 사업은 국가 주요정책 및 국정현안에 대해 대중매체(TV, 신문, 인터넷) 광고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 9,300만원이 증액된 184억 8,800만원 편성
 - 주된 증액요인은 주요정책 광고 중 인터넷 광고를 전년대비 37억원 증액 편성한데 기인

나. 분석의견

- 국가 주요정책 광고 중 인터넷 광고의 확대 필요성이 있더라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하는 만큼 정부광고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매체별 광고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69~71.

7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구축 시 효과적인 콘텐츠 공급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한류 홍보영상 유튜브 채널 구축 사업은 한류 1인 방송운영자를 활용한 한류 종합 홍보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로 36억 2,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활용 외에 다른 효과적인 콘텐츠 공급방안 및 체계적인 한류 크리에이터 육성·관리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72~74.

8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사업의 내실있는 사업준비 필요

가. 현 황

- 관광거점도시 선정 및 육성 사업은 ① 서울, 제주 외 세계적 관광도시의 잠재력을 보유한 광역시 1곳을 ‘국제관광도시’로, ② 일정 수준의 기반을 갖춘 기초도시 4곳을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하고, 선정된 거점도시는 전략적·집중적 홍보·마케팅 및 도시 브랜드 관리 지원을 5년 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157억원 증액된 159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5년 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에도 아직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등 사업준비가 미흡한 측면
 - 5년 간 총사업비와 연도별 세부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가재정법」 상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고, 사업 첫해에는 선정된 지자체와 추진할 사업에 대한 조속한 협의를 통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75~79.

9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가. 현 황

- 스마트관광 활성화 사업의 내역사업인 스마트관광 기반 조성 사업은 2019년까지는 전국 주요 관광지에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운영되었고, 2020년에는 스마트관광도시 시범조성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기 위해 59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준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내년에 시범조성을 거쳐 2021년 이후에는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도에 적정예산을 편성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80~81.

10

디비전리그의 타종목 확대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가. 현 황

- 스포츠클럽 디비전 사업은 스포츠 분야에 상위 팀은 상부 리그로 승격하고, 하위 팀은 하부 리그로 강등되는 승강제가 운영되는 디비전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축구 종목에 추가하여 신규 3종목에 대한 디비전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63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디비전리그의 타종목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서 리그운영 제반여건에 대한 평가와 종목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필요
 - 현재 종목단체 설명회와 2020년 신규 3종목에 대한 공모가 예산안의 국회 제출 이후 이루어짐에 따라 수요가 충분히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82~84.

11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 적정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태권도 진흥 사업의 내역사업인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사업은 태권도 기술 보급이 필요한 국가에 태권도 사범을 파견하는 사업
 - 2019년 9월 현재 38개국 39명이 파견 중인데, 2020년도에는 신규로 30명을 선발하여 해외파견을 확대하기 위해 전년대비 25억 6,800만원이 증액된 62억 1,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내년도 30명의 태권도 사범 해외파견 계획은 과거 실적을 고려할 때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고 예산의 집행부진도 예상되므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파견계획을 마련하고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85~88.

12

스포츠윤리센터 운영사업의 근거법률안 심의경과 고려 필요

가. 현 황

- 스포츠윤리센터 운영 사업은 체육계 비리 및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전담하는 독립기구 신설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계획안에는 신규로 29억 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근거 법률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법률안 심의경과를 고려할 필요
 - 동 사업의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월 18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89~90.

II

문화재청

【개별 사업 분석】

1

광화문월대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광화문 월대 등 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은 서울시의 광화문재구조화 사업의 일환으로 월대 복원공사 및 도로(사직·율곡로) 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6억 8,600만원 감액된 106억 5,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서울시와 행안부의 우회도로 개설 협의 과정 및 인근 주민·시민단체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1~104.

2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추진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문화재 보수정비는 연례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대상지역이 전국에 분포되어 총액계상사업으로 지정·추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약 400억원 증액된 4,0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중 사업내용이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사업대상이 명확한 사업은 총액계상사업에서 분리편성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5~107.

3

문화재돌봄지원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 돌봄지원사업은 돌봄사업단의 인력 교육 및 관리시스템 구축, 돌봄사업 성과 교류, 정책과제연구 등을 통해 문화재돌봄사업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17억원 편성(전년 동)

나. 분석의견

- 정책연구과제 선정 시 정책연구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세부 정책 과제별로 분리 발주하는 방안 검토 필요
 - 현행 사업 방식은 다양한 정책과제 연구용역을 1개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발주
 - 공개경쟁을 통한 과제별 분리 발주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08~110.

4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사업 추진 시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

가. 현 황

- 미디어월 설치 사업은 인천공항 입국장에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첨단 미디어 기술로 시연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디지털 미디어로 제작(12편) 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총 95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인천공항 입국장 미디어월 설치사업 추진 시 기존사업과의 연계 강화
 - 미디어월에 전시되는 작품 12편 모두 신규로 제작하기보다는 기존 제작된 디지털 콘텐츠(268편)를 활용하여 예산절감 및 콘텐츠 활용도 제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11~113.

5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의 실집행률을 감안한 집행관리 강화 필요

가. 현황

- 백제역사유적지구 보존관리 사업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공주·부여·익산 지역의 9개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정비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6억 4,900만원이 증액(32.8%)된 31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실집행률 개선을 위해 집행관리 강화 필요
 - 대규모 사업의 경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실집행률 개선을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집행률 부진으로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 강화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14~115.

6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관련 입장료 수입 증대 방안 강구 필요

가. 현황

-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사업은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세종대왕유적관리소 등 유적기관의 관람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문화유산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3억 4,400만원 증액(12.6%)된 120억 2,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궁능유적관리수입대체경비 관련 입장료 수입 증대 방안 강구 필요
 - 수입대체경비 예산은 전전년도 관람료 수입에 근거하여 편성하는데 최근 편성률은 2016년 51.64%, 2019년 97.3%, 2020년 예산안은 105.4%로 지출이 수입을 상회
 - 관람객 유치 및 홍보 강화 및 무인발급기 설치 등 운영비 절감 대책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16~119.

7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 수요조사 결과 반영 필요

가. 현 황

- 전수교육관 문화예술사 배치사업은 전수교육관의 공연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전담 기능을 강화할 목적으로 전국 150여개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18억 2,4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전수교육관의 문화예술사 수요조사 결과 및 채용공고에서 선발·배치까지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 전국 150여개 전수교육관 대상 문화예술교육사 수요조사 결과 77개소만 희망
 - 원서접수, 서류전형 및 면접 등 채용절차 소요기간(1~3개월) 고려한 사업추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20~122.

8

문화재수리재료센터 건립 사업준비 철저 필요

가. 현 황

-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사업은 민간시장에서 공급이 어려운 특대재, 자연곡재 등의 수리용 재료의 안정적인 조달 등을 위해 수리재료 센터를 건립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기본·실시설계비 8억원 편성(총 사업비 338억 9,000만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현재 군관리계획변경, 부지매입 등의 절차 진행 중이므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준비 필요
 - 건립예정 부지의 약 30%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용도지역변경을 수반한 ‘군관리계획변경’ 인가 필요(통상 12~18개월 소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pp.123~124.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I

농림축산식품부

【주요 현안 분석】

1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사업에 대한 검토

가. 현 황

- 현재 시행 중인 농업직불 사업을 통합하여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1조 605억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법률에 대한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 심사 필요
- 공익형직불제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동 사업이 소득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 필요
- 기존 농업직불 사업이 쌀의 공급과잉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동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 심의과정에서 실제 쌀의 공급과잉을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할 필요
- 공익형직불제는 공익적 기능의 확대를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이에 대한 사업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공익성’의 구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5~23.

2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관련 사업의 개선과제

2-1.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용수시설, 전기, 도로 등을 지원하는 기반조성 사업
 -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89억 2,500만원

나. 분석의견

-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사업은 기 선정된 스마트팜혁신밸리 대상지에 대한 기반시설 조성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2-2.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과 임대형스마트팜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청년들이 스마트팜 분야에 창농할 수 있도록 실습용 온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
 -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73억 8,800만원

나. 분석의견

- 스마트팜혁신밸리 조성 사업이 순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2년차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으므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운영비 사업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의 완공일정을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의 선발 및 교육일정 조정 필요

2-3. 스마트팜실증단지 사업은 실증장비 활용도 제고 필요

가. 현 황

- 실증장비 구축 사업은 스마트팜실증단지에 구축할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126억원

나. 분석의견

- 2020년 예산안에 스마트팜실증단지에 비치할 장비구입비를 편성하였으나, 스마트팜실증단지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한 장비를 활용하기 어려울 우려
 - 1개 실증단지에 필요한 장비구입비를 9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안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4~41.

3

친환경농축업 관련 예산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1. 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사전준비 기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 임산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공급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
 - 이 사업은 2020년 예산안은 90억 6,000만원

나. 분석의견

- 보건복지부에서 기 추진 중인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사업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할 필요
 - 지자체의 예산 확보 일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할 필요
 - 동 사업은 2020년에만 시행되는 사업인 반면, 시스템 구축 예산 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적절성에 대해 검토 필요

3-2.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 친환경농업직불 사업의 내역사업인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은 친환경축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이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1억 1,000만원

나. 분석의견

- 친환경축산직불 사업의 대상 농가가 108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친환경 축산의 활성화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42~50.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이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조정 필요

가. 현 황

-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은 농지은행이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 등에 저렴하게 임대함으로써 농업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이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5,600억원

나. 분석의견

- 매년 사업실적이 저조하므로 이행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시행지침을 개선하는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의 개정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산안 심의 필요
 - 매입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농업의 작업효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51~55.

2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사업추진체계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농업 관련 박람회 등을 통합·연계하여 종합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32억 5,000만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예산안은 민간경상보조(320-01)로 편성되어 있으나 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해야할 적절성을 검토하여 예산안을 심의할 필요
- 대한민국농업박람회 전시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56~60.

3

스마트팜 ICT기자재 국가표준 확산지원 사업은 보조사업자의 정합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국가 스마트팜 표준의 현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45억원

나. 분석의견

- 출연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민간경상보조를 지급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으나 이러한 사업 계획은 보조금관리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표준화 사업을 시행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61~63.

4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환수 실적 저조

가. 현 황

-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R&D 예산안은 27개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전년대비 110억 8,100만원이 증가한 2,350억 2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사업비 환수조치 등 사후관리 제고 필요
 - 2018년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R&D과제에 대한 사업비 환수조치 결과 환수처분액 12억 2,320만원 중 미환수액은 8억 70만원에 이룸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64~67.

5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은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목적과 정합성 저조

가. 현 황

- 농지범용화시범사업은 비축농지를 포함한 집단화된 논을 대상으로 용수 및 배수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2억원

나. 분석의견

-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보유한 농지를 포함하여 50ha의 농지에 용·배수시설을 구축할 계획인 반면, 농지범용화시범사업에 농지관리기금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미흡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68~70.

6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2019년 신규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사업은 악취,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지역사회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축산시설을 이전하여 규모화 된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편성된 사업
 - 동 내역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225억원

나. 분석의견

-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 사업이 2019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 시행된 사업물량에 대한 성과평가를 토대로 신중한 사업 확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71~72.

7

축산물허용물질목록제도지원 사업은 전문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축산농가의 동물용의약품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농가실태조사 사업과 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잔류성 시험 분석 사업으로 구성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7억 9,700만원

나. 분석의견

- 내역사업인 잔류성 시험분석 사업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73~75.

8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 사업은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가. 현 황

-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 지원은 농업인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5억 2,500만원

나. 분석의견

-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자연환경훼손의 가능성과 생산량 감소, 지역 주민의 반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사업추진 필요
 - 농업진흥구역에서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76~80.

9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은 바이오가스 비용과 수익에 대한 체계적인 추계 필요**가. 현 황**

-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은 기 설치된 공동자원화시설에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70억원
 - 또 다른 내내역 사업인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에너지 자원을 생산, 공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161억원

나. 분석의견

- 바이오가스연계 사업은 바이오가스의 생산성에 대한 추계 근거가 정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지원비율 조정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
- 에너지화 사업은 주변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집행 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81~84.

10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내용 조정 필요**가. 현 황**

-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노지에 영농을 하는 농업인을 집단화 및 단지화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35억원

나. 분석의견

- 지역특화단지기초기반조성 사업은 스마트원예단지조성 사업과 사업시행주체, 재정지원방법, 사업내용 등이 유사하므로 사업내용 조정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85~89.

11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황

- 구제역백신제조시설 신축 사업은 국내에 구제역 제조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235억 5,000만원

나. 분석의견

- 사업의 순연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예산안에 잔여 사업비를 전액 편성하였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90~93.

12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사업 및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예산안 편성지침 준수 필요 검토 필요

가. 현황

-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R&D) 사업은 분야별 및 전공별 특수대학원의 설립 등 전문 커리큘럼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131억 4,800만원
-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은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농업·농촌의 현안 문제를 직접 제안하고, 연구개발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편성된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 예산안은 20억원

나. 분석의견

- 농식품기술융합창의인재양성 및 농촌현안해결리빙랩프로젝트 사업은 예산안 편성지침 준수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94~96.

II

해양수산부

【주요 현안 분석】

1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확대에 대비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1-1. TAC 적용 대상 어종·업종 확대의 기반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해양수산부는 2022년까지 전체 어획량의 50%, 2030년까지 전체 어획량의 80%까지 TAC 관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나, 2017년 어기 기준 전체 어획량의 25% 수준

나. 분석의견

- TAC 적용 대상 어종·업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제도 확대 기반 마련 필요

1-2.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체계 개편 가능성 검토

가. 현 황

- TAC 제도 운영에 관련된 예산은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운영, 수산자원조성사업 지원, 자율관리어업 육성 사업 등에 편성

나. 분석의견

- 일원적으로 통합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TAC 관련 예산 통합 편성 검토 필요

1-3. 총허용어획량 설정·배분 및 어획량 조사·관리 등 제도운용 개선

가. 현 황

- 해양수산부는 생물학적 허용어획량에 기반하여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이를 배분

나. 분석의견

- TAC제도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조사 역량 강화, 어획량 조사·관리체계 개선, 실시간 어획량 등록·관리체계 구축 등 제도운용 개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12~119.

2

어촌뉴딜300 사업의 지역적 특성 반영한 계획 수립 등

2-1. 어촌·어항법 상 관련 계획의 조속한 수립 필요

가. 현 황

-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과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2019년 하반기에 제3차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을, 2020년에 제1차 어촌·어항재생개발계획을 수립 예정

나. 분석의견

- 법개정 취지를 반영한 계획 수립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어촌뉴딜300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2-2.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추진 필요

가. 현 황

- 어촌뉴딜사업은 전 대상지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통사업과 공모대상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등으로 구성

나. 분석의견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심사를 철저히 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모 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심의·조정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
 - 2019년 사업 추진 중인 사업대상지의 예비계획서 상 특화사업을 살펴보면 산책로·전망대 조성, 낚시터 조성, 갯벌체험 등 유사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공·유통시설 등 특화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존재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20~123.

【개별 사업 분석】

1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 국비 보조율의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2020년 신규 사업으로, 2029년까지 45개 위판장에 저온유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으로 위판장에 저온경매장 설치 시 50%, 자동선별기 및 저온차량 구매 시 30%를 보조
 - 2020년 예산안에는 위판장 내 저온경매장 3개소, 자동선별기 6대, 저온차량 2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14억 8,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관련 법령과 사업의 주된 수혜자를 고려하여 국비보조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필요
 -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농산물유통 개선 기준보조율은 40%이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에서는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모두 국비 30%를 보조하는 점을 참고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24~125.

2

국민해양안전관 건립 사업 이월액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

가. 현 황

- 전라남도 진도군에 국민해양안전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2020년 예산 28억 1,700만원 반영

나. 분석의견

- 2015년 이후 예산액 전액을 교부하고 있으나 지자체에서 집행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이월된 예산액을 포함하여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해양수산부는 2019년 10월 중 착공, 2021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공사계약 입찰 경과 등을 점검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26~128.

3

연근해어선감척 사업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일본 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66척(700억원)과 국내 조업어선 54척(242억원) 감척 예산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예산안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및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19~2023)」과 중기재정계획 상 2020년 감척 예산은 193억원 수준임에 비해 2020년 예산안에는 계획액 대비 약 4.9배인 942억원 편성
 - 직권감척에 대한 어업인의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성 검토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29~131.

4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사업 유류비 지원 상한액 설정 필요

가. 현 황

- 한일어업협상 지연에 따라 일본수역에서 조업하던 어선 406척에 대한 유류비 지원을 위하여 24억 6,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유류비 보전비율과 1척당 지원 상한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불용할 필요
 - 2020년 계획안 산출내역은 평균 유류비 지원율을 25%로 정하고 있으나, 2019년의 경우 당초 사업지침에 따른 유류비 지원 상한액은 300~400만원 수준이었으나 일부 어선의 지원대상 배제 등에 따라 2019년 6월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상한액을 431~575만원 수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1척당 지원액이 사후적으로 결정되어 부적절한 측면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32~133.

5

생분해성어구보급 사업 집행가능성 점검 필요

가. 현 황

- 폐어구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산피해 저감을 위하여 바닷속에서 자연 분해되는 생분해성어구 구입을 지원

나. 분석의견

- 연례적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집행가능성 점검 필요
 -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70% 내외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2020년 예산안에는 전년 대비 25억원(48.4%) 증액한 77억원 편성
 - 대게어망 등 특정 유형에 보급이 집중된 현 상태로는 보급률 개선에 한계가 있어 집중 보급목표 어종을 선종하는 등 개선안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34~135.

6

항만 육상전원공급설비 구축 사업 집행경과 고려 필요 등

가. 현 황

- 항만에 접안 중인 선박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고압 육상전원공급설비(AMP)를 구축
 - 2018~2019년 추경예산으로 편성, 2020년에는 신규 세부사업으로 264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18~2019년 추가경정예산의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2020년 집행가능 규모 산정 필요
- 대형 선박의 입·출항 현황 등 항만별 수요를 고려하여 사업물량 결정 필요
 - 실제 선박이 AMP 설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박에도 케이블 등 설비 구비 필요
 - 2019년 9월말 현재 국적선사의 원양 컨테이너 선박 중 고압 AMP 사용 가능 선박은 35척에 불과하며, 2020년 예산으로 AMP 설비 추가 구축 예정인 일부 항만은 대형 선박의 입항횟수, 연료소비량 등이 상대적으로 낮아 항만별 구축계획 면밀히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36~139.

7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지원 사업 보급목표 설정 이후 지원 필요

가. 현 황

-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첨단친환경 양식시설 구축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87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양식 기술별·품목별 보급률 목표 설정에 기반하여 기술도입 초기단계로서 지원 필요성이 높은 사례를 선별적으로 지원함이 바람직
 - 국회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시 기술도입 초기단계 리스크 보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술별·품목별 보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이후에는 융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시정요구
 - 세부목표 설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예산안이 편성되어 지원필요성 심의에 제한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40~141.

8

해양수산 재난관리 지원 사업 편성체계 조정 필요 등

가. 현 황

- 선박 및 표류물 등 항행위험물을 수거·처리하여 2차 사고를 예방
 - 2020년 신규사업으로 12억원을 편성

나. 분석의견

- 타 세부사업인 해양사고 예방활동 지원 사업과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
- 항행장애물 제거를 위한 예산 확보 외에도 항행장애물 발생 시 조기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병행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42~143.

III

농촌진흥청

【개별 사업 분석】

1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은 민간의 참여 확보 방안 모색 필요

가. 현 황

-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시범구축 사업은 첨단농업기술을 적용하여 다양한 규모의 수직형스마트팜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편성된 2020년도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72억 7,500만원

나. 분석의견

- 스마트팜 조성 및 운영 능력이 있는 민간 사업자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2019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유사한 사업이 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53~156.

2

농촌가치확산기술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 농업활동과 관련된 농경문화자원을 활용한 농촌경관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지원 및 소득화 모델 구축을 위해 편성된 2020년도 신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6억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시행계획 등을 정비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농촌자원의 범위와 정의가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성과지표 정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57~161.

3

농업과학관 운영 사업은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와 구분 편성 필요

가. 현 황

-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 성과를 상설전시하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4억 9,800만원

나. 분석의견

- 연구정책국 기본경비와 구분되어 편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목명세서 등을 정비하여 편성근거를 정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62~165.

4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의 성과지표 재검토

가. 현 황

- 농촌진흥기관을 지역 농업기술보급과 교육의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775억 8,100만원

나. 분석의견

-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으로 시군농업 기술센터 등에 장비를 구축해주는 사업인데 반해, 성과지표는 지방농촌진흥 기관에 설치된 기반시설 및 장비 관련 방문자의 증가율이므로 사용빈도나 활용률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로 정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66~168.

5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은 종자 생산물량 검토 필요

가. 현황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인 종자·종묘 생산 및 보급 사업은 실용화재단에서 보급할 종자·종묘 등에 관한 생산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28억 9,600만원

나. 분석의견

- 종자 생산물량의 수요에 대한 명확한 파악을 통해 계획한 물량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증가된 물량과 관련하여 판매 등 보급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69~171.

6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 사업의 적기 사업추진 필요

가. 현황

- 농업·농촌 현장과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문제를 국민 참여형 R&D로 해결하기 위해 편성된 2020년 신규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20억원

나. 분석의견

- 농촌현안해결 리빙랩 프로젝트는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72~173.

IV

산림청

【주요 현안 분석】

1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조성관리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등

1-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 및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조성 사업 효과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차단숲 90ha 조성을 위하여 450억원 반영
-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 조성 사업은 도시 녹지축 조성을 위해 11개 도시의 2년차 사업비 550억원과 추가 6개 도시에 대한 설계비 30억원 반영

나. 분석의견

- 사업의 효과성과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충분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확대할 필요
 - 미세먼지 차단숲의 평균 조성면적이 2ha 수준, 폭이 3~10m 수준으로 차단 효과 의문
 - 미세먼지 저감 바람길숲은 조성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고 사업지별 특성을 고려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2. 생활밀착형 숲 조성 사업 사업방식 보완 검토 필요

가. 현 황

- 공공시설 등에 소규모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50억원 반영

나. 분석의견

-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목적과 추진방식을 제안취지에 맞게 보완 필요
 - 국민제안 3건 중 2건은 실외활동이 제한된 학생들의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학교에 실내정원을 조성하는 취지이나, 동 사업은 공공기관·지하철역 등을 사업대상지로 하고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소관)」, pp.184~190.

【개별 사업 분석】

1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 사업관리 철저 및 스마트 가든볼 설치 사업 적정규모 검토 필요

가. 현 황

- 정원조성관리 사업의 2020년 신규 내역사업으로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19억원, 스마트가든볼 설치 시범사업 52억 4,000만원 반영

나. 분석의견

- 정원분야 실습보육공간 조성 사업은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식재에 적합한 기간을 도과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스마트가든볼 설치 시범사업은 사업성과 모니터링에 필요한 최소 물량만 추진
 - 지자체 대상 수요조사 결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391개소의 희망대상지가 있으며, 2020년 예산안에는 336대 설치비용(개소당 3,000만원)을 편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91~193.

2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일자리유형별 사업성과, 수요측정을 바탕으로 고용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 숲가꾸기 펠트롤,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등 공공산림 가꾸기 일자리사업을 위하여 286억 8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일자리유형별 사업성과 및 수요측정을 바탕으로 고용계획 수립 필요
 - 2018~2020년 일자리유형별 고용계획을 살펴보면 예산편성 상황에 따라 고용 인원이 크게 변동하여 고용인원의 예측가능성, 교육훈련 실시계획 수립 등에 지장이 있을 우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94~195.

3

산림사업종합자금 및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 정밀한 수요예측 필요

가. 현 황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은 산림사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에 사업자금을 융자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200억원이 증액된 700억원 편성
-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은 임업인의 일시적인 자금난 해소를 위해 8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하여 적정예산 반영 필요
 - 산림사업종합자금 사업은 2016~2018년 대출액 300~400억원에 비해 크게 증액 편성되어 2019년 융자한도 상향조정에 따른 수요변동 등을 고려한 수요예측 필요
 - 임업인경영자금지원 사업은 2018년 대출액이 46.6억원에 불과함에도 2020년 예산안에 80억원을 편성하여 적정규모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196~199.

V

해양경찰청

【개별 사업 분석】

1

함정건조 및 항공기도입 사업 예산편성 시 고려사항

가. 현 황

- 함정건조 사업은 건조 중인 함정 19척의 연차소요와 3,000톤급 경비함 1척 증강, 함정 10척 및 고속단정 18대의 노후대체건조를 위하여 1,654억원 편성
- 항공기도입 사업은 노후대체 헬기 1대와 신규 대형헬기 1대의 연차소요와 2020년 신규 대형헬기 1대 증강 소요를 반영하여 314억 6,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함정건조 사업은 내구연한 도래 함정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연계하여 정비계획 및 대체건조 계획 수립 필요
- 항공기도입 사업은 예산액 산출 시 2020년 기준 환율 적용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07~210.

2

유도선 안전관리강화 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가. 현 황

- 노후 유·도선을 대체건조 시 융자액에 대한 이자의 2.5%p를 이차보전하기 위하여 2020년 신규사업으로 8억 1,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예산심사 완료 이전에 지원대상, 조건 등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실제 융자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요예산을 정밀하게 산출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11~214.

3

수색구조역량강화 사업 현장수요에 맞춘 구조훈련 계획 수립 필요

가. 현 황

- 구조장비 확보, 수색구조 협력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전년대비 36억원이 증액된 86억원을 편성
 - 중·소형 함정 및 파출소 근무자에 대한 연안사고 초동대응 구조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예산 3억 4,400만원 포함

나. 분석의견

- 연안사고 초동대응 구조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함정·파출소별 필요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대상을 선발하고, 전보 등에 따라 필요 인력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2019년에 835명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파출소 근무 인원은 372명으로 최소 필요 인력인 420명(70개소×2명×3교대)에 미치지 못하여 2020년 교육·훈련 대상자 선발시 이를 보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pp.215~216.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I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현안 분석】

1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1-1. 소재·부품·장비 지원방향의 적절성

가. 현 황

-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한 소재·부품·장비의 조기 공급 안정과 자립화를 위하여 2020년 예산안에 1조 2,715억원 편성
 - 기술개발을 위한 R&D 사업 예산 8,996억원, 신뢰성 평가 등을 위한 기반구축 목적의 R&D 사업 예산 3,694억원

나. 분석의견

- 국산화가 시급한 100대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중점 지원할 계획이지만, 무역 환경이나 기술변화에 따라 향후 국가적으로 필요한 소재·부품·장비 품목이 계속 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한 100대 전략품목과 지원과제 선정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향후 과제 선정의 공정성 문제와 정책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완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생산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예산 중심의 지원이 국산화 전략 측면에서 효과적인지 검토할 필요
-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판로개척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기업 수요 중심으로 R&D 지원을 하는 것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

- 중소·중견기업의 R&D 수행 역량을 고려하여 기업별 적정 지원규모를 산출할 필요가 있으며, R&D 역량 및 투자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과도한 정부 R&D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을 관리할 필요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한계기업 비중이 2012년 2.9%에서 2017년 12.3%로 증가,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2012년 2.5%에서 2017년 11.8%로 증가
-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에서 수요기업의 수요를 반영하여 기술개발을 완료한 이후에 판로개척 및 사업화 성과로 연계된 실적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요기업 구매 등 사업화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1-2.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의 성과제고 필요 등

가. 현황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핵심 소재부품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018억원 증액된 6,027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수요기업과 연계한 사업화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16~2018년에 종료된 241개 과제 중 수요기업에 의한 구매를 통해 사업화 성과가 발생한 과제는 17개(7.1%)
-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은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한 사업계획적 정성 검토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내에 완료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
- 신규과제 지원단가를 전년에 비해 증액 편성한 소재부품패키지형기술개발 내역사업은 실증 예산의 실제 소요를 고려하여,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신규과제별 총정부지원금을 2019년 50억 4,500만원에서 2020년 65억 4,400만원으로 증액하는 방향으로 2020년 예산안 편성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실험실 수준에서 개발된 기술을 시제품 제작 수준으로 개발하는 과제를 집중 지원하였으나, 소재부품의 국산화를 위해서는 양산 단계를 목표로 하는 과제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할 필요

1-3.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의 지원대상 차별화 및 실증장비 대상의 면밀한 선정 필요 등

가. 현 황

- 기계산업핵심기술개발 사업은 생산장비 및 기계 등의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3억 6,100만원이 증액된 919억 7,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기술개발 완료 이후 기계장비의 수입대체로 연결된 실적이 미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입대체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
 - 2016~2018년 268개 종료과제에서 발생한 수입대체 사업화 성과는 2016년 3건뿐
- 기계장비 산업은 다양한 분야의 타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여러 사업에서 동시에 지원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 사업과 지원대상을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
- 제조장비실증은 특정한 기계장비의 실증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및 신뢰성 평가 등을 지원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선별하여 지원할 필요

1-4. 소재부품미래성장동력 사업의 장비구입비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 소재부품산업미래성장동력 사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24억 5,500만원 증액된 1,456억 6,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디스플레이혁신공정플랫폼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비 장비구축비가 과다 편성되었으므로, 장비별 구입단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에 나타난 2020년 구입 31종의 장비구축 적정 비용은 576억 9,300만원이나, 2020년 예산안에서는 65억 9,000만원 증액된 642억 8,300만원 편성

- OLED공정장비용핵심부품기술개발 사업은 연도별 예산규모에 따라 신규과제 지원단가를 다르게 편성하고 있으므로, 과제별 지원계획을 보다 면밀하게 수립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
- OLED 제조장비에 사용되는 핵심부품 중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품의 국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핵심부품의 선정이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경우, 핵심부품의 국산화라는 당초 계획에 따른 지원이 어려울 우려

1-5.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사업의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필요

가. 현 황

-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 사업은 스마트 제어기(CNC)의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85억원 신규 편성
-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목적으로 2019년 8월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 이후 2019년 9월부터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수행 중

나. 분석의견

- 적정 예산규모 도출을 위한 사업계획적정성 검토가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 내에 완료될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
- 2021년 이후에 제조장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 제어기 국산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을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8,000억원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며, 동 사업은 2019년 6월에 기술성평가를 통과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6~53.

2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현황과 과제

2-1.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전환 비용 점검 필요

가. 현 황

-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14~2030)」에서는 2030년까지 1차 에너지의 14.3%, 발전량 기준으로 전체 전력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

나. 분석의견

-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 악화로 인한 RPS 이행비용의 증가가 에너지 전환 비용의 과도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
 - REC 가격 하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수익구조 악화에 대응하여 일반 발전사업자의 고정가격 REC 구매량을 확대할 계획
 - 일반 발전사업자의 RPS 이행비용 증가로 에너지전환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필요

2-2. 농가형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확대 문제

가. 현 황

-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나 등을 대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융자 사업이며,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450억원 증액된 3,02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농촌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에서 농어업인 및 축산인 대상 융자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
 - REC 거래가격의 하락으로 인하여 농어촌 주민의 투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존 발전사업자 등 공공부문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고려 필요

2-3. 초대형풍력 실증기반구축 사업의 민간참여를 통한 재정부담 완화 필요

가. 현 황

- 초대형풍력 실증기반구축 사업은 5MW급 이상의 대형 풍력발전기 실증 시설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도 계획안은 58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대용량 풍력장치를 실증하는 업체가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총사업비 중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주요 수요기업인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유니스 등 풍력업체의 민간부담 없이 사업 추진 계획

2-4. RMS 기술개발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및 협약 지연에 따른 예산조정 필요

가. 현 황

- 신재생전원확대와 전력계통안정화를 위한 RMS 기술개발 사업은 신재생 전원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개발 지원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억 8,100만원 증액된 51억 7,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해 R&D 결과물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RMS 사업 계획 정비 필요
 - 2019년 신규과제 협약 단계에서 한전KDN과 전력거래소가 R&D 결과물의 활용에 이견을 보여 협약을 포기하면서 사업 추진 지연
- 2019년 지원 과제 선정이 지연되면서 2019년 예산의 대부분이 2020년에 집행될 것이며, R&D 사업내용을 재기획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2020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54~76.

【개별 사업 분석】

1

수요를 고려한 LNG병커링선 건조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LNG병커링선 건조지원 사업은 LNG 추진선에 연료를 보급할 병커링 선박을 건조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3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LNG병커링선이 건조되는 2022년 이후의 LNG병커링 수요를 고려하여 LNG 병커링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적절한지를 검토할 필요
- LNG병커링선건조지원 사업은 출연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성격에 적합한 지원 방식을 모색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77~82.

2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 필요

가. 현 황

- 국내 부품 및 상용차 산업의 기술 수준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기술개발과 시험·실증 기반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127억 4,300만원 신규 편성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 사업계획적정성 검토 후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계획적정성검토 결과에 따른 장비별 적정 구입비용을 반영하여 2020년 장비구입비 예산을 조정할 필요
 - 2020년 구입 예정인 3종의 장비는 사업계획적정성검토에서 기존에 구축된 유사 사례와 비교하여 도입가격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구입비용 감액 검토의견 제시
- 융복합기술개발 사업은 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민간기업의 R&D 역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별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83~89.

3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전 추진 문제

가. 현황

-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은 산업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난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에 118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G-First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산업기술 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은 충실한 사업기획을 거쳐 추진할 필요
 - G-First 사업은 2021년부터 2035년까지 정부연구비 2.4조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으며, 동 사업은 G-First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할 경우 본격적으로 지원할 과제를 선별하기 위한 선행 연구 성격으로 추진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90~94.

4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

가. 현황

- 재제조 기술개발은 노후화된 차량 및 기계장비 등의 성능복원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은 특수차량 노후엔진 및 배기장치 전자기술 연동 재제조 기술개발, 제조업활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계 에너지저장형 재제조 기술개발, 첨단제품 전후방산업의 순환자원이용 기술개발, 에너지자원순환 기술개발 사업 등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
 - 4개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108억 8,800만원 증액된 125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제조 기술개발 신규 사업은 사업별로 지원대상 품목은 다르지만, 성능을 복원하는 기술개발과 보급확산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사업목적 및 구조가 유사하기 때문에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신규 사업 통합 추진으로 국비 지원금이 300억원 이상이 될 경우,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95~99.

5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 사업의 민간부담금 조정 검토 필요

가. 현 황

-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 사업은 민간 중형항공기의 국제공동개발 참여에 필요한 동체 핵심설계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은 21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항공기 국제공동개발 사업비 중 시제품 제작 비용 등 민간이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보다 명확하게 산출하여 총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
 - 동 사업은 브라질 엠브라에르사의 E-Jet II 국제공동개발에 참여가 확정된 국내 기업이 해외기업에 납품할 동체 개발에 필요한 R&D 지원
- 기술개발 종료 후 납품실적에 따라 상당한 매출이 보장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상기술료 방식을 적용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00~103.

6

수소버스충전소 실증 사업의 R&D 예산 부합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수소버스충전소 실증 사업은 수소충전소를 구축 및 운영하여 한국형 수소충전소를 실증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48억 7,0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지자체가 구축 및 운영할 버스용 수소충전소 구축 및 운영비를 지원하는 성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R&D 사업이 아닌 일반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04~107.

7

수소트럭 지원 신규 R&D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가. 현황

-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수소트럭 지원을 위한 신규 R&D 사업은 수소트럭개조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과 수소트럭 전기동력 부품 국산화기술개발 사업이며, 각 사업은 2020년 예산안에 60억원과 5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수소트럭 지원 신규 사업은 모두 수소트럭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여 성과를 제고할 필요
- 수소트럭 전기동력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시장자립형 3세대 xEV산업육성 사업의 구동 및 전력변화 부문에서 중복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사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일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08~112.

8

에특회계 신규 사업 및 법정부담금 감소 문제

8-1. 수송부문 중심 에특회계 신규 사업 추진의 적절성

가. 현황

- 2020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14개 사업의 예산은 총 561억 3,100만원이며, 이 중 6개 사업은 수소 및 전기차 개발을 위한 R&D 사업(265억원)으로 구성

나. 분석의견

-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에너지 목표수요를 달성하기 위해 부문별로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시키기 위한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지만,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의 2020년 신규 사업은 전기 및 수소차 등 수송 부문에 중점을 두고 편성

8-2. 법정부담금 감소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관리 필요

가. 현 황

- 법정부담금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업자나, 석유정제 업자나 액화석유가스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자 등이 납부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사업이며,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480억원 감액된 1조 8,974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는 발전용 천연가스 부과금의 단가 인하에 따라 법정부담금이 장기적으로 감소하게 될 예정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할 필요
 - LNG발전용 석유수입부과금의 부과금 기준 단가 인하에 따라 석유수입부과금 중 발전용 천연가스부과금 수입은 2019년 1,426억원에서 2020년 578억원으로 847억원 감액 편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13~121.

9

에너지산업기반구축의 ESS 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가. 현 황

- 에너지산업기반구축 사업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설치비를 보조하여 ESS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7억 2,200만원이 증액된 74억 3,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ESS 화재에 대한 원인분석 및 안전대책 수립 이후에도 화재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수요가 감소하여 예산 집행이 어려울 우려
 - 2019년에 ESS 화재 안전문제로 인하여 안전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지원대상 선정 연기, 2019년 지원대상 선정은 12월에 지원대상별로 협약을 맺어 추진할 계획
- ESS 수익성 악화 우려로 공장·상용 시설의 ESS 설치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22~125.

10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필요 등

가. 현 황

-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은 수소 생산 및 공급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44억 4,000만원이 증액된 294억 4,000만원편성
 - 2020년에 5개 소규모 수소생산기지와 2개 중대규모 수소생산기지를 구축할 계획

나. 분석의견

-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고 2019년에 신규 추진되었으나, 2022년까지 총 18기의 수소생산기지 구축에 9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으므로, 타당성재조사를 받아 추진할 필요
- 소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사업이 주민 수용성 문제로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소생산기지 5기를 신규 구축하는 2020년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26~132.

11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하계누진제 지원에 따른 계층별 에너지 복지 총량 점검 필요 등

가. 현 황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에너지 사용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37억 2,300만원 증액된 1,634억 2,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회배려계층 하계누진부담완화 지원 사업은 하계누진제 완화에 따른 사회배려계층 지원규모를 보다 명확하게 산출할 필요
- 하계누진부담완화 지원은 사회배려계층 중 전기사용량이 많은 계층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그 외 계층에 추가적인 혜택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방향의 적절성을 점검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33~138.

12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

가. 현 황

-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은 에너지 분야에서 기술개발이 필요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R&D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16억 8,7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및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R&D 사업과 지원대상이 중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의 차별성을 확보할 필요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분야 R&D 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의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사업의 목적이 불명확하고,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약해질 우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39~142.

13

포항 해상CCS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 구축 사업의 목표 명확화 필요

가. 현 황

- 포항 해상CCS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방안 구축 사업은 포항 해에서 수행 중인 CCS 실증사업 종료 이후 해양시설 및 시추공에 대한 사후관리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0년도 예산안은 10억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포항 주민의 수용성 문제로 포항 해상CCS실증사업이 중지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재활용은 포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보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43~146.

14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1. WTO당사자분쟁대응 사업의 법률자문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WTO당사자분쟁은 국제적으로 증가추세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4년 2건에서 2019년 9월 현재 10건의 분쟁이 진행(승소후 이행단계 포함)중에 있는 등 증가추세이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에는 15건의 분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

나. 분석의견

- 자문 로펌 선정 계약에 있어서 매뉴얼화 등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연례적 미지급금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통상이익 보호를 극대화할 필요

14-2. 통상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가. 현 황

-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 등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통상현안에 신속 대응하고 종합적인 분석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무역협회에 통상정보센터 설치

나. 분석의견

- 통상정보센터가 현재 무역협회에 설치되어 있는 통상지원단을 확대개편하는 수준이고 WTO 분쟁 대응 사무는 그 성격상 궁극적으로 국가가 수행할 영역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부의 통상분쟁 대응역량 강화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단기적으로 무역협회에 설치하여 운영하되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싱크탱크 등의 인프라 구축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47~155.

15

외투기업 현금지원 지급한도 등 개선 필요

15-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기업유치활동 보조금 적정편성 필요

가. 현 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따라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각종 보조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는 매년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計上)하도록 규정

나. 분석의견

-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비목을 예산에 편성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예산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

15-2. 고용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지원한도가 정해져 있는 반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외투기업을 유치하여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에 대해 명확한 규정 미비

나. 분석의견

- 외투기업을 유치하는 주체에 따라 고용보조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한도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의2에 따라 국가가 외투기업을 유치하여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경우 법령에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56~167.

16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후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44억 2,800만원

나. 분석의견

- 외국교육연구기관의 개교(개설) 이후 철수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설립 계약서 작성시 신중을 기하는 한편 유치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지속적 운영을 유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68~171.

17

수출바우처사업의 신속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등

가. 현 황

- 수출바우처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게 바우처를 제공하여 디자인개발지원, 특허지원 등 수출지원 서비스를 선택하여 지원받게 하려는 사업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수출마케팅 강화를 위해 일반 중견기업과 별도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2020년에 200개 기업에 대해 140억원을 지원할 계획

나. 분석의견

- 일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가 2억원(국고지원 1억원)인데 반해 소재부품 장비 분야의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한도는 1억원(국고지원 7,000만원)에 불과하므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72~175.

18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필요

가. 현 황

- 해외전시회 사업은 기업들의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경제사절단 파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349억 300만원 편성
 - 해외전시회 단체지원 예산안은 전년대비 9억 1,200만원 감액편성한 반면, 개별지원 예산안은 5억 5,000만원 증액편성

나. 분석의견

- 정부 예산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통합한국관 확대 방향이 보다 바람직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단체지원에 대한 예산안 규모를 확대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76~178.

19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의 무역보험 공급확대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무역보험기금출연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지원 확대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에는 전년 예산안 대비 2,350억원 증액된 3,7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예산안에 따른 무역보험사업 지원 확대로 인해 기금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리스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79~189.

20

민간출연사업 법적 근거 마련후 추진 필요

가. 현 황

- 민간출연사업은 무역보험공사가 민간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금융기관의 특별출연 재원을 기반으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보험 한도우대, 보험(보증)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에는 10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은행으로부터 민간출연금을 확보함으로써 무역보험공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재원확보 측면이 있는 반면,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기관과의 중복성 측면이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간출연사업의 추진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190~194.

II 중소벤처기업부

【주요 현안 분석】

1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안의 문제점

1-1. 신규 R&D 사업 편성의 문제점

가. 현 황

- 신규 R&D 사업은 17개, 2,395억 5,2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9개 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개 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개 사업 편성

나. 분석의견

- 향후 주요 신규 R&D 사업들은 충분한 사업기간 및 적정 총사업비 규모를 토대로 필요 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후 편성하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 일부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충분한 검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사업체계 및 내용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점검 후 추진될 필요

1-2. 일몰관리혁신 R&D 사업의 문제점

가. 현 황

- 일몰관리혁신사업은 일몰시점을 5년 연장하되, 주기적으로 점검해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으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이 일몰관리혁신사업으로 선정

나. 분석의견

- 공정·품질기술개발은 사업구조 개편내용이 기존사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선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은 신규과제 규모가 일몰관리혁신 선정 취지에 비추어 적정한 수준인지 면밀한 검토 필요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R&D지원사업 편성의 문제점

가. 현 황

- 2020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에는 11개(지역지원 계정 10개, 세종계정 1개), 총 2,130억 400만원 규모의 R&D 사업이 편성되었고,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 지역특화산업육성+(세종포함) 등 7개 사업이 신설

나. 분석의견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된 R&D 사업은 연구인프라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비수도권 소재 기업 등에 집중지원하여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기획될 필요가 있으므로, 산학연 Collabo R&D와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 사업은 그 취지에 맞게 지역기업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기여도 제고 필요
 - 산학연 Collabo R&D 사업의 2019년도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중소기업)의 지역별 분포 현황을 보면, 수도권 소재 주관연구기관이 전체 과제의 39.2%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
 -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R&BD지원사업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과제비율을 4:6으로 배분

1-4. 한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의 개선과제

가. 현 황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 ÷ 이자비용)이 1미만인 기업으로 정의되고, 장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

나. 분석의견

- 한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비율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하지 않도록 과제 선정 시 관리를 강화하고, 한계기업 중 경영악화로 후속 투자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제 선정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필요
 - 한계기업 신규과제 지원비율을 보면,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은 2015년 6.3%에서 2018년 10.2%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도 2015년 5.5%에서 2018년 6.3%로 각각 상승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08~228.

2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현황과 과제

2-1.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가. 현 황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지원사업 중 R&D 사업은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Tech-Bridge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등 4개 사업이 편성되었고, 예산안 규모는 총 1,186억 3,000만원

나. 분석의견

- 사업화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설계 및 과제기획이 필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술개발사업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기술개발대상으로 지정하여 국산화를 시도할 계획인 만큼,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외국보다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화성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 존재

2-2. 소재·부품·장비 전용 자펀드 조성 사업

가. 현 황

- 정부는 2020년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모태펀드에 출자하여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투자를 위한 자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

나. 분석의견

- 과거 소재·부품 중소기업 투자목적으로 조성된 자펀드의 수익률이 저조하였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에 대한 벤처투자비중이 하락하는 추세이며, 금융위원회도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민간투자자 유치 위한 유인설계 필요
-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자금이 국산화율이 낮은 품목을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등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
- 금융위원회도 성장지원펀드 내 소재부품장비 분야 전용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므로, 각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의 투자대상 및 조건을 차별화하는 방안 검토 필요

2-3. 신용보증기관출연 및 융자사업

가. 현 황

-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보증 및 융자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관출연 8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00억원, 혁신창업사업화지원(융자) 200억원의 예산안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대외의존도가 높지 않고 국산화율이 높은 품목을 수입 또는 생산하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도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조건을 우대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바람직한지 논의할 필요

- 보증과 융자사업에서 지원대상 선별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품목 범위 일치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29~240.

3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가. 현 황

- 규제자유특구제도 사업은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실증기술개발 및 실증기반조성, 신사업 발굴·육성 지원 등을 시행하려는 단위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4개 세부사업의 예산안은 총 570억 1,500만원

나. 분석의견

- 규제자유특구제도 운영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필요
 - 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중장기 계획이 없어 연도별 특구 지정 개수 및 일정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등이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 및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려운 상황
- 규제자유특구 내 실증사업 예산편성에 필요한 각종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서 제출 전에 특구를 지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41~248.

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안의 쟁점과 개선과제

4-1. 예산안 규모에 대한 적정성 논의 필요

가. 현 황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도 모태펀드 출자 예산안 1조원으로 혁신창업펀드, 소재부품장비 전용펀드, M&A펀드 등 7개 유형의 자펀드를 2조여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

나. 분석의견

- 현재 운용되고 있거나 조성 중인 자펀드의 투자여력과 2020년 회수재원 예상 규모, 민간의 벤처투자액과 벤처펀드의 민간출자자 비중 변화, 모태펀드와 투자대상이 일부 중복되는 성장지원펀드의 투자여력 및 신규 출자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태펀드 출자예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될 필요

4-2. 모태펀드 운용 상 개선 필요사항

가. 현 황

- 모태펀드로 자금이 출자되면 (주)한국벤처투자가 민간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를 모집하고 운용사는 민간 자금을 조달·매칭하여 자펀드를 조성하며, 자펀드의 운용사는 펀드 운용기간 동안 기업에 대한 투자활동을 수행

나. 분석의견

- 2020년도 모태펀드 출자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국회 예산안 심사 전에 2020년도 모태펀드 출자금 회수 및 재출자계획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필요
- 출자가용예산 대비 약정규모를 과다 설정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회수재원이 예상보다 감소하는 경우에는 모태펀드 예산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도한 출자약정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2019년에는 모태펀드 출자가용예산 대비 출자약정 비율이 193%까지 상승할 전망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49~259.

【개별 사업 분석】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필요

가. 현 황

- 중소기업지원사업분석 사업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조사, 분석·평가, 신설 또는 변경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억원 증액된 28억 4,500만원

나. 분석의견

-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와 관련하여 부처 및 지자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 시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실효성 확보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예산 요구서 제출 이후 신설·변경된 중소기업 지원사업 현황 조사 후 중복성 검토를 거쳐 자료제출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60~265.

2

미래기술육성 및 고성장촉진자금 융자조건 적정성 문제 등

가. 현 황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2조 5,500억원으로, 미래기술육성과 고성장촉진사업이 각각 3천억원 규모로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에 신설하려는 미래기술육성자금과 고성장촉진자금의 융자조건이 적절한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혁신성장 분야 기업육성과 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더욱 특화시킬 필요
 - 고성장촉진자금 지원대상은 다른 중소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자금확보가 용이하고 경영여건이 양호할 개연성이 큰 중소기업임에도 오히려 융자조건이 유리하게 설계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66~271.

3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면밀한 사업검토 필요

가. 현 황

- 이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테크-브릿지플랫폼을 통해 이전 계약이 체결된 기술의 후속 상용화 R&D를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은 130억원

나. 분석의견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성과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기술이전을 통한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은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 등 다른 사업으로도 시행할 수 있는 만큼,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 강화 및 성과제고를 위한 사업설계가 필요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충분한 검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여 예산 심사 과정에서 사업 추진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에 따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예산안 조정 또는 사업방식 변경이 필요할 수 있는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72~276.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R&D 러시아 핵심기술 확보계획 필요

가. 현 황

-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러시아의 기초과학·원천기술과 국내 중소기업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하여 혁신적인 상용화기술을 개발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25억 2,200만원의 예산안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러시아의 핵심적이고 후속 상용화기술개발이 용이한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확보가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 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77~280.

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가. 현 황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청년근로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일정기간 동안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 시 적립금을 청년근로자가 수령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356억 4,600만원이 증액된 3,383억 5,800만원

나. 분석의견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실효성 있는 가입률 제고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는 한편, 신규 가입자 및 해지자 추이, 예산 실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규모로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
 - 신규가입자수가 매월 감소하는 반면, 해지자수는 늘어나고 있고, 2018년 실행행률이 53.9%, 2019년에는 8월말 기준 실행행률이 42.2%일 정도로 실행실적이 저조한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81~284.

6

예비유니콘 발굴육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가. 현 황

- 예비유니콘 발굴육성 사업은 예비유니콘 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신시장 조사·분석, 시장개척 전략 수립 및 실행 등을 위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은 120억원

나. 분석의견

- 상대적으로 경영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별도 지원사업을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지원기업수(40개)가 적정한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 필요
 - 예비유니콘 발굴육성 사업의 지원대상은 ①투자유치 3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 100억원 이상, ② 최근 3년 간 연평균 성장률 30% 이상이라는 두 가지 조건 충족 중소벤처기업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85~287.

7

중소기업 화장실 설치·개보수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가. 현 황

- 클린업 사업은 중소기업의 화장실·샤워실 설치 및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로 2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클린업 사업을 통한 화장실·샤워실 설치 및 개·보수가 청년층 등의 중소기업 인식개선에 어느 정도 작용할지 의문이 있고, 사업주가 스스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자체적인 시설개선노력을 소홀히 할 우려 존재
 - 급여 및 복지수준, 기업의 성장가능성 등 본질적인 사항의 개선이 아니라, 작업장 내 위생시설 개·보수가 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인식개선에 어느 정도로 작용할지 의문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88~290.

8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관리 강화 방안 필요

가. 현 황

- 지식산업센터건립은 비수도권 지역에 임대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여 중소기업에 사업공간을 제공하고 이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9,700만원 증액된 401억 5,3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지식산업센터건립 예산의 집행행실적 제고 위한 사업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연례적으로 보조금 집행행실적이 부진하여 국회 결산심사 결과 집행행률 제고가 필요하다는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나, 2019년 9월말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집행행률이 33.1%로 나타날 만큼 여전히 집행행이 부진한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91~295.

9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예산안 조정 및 관리강화 필요

가. 현황

- 세종 산업기술단지(IP) 조성사업은 세종특별자치시에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융·복합 기술산업을 육성하는 등 지역주도형 자립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5억 7,300만원 증액된 20억 7,3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일정 등을 고려하여 2020년 내에 집행가능한 규모로의 예산안 조정을 검토하는 한편,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강화 필요
 - 2020년도 예산안에는 공사비 20억 3,300만원 등이 편성되어 있으나, 빨라도 2020년 12월해야 착공할 수 있어 2020년에 집행가능한 공사비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96~298.

1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가. 현황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5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0년 규모는 3조 2,532억원으로 전년대비 421억원 증가

나. 분석의견

-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 위한 기금 수입확대 방안 모색 필요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융자사업비 뿐 아니라 경상사업비까지 충당하는 구조로는 융자원금 회수금이 증가하더라도 공공자금관리기금 원금 상환 재원이 부족할 수 있으며, 향후 기금 수입 중 공자기금 예수금 비중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 존재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299~303.

1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구체적 계획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은 ICT기술(AR/VR, IoT, 3D프린팅, AI 등)을 활용한 제품(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을 소상공인에게 보급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을 도모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2020년도에 20억 5,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예산안 심사 전에 보급 기술(제품)과 수량,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지역별 배분, 자부담비율에 관한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
- 재판매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제품)을 보급 받은 소상공인이 해당 제품을 일정 기간 동안 처분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04~307.

12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수요 고려한 과제기획 필요

가. 현 황

-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사업은 소상공인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제품·공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으로, 2020년도에 34억 6,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비즈니스모델개발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비즈니스모델을 소상공인이 경영혁신을 위하여 어느 정도 활용할지 불확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수요조사를 선행한 이후 소상공인이 필요로 하는 비즈니스모델 발굴 위한 과제기획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08~310.

1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자 확보 노력 강화 필요

가. 현 황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지원은 1인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기준 보수등급에 따라 해당 보험료의 30% 또는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대비 6억 8,900만원 감액된 22억 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현황을 고려할 때 신규가입자수 확보노력 강화 필요
 - 2019년에는 가입목표인원을 1만 2,0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2분기 말 가입유지자수가 3,454명에 그치고 있어 목표대비 가입실적이 저조한 상황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에 명시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지원비율과 실재가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속히 고시를 개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11~314.

III

특허청

【개별 사업 분석】

1

상표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 개선필요

가. 현 황

- 상표조사분석 사업은 상표심사의 일부인 선행상표조사 등을 외부 전문조사 기관에 용역의뢰하여 수행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상표권 획득을 지원하고 심사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67억 6,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특허청의 국내상표심사처리 기간은 2017년 4.8개월에서 2019년 8월기준 6.1개월 까지 지연되고 있으므로, 출원되는 상표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함으로써 상표권 출원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24~328.

2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의 리스크 관리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담보산업재산권 매입·활용 사업은 특허를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은 기업이 부실 발생 등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 담보특허를 은행으로부터 손실액의 50%로 매입하여 줌으로써 은행의 리스크를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37억 5,000만원이 반영

나. 분석의견

- 그동안 추진한 IP 담보대출에서 부실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향후 IP 가치평가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29~335.

3

모태조합 운용사 선정시 IP전문가 의견반영 등 보완 필요

가. 현 황

-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우수 특허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벤처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모태조합(특허계정)에 자금을 출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00억원이 증액된 200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특허계정의 차별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펀드 운용 시 특허전문가의 자문을 청취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고, 현재 출자를 통해 조성하려던 자펀드의 결성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특허청은 조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운용사 대상 설명회 개최 등에 있어서 세심한 사업관리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36~341.

4

IP가치평가기관 역량강화 필요

가. 현 황

- 지식재산평가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의 IP평가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71억 8,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발명진흥법」 제28조에 따라 특허청장이 지정한 18개 IP 가치평가기관 중 기술보증기금 및 한국발명진흥회에서 전체 평가물량의 84.5%를 차지하는 등 특정 가치평가기관에 평가물량이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IP가치평가 기관간 적정한 물량배분 등을 통해 평가기관 전반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42~347.

5

IP-R&D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법적 근거 마련 및 부처협업 강화 필요

가. 현 황

- IP-R&D 전략지원(R&D) 사업은 중소기업이 기존의 핵심특허를 피해 새로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IP획득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7억원 증액된 319억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재산 연계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의 경우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체기술을 조기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지원대상기업을 대폭 증가(210→326)할 계획임을 고려하여 적시에 IP-R&D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48~351.

6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 사업의 추진체계 재설계 필요

가. 현 황

- 찾아가는 발명체험교실 운영 사업은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발명 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도서벽지·낙도,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등 교육취약지역을 방문하여 발명체험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국민참여단 심사를 거쳐 선정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에 신규로 10억 2,000만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교육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소외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시 및 체험시설이 장착된 이동식 차량을 활용하여야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체계를 재설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pp.352~364.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I

보건복지부

【주요 현안 분석】

1

저소득층 지원 예산안 분석

1-1.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와 자활장려금 간 인원 중복 산정

가. 현 황

- 생계급여 사업은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자 등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근로소득 증가만큼 생계급여액이 감소하여 근로유인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임
 - 2020년도 생계급여 사업 예산안은 4조 3,379억원 편성
- 자활사업의 내역사업인 자활장려금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 참여 시, 생계급여액에서 자활급여가 차감됨에 따른 근로 유인 감소 효과를 완화하고 탈수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일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자활장려금 예산안은 288억 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자활장려금 지급대상 및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대상 확대를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복수급 불가한 두 제도의 대상인원 중복 계상
 - 생계급여 사업의 근로소득공제 제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활장려금 제도와 취지 및 산출방식이 유사하여 중복수급이 제한된 제도임
 - 그러나 2020년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및 자활장려금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활근로 Gateway 및 자활근로 근로유지형 대상자를 자활장려금 및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지급 대상에 중복 편성하였음

1-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선정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 중위소득 합리적 결정 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 생계급여 사업은 생계유지능력이 없는 자 등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고, 의료급여경상보조 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생계급여 4조 3,379억원, 의료급여경상보조 7조 38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기준중위소득 산정 시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 정립 필요
 - '20년은 최근 3년간의 가계동향조사 중위소득 평균증가율(1.66%)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증가율(4.21%)의 중간값(2.94%) 적용하는 등 매년 다른 기준 적용
 - '15~'17년 기준중위소득은 전전년 실제 중위소득에 과거 3개년 실제 중위소득의 평균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 '18년 및 '19년은 각각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전년 대비 중위소득 증가율(1.16%) 및 중위소득 3년 평균증가율(2.09%) 각각 적용
 -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하여 2019년 기준 총 12개 부처 78개 복지사업의 결정 기준으로 활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9~18.

2

보육제도 개편 예산안 분석

2-1. 보육제도 개편 사항에 대한 체계적 홍보 필요

가. 현 황

- 영유아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9,200만원 증액된 3조 4,055억 7,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기본보육 및 연장보육 시간, 하원시간의 변화, 연장보육 서비스 신청절차 등 보육제도 개편 사항에 대해 홍보 및 사전안내를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

2-2. 연장보육반 전담교사 확보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 등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조교사, 대체교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912억 4,000만원 증액된 1조 3,780억 6,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시범사업('19.5~'20.2) 과정에서 연장보육 전담교사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보육교사 수급의 구체적 방안 마련 필요
 - '20년에는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위한 보조교사 추가 채용(1.2만명) 외에, 신축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채용, 대체교사 증원, 시간제보육교사 증가, 다함께 돌봄 관련 추가채용 등 보육교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력 확보 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9~26.

3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법령개정 전 예산 편성 및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 증가 문제

가. 현 황

-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 연금을 지급하여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조 6,813억원(14.6%) 증액된 13조 1,765억원
- 장애인연금 사업은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 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64억원(9.2%) 증액된 7,861억 8,100만원

나. 분석의견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및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인상하고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은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과 연계하여 심사 필요
- 기초연금 지급액 단계적 인상 등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 되므로, 국고보조율의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27~32.

4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은 건강보험 재정에 국고를 일부 지원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
 - 2020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전년대비 1조 1,105억 3,600만원 증액된 7조 826억 1,300만원,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경우 전년대비 209억 9,900만원 감액된 1조 8,800억 9,200만원 편성되어 총 지원금은 전년대비 1조 895억 증액된 8조 9,627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안 규모 산정 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편성기준 마련 필요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회계를 통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2016년 11.0%, 2017년 9.8% 등 지원율은 매년 10%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
 - 이는 201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예산 편성 시 조정계수를 통해 지원 규모를 감액(2018년 2조 2,739억원, 2019년 2조 1,325억원, 2020년 1조 8,801억원 등)조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방식은 지원 규모가 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건강보험 재정 예측가능성 저해 우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33~37.

5

국민연금 급여지급의 정확한 추계를 통한 적정 예산 편성

가. 현 황

-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조 9,841억원(17.3%) 증가한 27조 34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중기재정전망, 집행추이, 월평균급여액 증가율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편성 필요
 - 국민연금 급여지급 사업은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에 근거하여 예산 편성
 -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액을 중기재정전망 보다 과다 산정한 해(2014~2017년)와 중기재정전망 수준으로 산정한 해(2018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중기재정전망 보다 하향 전망한 2019년에도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국민연금 급여지급 계획]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중기재정전망 초과 계획액	4,829	206	8,793	9,202	0	△2,700	7,129
불용액	8,015	13,926	14,806	4,158	4,252	2,000	-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국민연금 급여지급 예산안은 중기재정전망 보다 2.9% 증가한 규모(+7,129억원)로 계획
 - － 구체적으로 노령연금 평균급여액(428,029원)에 대해서만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414,693원) 보다 3.2% 높은 수준으로 계획
 - －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정부안 보다 감액(2017년 4,046억원, 2019년 2,700억원)
- 국민연금 급여지급은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고용 분야의 예산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급여지급액 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소관)」, pp.38~41.

【개별 사업 분석】

1

청년저축계좌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과 중복가입 배제 및 청년희망키움통장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은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위해 희망키움통장 I · II와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90억 100만원(37.1%) 증액된 1,070억 9,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청년저축계좌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과 중복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
 -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에 대해 자치단체(서울, 전남 등)에서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을 실시 중이므로, 자치단체 자산형성 사업과 청년저축계좌 간 지원내용, 지원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중복가입 방지 등 집행관리 필요
-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집행을 제고를 위해 가입대상 및 지원액을 확대하였으므로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42~46.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개편에 따른 철저한 계획수립 필요

가. 현황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6개 노인돌봄사업을 통합 제공하여, 혼자서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269억 9,500만원(51.7%) 증액된 3,727억 9,700만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에서 공급자 지원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사업이 개편되므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사업수행 방식 변경, 사업대상자 확대 및 제공인력 자격 요건 완화(요양보호사→생활관리사) 등의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철저한 준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47~52.

3

시범사업인 사회서비스원의 운영방식 등 적정성 검토 필요

가. 현황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어린이집 등 국공립 사회복지시설과 재가센터 등을 운영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0억 8,500만원(102.0%) 증액된 120억 5,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추가재정소요에 대한 부담주체 및 부담비율 명확화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보완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
- 정부는 동 사업의 목적을 고려하여 공공성 확보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등 현재 시범사업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법적 근거 마련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53~58.

4

다함께 돌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한 사업 추진 필요 등

가. 현 황

- 6~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 긴급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지원 등 지역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발굴·제공하여 지역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32억 1,000만원(218.2%)이 증가한 338억 4,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자치단체 수요가 예산안 편성 개소수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으므로, 편성 개소수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필요
- 동 사업의 목표는 적절한 마을돌봄을 제공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용인원이 개소당 17명으로 계획(50명) 대비 저조하므로 이용활성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59~63.

5

아동보호전담요원 신설 등 아동보호 체계 체계적 개편 필요

가. 현 황

-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대상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의 내역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6억 8,500만원 감액(12.8%)된 589억 9,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중 일부를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전환함에 따른 아동통합사례관리의 축소 문제 검토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관련 사전 준비 필요
 - 취약계층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축소(1,040명→925명, △115명)로 인한 사업축소 우려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281명(신규채용 166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전환 115명)에 대해 배치계획 및 사전교육 등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64~69.

6

노인일자리 사업 신중년일자리와 중복 문제 개선 필요 등

가. 현 황

-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1.7만개 증가(2→3.7만개) 등 노인 일자리 13만개('19 본예산 61만개→ '20년 예산안 74만개) 증가 편성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63억원 증액된 1조 1,990억 6,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참여대상을 65세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60세로 확대함에 따라, 고용노동부 신중년(50~60대) 경력형 일자리 사업과 대상인원 및 사업 내용이 중복되므로 인원 및 사업성격 조정 필요
 - 노인일자리 및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은퇴세대 또는 노년층의 경력 및 자격증 등을 활용하여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연령 및 사업성격이 유사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70~76.

7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포괄보조금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시설·병원이 아닌 재가·지역사회를 기반으로 복지(돌봄), 보건의료, 주거지원 등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합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82억 2,200만원(86.2%) 증액된 177억 6,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각 지자체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예산의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고, 노인 유형 통합돌봄 지역의 경우 요양병원 장기입원자의 퇴원 지원 노력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77~81.

8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수급률 제고 노력 필요

가. 현 황

- 미세먼지 마스크 구매 여력이 낮은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9년 추경예산에 신규로 반영된 사업임
 -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380억 6,600만원(196.5%) 증액된 574억 4,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미세먼지 마스크 수급률을 100%로 편성하였으므로 수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다른 유사 복지사업의 신청률 등 고려 필요
 - '16년 추경사업으로 편성·집행된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의 경우 수급률이 저조하여 예산 실행률이 60.5%로 나타났으므로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82~84.

9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대상자 확대에 따른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 주간활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은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높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5억 6,900만원 증액된 712억 8,7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주간활동서비스, 방과후활동서비스 사업대상자 현재 2,500명, 4,000명에서 2020년에 4,000명, 7,000명으로 확대되므로, 철저한 사업 수행을 통해 예산이 연내 집행가능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
- 주간활동서비스 수급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실제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상당 수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방안 모색 필요
 - 2019년 9월 기준으로 대상자로 선정된 2,342명 중 537명(23%)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85~89.

10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황

- 저소득장애인이 신규 등록하거나 재판정을 받을 경우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정도심사제도 운영의 내역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4억 5,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저소득장애인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사업의 최근 실적행률이 40~60%수준으로 저조하므로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 동 사업의 실적행률은 2015년 53.9%, 2016년 41.9%, 2017년 41.9%로 저조하고, 진단서 발급비 및 검사비 지원 단가를 인상한 2018년의 실적행률도 42.4%로 저조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90~92.

11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R&D) 체계적 준비 필요

가. 현황

- 참여자의 유전체 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오·의료 정보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1:1:1 매칭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에 42억 6,700만원 신규 편성(3개 부처 총 150억원)
 - 총 10년간 사업 추진계획이지만 정부는 2020년 및 2021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시범사업 실시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

나. 분석의견

-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실시 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대규모 재정사업의 경우 사업 실시 전 사업시기, 규모, 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객관적·중립적 조사를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음을 고려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93~96.

12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 사업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신규간호사 임상능력 제고 및 현장 적응을 위한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억 3,400만원 증액된 101억 9,4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19년 집행이 저조하므로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 편성 필요
 - 2019년 9월 기준으로 실행행률은 15.5%로 나타났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국공립 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 중 33개소에서만 당초 채용 목표인 259명 중 161명을 채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97~100.

13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논의 추이를 고려한 예산안 심사 필요

가. 현 황

-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려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6억 5,500만원 증액된 9억 5,500만원 편성
- 보건복지부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설립계획 추진, 건축 설계 등을 거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예정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이 편성되어 있으나 동 법률이 아직 제정되기 전이므로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에 관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01~104.

14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

가. 현황

-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전공의 및 전문의에게 임상, 기초의과학 융합 교육을 통한 의사과학자로의 진출을 지원,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억 3,900만원 증액된 37억 1,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당초 목표인 융합형 교육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의 체계적 수행 필요
 - 내역사업인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동 사업을 통해 각 대학별 10명씩 총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개소 총 50명 선발 계획
 -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심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못하여 선발된 학생들은 임상, 기초과학 융합형 커리큘럼이 아닌 기존 개설되어있는 기초과학 수업을 수강하는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05~108.

1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적정수준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

가. 현황

-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재활·상담 등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 서비스를 기획하여 지역복지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39억 4,000만원 증액(13.6%)된 329억 2,500만원 편성
-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사회적임원자의 퇴원 및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임원자에 대해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을 추진 중임

나. 분석의견

- 2019년 사회적임원자 중 퇴원자에 대한 가사간병 방문지원 실적이 저조하므로, 원인을 분석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 및 집행을 제고 방안을 마련 필요
 - 2019년 사회적임원자에 대한 가사간병방문지원 사업은 9월말 기준 누적 신청 인원 95명(5.4%), 10월 4일 기준 110명(6.3%)으로 계획(1,750명) 대비 저조하게 나타났다, '20년 사회적임원자 1,750명에 대해 예산 편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09~111.

16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감안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억 9,600만원 감액된 399억 2,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지속가능 여부를 검토해야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음기준 관련 현안 해결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 문화재 발굴조사, 추가부지 및 진입로 확보 문제 등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지연되었으며, 추가적으로 경부고속도로 확장에 따른 소음기준 관련 현안으로 사업에 차질 발생, 방음터널 등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12~115.

17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인력 확충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자살, 정신질환, 중독 예방, 재활서비스 제공 등 자살예방 대책마련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45억 3,500만원 증액된 974억 3,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신규 내역사업 등을 통해 인력확충을 계획하고 있으므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
 - 기존 내역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580명, 신규 내역사업 응급개입팀 운영 지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통해 204명, 20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16~118.

18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중증외상 전문치료체계 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인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를 수행하는 권역외상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0억 6,500만원 감액된 580억 8,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연례적 집행부진이 반복되지 않고 전담전문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
 - 최근 실집행률은 2016년 74.0%, 2017년 71.0%, 2018년 60.9%, 2019년 6월말 기준 28.1%로 저조하며, 2018년, 2019년 전담전문의 채용현황 고려하면 여전히 상당 부분이 불용될 가능성 존재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19~122.

19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사업 확대 개편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및 활동센서 설치,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4G 통신기술 기반 장비 10만대 신규 도입 예정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4억 8,000만원 증액된 164억 7,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신규 장비 도입 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정확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신규장비가 지연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
 - 신규장비 도입 및 실제 설치가 1월부터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12개월 운영비가 반영되어 있으며, 아직 신규장비 규격, 사업자 선정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23~125.

II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 사업 분석】

1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의 본사업 추진 이전 법안 심사 경과 고려 필요

가. 현 황

-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은 노인 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 영양관리 지원, 독거노인 등의 식생활안전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4,500만원 증액된 3억 7,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중인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의 2021년 본사업 추진 이전 관련 법안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심사 경과 고려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34~137.

2

신규 도입 예정인 방사능 검사장비의 지방청별 배치 계획 수립 완료 필요

가. 현 황

- 신규 내역사업인 방사능 검사장비 보강 등 검사체계 구축 사업은 자동시료 주입장치, 1차 분석장비 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자동시료 주입장치 5대, 방사능 분석장비 11대 신규 도입 예정
 - 2020년도 예산안은 41억 3,7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신규 도입 예정인 방사능 검사장비 11대의 각 지방청별 배치계획을 확정하여 방사능 안전관리 강화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38~141.

3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 차질 없는 수행 필요

가. 현황

- 혁신의료기기 등 지원 및 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2020년 신규 사업으로, 혁신 의료기기 개발 및 출현 등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 특성에 맞는 제도 기반 구축 등을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8억 1,7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관련 법령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될 예정으로, 동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필요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및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2020년 5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며, 동 사업을 통해 해당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들을 이행하고자 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42~145.

4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업체의 참여 활성화 필요

가. 현황

- 음식문화 및 위생개선 사업은 음식점 위생등급제 활성화 및 음식문화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의 내역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12억 8,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음식점 위생등급제 관련 컨설팅을 받았으나 위생등급제 신청을 하지 않는 업체들 다수 존재하므로 컨설팅 지원과 위생등급제 신청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
 - 2018년, 2019년(8월기준) 컨설팅 받은 업체는 1,656개소, 1,318개소이나 컨설팅 받은 업체 중 위생등급제 신청한 업체는 527개소(31.8%), 257개소(19.5%)로 나타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46~149.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I

환경부

【주요 현안 분석】

1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고려 필요 등

가. 현 황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은 수도물 공급 전 과정을 감시·예측할 수 있는 스마트 물관리시스템 및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3,810억 9,2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편성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예산의 원활한 집행을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 사업대상 선정 시 사업 추진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및 구체적인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고려 필요
-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관련 기본계획의 조속한 마련을 위한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입찰공고부터 심사와 계약 체결 및 용역과제 완료 지연 시,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공사 착공 등 추후 계획된 사업 추진에 제약 발생
 - 기본계획이 조속히 수립될 수 있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2~18.

2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2-1.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전기자동차·수소연료전지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은 전기자동차 및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과 충전인프라 설치비용을 보조함으로써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축시키기 위한 사업
 -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6,330억원 대비 1,052억원(16.6%) 증액된 7,382억원 편성
 -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2,265억원 대비 1,230억원(54.3%) 증액된 3,495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이 연례적으로 지연되고 있으므로, 2020년 계획한 예산과 물량의 집행실적 제고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2-2. 친환경차 구매보조금 지원 관련 중·장기적 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친환경차량 보급에 투입된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은 1톤당 약 50억원이 투입되어 톤당 감축비용이 7,600만원과 1,500만원 수준인 노후경유차 및 건설장비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비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도출

나. 분석의견

-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투입되는 재정규모 대비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 관련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고, 보조금 외에 다양한 정책수단을 검토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9~31.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가. 현 황

-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은 방치·불법투기·재난 및 유해폐기물 등 국가적 차원에서 처리가 시급한 폐기물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국가 주도의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신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설치지역 후보지 실태조사 및 기초적인 기본구상 등을 위해 19억 8,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20년 예산을 통해 실태조사 및 기초적인 사업구상 마련을 통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사전절차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본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 고려 필요
 - 향후 법률안 심사과정 및 결과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준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32~35.

2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의 사전절차 수행을 비롯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가. 현 황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은 주요 상수원이나 수계 중 녹조 또는 맛·냄새 유발물질 등 복합적인 이상수질 발생 등으로 인해 고도정수가 필요한 기존 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광역정수장 대상 공사비 및 설계비를 국고 출자(30%)로 지원하는 예산 45억 1,7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설계 및 공사 추진 이전에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및 평가지침」에 규정된 수질조사와 대안검토, 모형실험 등 사전절차의 적절한 수행 필요
-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엄밀한 성과관리와 객관적인 성과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36~42.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

가. 현 황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이동오염원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저감장치 부착, LPG엔진개조,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의 엔진교체와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791억원(11.6%) 감액된 6,027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노후경유차, 건설기계 등 주요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및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물량의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
- 과도하게 많은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43~48.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환경정보장제도 운영 및 민간 재활용시장 활성화 전까지 태양광 폐모듈과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보관하는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114억 9,700만원(533.8%) 증액된 136억 5,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 추진절차와 절차별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4개 권역별 거점수거센터에 대한 장비구축비를 모두 편성하였으므로, 거점수거센터의 구축 및 운영가능성을 고려하여 장비구축 관련 예산의 적절한 반영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49~52.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의 확대된 물량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지하철 차량·역사·터널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지하철 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와 민간 도시철도운영기관에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319억 6,700만원(37.6%) 감소한 530억 4,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사업물량이 이월될 경우, 2020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므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 내역사업별 추진현황을 바탕으로 2019년 추경예산의 집행완료 시기를 추정할 경우, 일부 내역사업은 연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가능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53~57.

6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의 충분한 수요 확보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과거 지붕재로 집중 보급되었던 노후 석면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을 국고로 지원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7억 2,300만원(70.4%) 증액된 670억 8,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취약계층 지원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사업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충분한 수요 확보방안 강구 필요
 - 노후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주택 거주자는 대부분 자발적인 처리와 개량이 어려운 저소득·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으며, 지붕 개량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은 사업 신청에 소극적일 가능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58~62.

7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 주택소유자·거주자를 대상으로 노후화된 일반보일러를 질소산화물(NOx) 저감 효과가 우수한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150억원(41.7%) 증액된 510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2019년 추경예산에서 대폭 확대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자체 수요 확보 및 집행상황에 대한 확인·점검, 사업절차의 개선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 저소득층 대상 수요 확보 및 사업 신청을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마련 등 철저한 사업 준비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63~68.

8

소규모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 노후 방지사설 개선 및 신규 설치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방지사설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1,101억 6,500만원(100.3%) 증액된 2,200억원 편성
- 주기적인 집행점검을 통한 설치 소요기간 단축, 지자체와 방지사설 설치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방지사설 공급 가능물량 확보 등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
 - 2019년 추경예산을 통해 확대된 사업규모와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할 경우 이월 물량이 발생할 가능성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69~72.

9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 도시지역, 도로, 농경지, 축산지역 등 비점오염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천 수질개선과 생태적으로 건강한 물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73억 900만원(54.5%) 증액된 774억 2,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 과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 반영 필요
 - 설치계획 변경, 설치장소 변경,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실집행 실적이 2015년 60.1%, 2016년 67.5%, 2017년 61.1%, 2018년 63.2%로 연례적으로 부진한 상황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73~77.

10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등 공장밀집지역에서 화재·폭발 등으로 인한 유해화학물질 유출, 폐수배출업소의 폐수유출 등으로 사고유출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국고로 보조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00억 800만원(61.4%) 증액된 525억 7,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주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오염원 관리를 위해 추진되는 동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강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78~82.

1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 필요

가. 현 황

- 개발이 완료된 우수 환경기술의 사업화 및 상용화를 위한 컨설팅·사업화자금·투자유치 지원을 통해 환경산업을 육성하고, 환경현안인 미세먼지 저감과 자원순환·재활용분야의 혁신 기술·설비를 발굴하여 국내 산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용화·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172억원(153.2%) 증액된 284억 3,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미세먼지 저감 효과 제고 및 자원순환·재활용을 촉진시킬 수 있는 혁신 기술·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므로,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충분한 사업 수요 확보 필요
 - 사업 지원대상인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설치대상 사업장의 참여를 유도하는 등 보다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83~86.

12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의 면밀한 분석 필요

가. 현 황

- 물산업 기술개발(R&D)에서 사업화 및 해외진출까지 전 주기를 지원하는 물산업클러스터(2019년 6월 조성)의 정상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관리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8억 2,100만원(119.5%) 증액된 180억 4,0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시설임대료와 사용료, 각종 검사와 측정에 대한 분석수수료 등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을 통해 발생 가능한 수익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운영 수익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87~90.

1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집행실적
개선방안 강구 필요

가. 현 황

- 대기오염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대기환경 개선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오염측정망을 구축·운영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99억 3,100만원(△12.8%) 감액된 679억 1,1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각종 행정절차 지연 또는 설치지연 등으로 인해 측정망 구축 실적이 부진하므로, 사업대상 선정 등 사전준비와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집행실적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여부, 기존 사업의 집행실적, 이월액 발생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대상 선정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91~95.

II

고용노동부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가. 현 황

-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군특) 사업은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에 구직촉진수당 지급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임
 - 2020년도 예산안은 2,802억원(일반회계 2,771억원, 군특회계 31억원)임
- 동 사업은 I 유형에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50만원×6개월)과 취업지원 제공, II유형에 구직활동 참여비용 일부 지원을 통한 취업지원 제공 예정
 - 2020년 하반기 I 유형 요건심사형(10만명), 선발형(10만명), II유형 15만명 지원 계획
 - － I 유형 요건심사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저소득층 중 2년 이내 취업경험 요건 등을 만족하여야 하며, 선발형은 중위소득 50% 이하(청년층은 120% 이하)인 저소득층이나 2년 이내 취업경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함
 - 2020년 재정소요액은 5,218억원(35만명 지원)이며, 2021년부터는 1조원 이상 소요 예정('21년 50만명, '22년 60만명으로 단계적 확대 예정)

나. 분석의견

- 예산안 심사 시 법률 심사 추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구직촉진수당이 의무지출로 규정되므로 중장기적 재정지출 규모를 반영하여 검토할 필요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의무지급 근거 등을 마련할 계획으로, 법안 심사 추이 반영 필요
 - 향후 5년간 제도 도입에 따른 신규 재정소요는 4조 6,574억원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의무지출로 규정 시, 향후 재정지출 규모가 증가할 여지가 있음
 - － 2020년 예산안 기준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 구직촉진수당은 1,247억원으로 추정
 - 동 사업은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여, 재원 부담의 주체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으며 회계연도 내 외부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보험과는 차이가 있음

-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실제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재원 부담이 수혜자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취업 시일을 미루거나 취업 의향이 없음에도 지급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
 - 취업지원 서비스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당 지급이 실제 구직 촉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할 필요
- 기존 유사 사업 집행률 등을 고려했을 때, 하반기 내 목표인원(요건심사형 10만명, 선발형 10만명) 지원 위해 사업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의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2019년 9월 기준 인원 66.7%, 예산 28.5%를 집행하여 집행률이 높지 않음
 -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사업의 저소득층 참여자 중 30~50% 참여인원은 7만명 이하, 2년 이내 취업경험이 있는 구직자(요건심사형 대상자)는 2.5만명으로, 요건심사형 목표인원(10만명)보다 적음
- 예산 편성과 관련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재정투입의 효과 및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ISP 수립, 직제 개정 등이 완료되지 않아 예산안 규모 적정성을 검토하기 어려움
 - － 전산망 구축을 위한 예산 85억원이 편성되었음에도, ISP 수립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상당직 공무원 325명 증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직제 개정이 진행 중임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08~116.

2

구직급여 및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2-1. 구직급여 지출액 증가에 따른 실업급여 계정 재정수지 악화 관리 필요

가. 현 황

-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계정과 자영업자계정으로 분리되어 운용되며, 각 계정은 다시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분리하여 운용
-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의 수입은 10조 1,978억원, 지출은 11조 4,449억원으로, 전체 사업비 중 83.1%는 구직급여 사업(9조 5,158억원)임

나. 분석의견

- 고용보험료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의무지출 증가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지속적으로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 2020년 계획안 기준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0.3배로 법정 적립배율(1.5~2배)을 크게 하회하며, 1조 2,471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2018년 결산(2,750억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
 - 지출 규모의 증가율(전년 대비 22.5%)이 수입 규모의 증가율(전년 대비 14.1%)보다 큼
 - 수입은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율 인상(1.3%→1.6%)으로, 14.1% 증액 편성
 - 지출의 증가는 구직급여의 지출액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고용노동부는 ‘피보험자 증가율’(4.0%)을 고려하여 2020년 지급자 수 증가율을 산출하였으나, 지급자 수 증가율(11.4%)이 피보험자 증가율보다 높아 지출액이 더 크게 증가할 우려

2-2.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임금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수입은 3조 8,930억원이며, 지출은 4조 965억원으로, 2020년부터 일반회계 전입금(4,000억원)이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 이관 등 지출 구조조정 및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에도 불구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이 법정 적립배율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리 필요
 - 2020년 계획안 기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의 적립배율은 0.7배로 법정 적립배율(1~1.5배)보다 낮으며, 2,035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2018년 결산(5,374억원 적자) 대비 적자 폭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
 - 적자폭이 감소하게 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수입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일부 사업(2개, 2,582억원)을 이관하여 사업비가 감소함
 -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청년 취업 지원 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사업비 증가가 계속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지출 증가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17~125.

【개별 사업 분석】

1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 강화 필요

가. 현 황

-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사업은 참여자 특성 진단을 토대로 상담(1단계), 직업 능력증진(2단계), 취업알선(3단계)의 단계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청년, 중장년층(35~69세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함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60억 7,800만원이 감액된 2,446억 7,300만원
- 중장년층취업지원 사업은 고령자인재은행,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중장년층에 특화된 고용서비스 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50세 이상 고령자 및 40대 이상 재직자 및 퇴직(예정)자에게 취업서비스를 제공함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7억 2,900만원이 증액된 256억 4,000만원

나. 분석의견

- 중장년층의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인원이 감소하고 있으므로, 2020년 목표인원 달성을 위해 중장년층의 참여율을 제고할 필요
 - 2020년 중장년층 목표인원은 3만명으로, 전년 대비 25% 증가
 - 참여인원은 2016년 28,061명 이후 2018년 16,989명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9년도 7월 기준 참여인원이 9,529명에 그치는 등 참여인원 감소 추세 지속
- 중장년층 맞춤형 취업지원 등을 통해 중장년층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장년층의 취업률은 2016년 66.0%에서 2018년 57.2%까지 감소하였으며, 6개월 고용유지율도 61.0%에서 55.4%로 감소
 - 중장년층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취업률은 18.5%, 알선취업률은 2.3%로, 전체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률 38.9%, 알선취업률 23.3%보다 낮음
 - 목표인원 증가 외에 중장년층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26~129.

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도입 취지 고려한 사업 추진 필요

가. 현 황

-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은 신중년(50~60대)의 은퇴 후 사회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54억 6,600만원(98.4%)이 증액된 513억 4,200만원임
 - 2019년부터 내역사업으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신규 편성함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대상인 신중년(50~60대)은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대상시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도록 할 필요
 - 2020년에는 주 25시간 근무(전년 15시간) 기준 인원을 5,000명으로 확대(전년 2,500명)
 - 보건복지부 소관 노인일자리 사회서비스형과 지원 대상자 및 시설 등이 유사함
 -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 유사시설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60세 이상으로 확대
 - － 2019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참여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60세 이상이 44.8%임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30~133.

3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의 집행실적 개선방안 마련 및 적정 규모의 인원 편성 필요

가. 현 황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및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하는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급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99억 4,000만원(79.8%) 증액된 674억 4,400만원 편성
 - ①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의 수급요건을 미충족하는 자, ②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는 초단시간근로자, ③ 1인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비임금근로자 등에게 총 150만원(월 50만원×3개월분) 출산급여를 지급

나. 분석의견

- 출산급여 지원 신청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적정 규모의 인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
 - 2019년 8월말 기준 당초 목표 인원을 기준으로 3.1%(779명), 지원 예산을 기준으로 1.5%(5억 4,600만원)만이 지급되어 집행실적이 저조
 - 2020년 44,893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합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원 대상인원 또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34~138.

4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와 고용노동부의 사업간 조정 및 연계 필요

가. 현 황

- 일자리위원회운영 사업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56억 6,100만원임

나. 분석의견

- 일자리 정책의 심의·조정이라는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와 역할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연계 및 조정할 필요
 - 2020년도 예산안에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신설과 관련하여 인원 증원(1명), 온라인 플랫폼 구축 비용(102백만원), 모델개발 지원 정책연구비(563백만원) 등 편성
 - 일자리위원회는 “심의·조정” 기능을 고려할 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시 정책 조정 및 연계 등에 중점을 두어 정책연구 사업을 추진할 필요
 -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에 대하여 지역 일자리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동 사업과의 연계 등 진행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39~142.

5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의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은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실시하도록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08억원이 증액된 1,791억 200만원으로, 2020년도 부터 고용보험기금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 동 사업 내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 사업(663억 7,000만원)을 신설하였음
 - － 고용위기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고용위기가 우려되는 지자체를 선정 후 해당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컨설팅을 진행하여 지원할 계획
 - － 최대 5년간, 연간 30~200억원을 지원하며, 재정자립도에 따라 광역은 20~40%, 기초는 10~30%를 지방비로 부담

나. 분석의견

- 지원 대상 기준, 금액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조속히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체적인 지원대상·기준·내용 및 심사·평가기준 등 사업 모델 개발 연구는 현재 노동연구원에서 진행 중으로, 10월 중 완료될 예정
 - 지원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기준, 지원금액 배분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어려운 상황임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43~146.

6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내일배움카드 사업은 실업자·재직자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실업자·재직자로 이원화되어 있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예정
 - 내일배움카드(일반회계)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979억 400만원(전년 대비 10.1% 증가), 내일배움카드(고용보험기금)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7,808억원 1,600만원(전년 대비 3.2% 감소)
 - 기존에는 ‘실업자 내일배움카드’, ‘재직자내일배움카드’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통합 이후 유효기간 5년의 하나의 카드로 300~500만원의 훈련비를 지원

나. 분석의견

- 자부담 비율에 대한 정확한 산출 근거가 없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실제 훈련 수요 변동 여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
 - 자부담률 및 훈련장려금 기준을 개편할 예정이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음
 - － 자부담률은 현재 실업자는 평균 25%, 재직자는 0~20% 수준이나, 2020년부터는 기준을 통합하여 평균 30~40% 수준으로 조정
 - 자부담비율 및 훈련장려금 조정은 직업훈련 수요 변동을 가져올 수 있으며, 예산 편성 시 구체적인 훈련비 및 장려금 단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 전체 실업자 중 자부담을 부담하고 있는 훈련 인원은 2016년 46.0%에서 2018년 57.1%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부담률 상승 시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의 경우,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으로 참여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
 - 2019년부터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前 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사업)에서 고용보험 미가입 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사업을 신규로 실시
 - 2019년 8월 기준 집행액은 7,800만원으로 0.4%이며, 참여인원은 2,515명으로 당초 목표 대비 2.4%로, 2020년 목표인원 7,387명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47~153.

7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사업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가. 현 황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은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사업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 또는 정년 연장을 시행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295억 6,000만원으로 신규로 편성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이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에 대하여 ① 정년 이후 재고용 제도를 도입·시행하거나 ② 정년자체를 1년 이상 연장 또는 폐지하여 근로자의 고용을 1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2년간 지원

나. 분석의견

- 사업의 효과성 및 기존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지원을 확대할 필요
 - 재고용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사업장 중 대다수가 300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 정년제 도입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22.7%, 1,000인 이상 기업이 94.6%이며, 정년제 도입 사업장 중 재고용제도 운영률은 300인 미만 기업이 28.7%로 낮음
 - 2016년까지 운영하던 정년연장지원금,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의 경우, 300인 미만 기업만 지원
- 과거 유사 사업의 집행 실적 및 시행 초기임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
 - 재고용제도를 미운영하는 300인 미만 사업장(전체 사업장의 71%) 중 15%(전체 사업장의 10.7%) 도입을 목표로 9개월을 지원 개월수로 산출하여 예산 편성
 - 과거 유사 사업인 정년연장지원금은 1인당 평균 지원개월 수가 약 8개월, 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은 약 6.5개월로 실제 지원 기간이 짧게 나타남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54~157.

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개편에 따른 집행 관리 필요

가. 현 황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청년 추가 고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9,909억원으로 전년 대비 1,012억원(11.4%) 증액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이 일정 규모 적립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하여 약정 기간 종료 시 적립금액 및 이자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1조 2,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48억원(28.6%) 증가

나. 분석의견

- 동 사업들은 제도 개편 이후 대상 기업 또는 근로자의 요건이 강화되었으므로, 목표인원 확대에 따른 집행이 원활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가 이루어질 필요
 - 2019년 하반기 및 2020년 상반기부터 기준요건을 강화하거나 대상을 축소하여 ‘중소기업’ 및 ‘저임금 청년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2019년 하반기부터 ① 기업당 지원 한도를 축소(90명 → 30명)하였으며, ② 기업 규모별로 차등 지원(30~99인 미만 기업은 2번째 채용,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지원)하도록 개선함
 -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0년부터 3년형 폐지, 임금상한 기준 하향조정(월 500만원 → 350만원), 중견기업 매출액 규모 설정(매출액 3,000억원 미만) 등 제도 개편
 -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시 전년 대비 지원인원 목표를 유지 또는 확대 편성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을 편성하여 전년(11만명)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4만명을 편성하여 전년(10만명) 대비 확대
 - 제도 개편으로 인해 기준요건이 강화되거나 대상이 축소되었음을 고려할 때, 연내 목표인원 달성을 위해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차등지원으로 목표인원 달성을 위해 더 많은 기업의 신규 채용인원이 필요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상자 기준이 강화되었고 지원물량이 역대 최다이므로, 집행 관리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58~161.

9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의 면밀한 제도 설계 필요

가. 현 황

-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유연근무제 도입·확대, 노동시간 단축 시 간접노무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
 - 2020년도 계획안은 250억 5,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3억 8,300만원 증액
 - 주요 증액 사유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 사업(46억 3,600만원, 신규) 편성임

나. 분석의견

-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은 기업 간 형평성 문제 및 기존 지원 제도와의 연계 및 중복지원 제한 등을 고려하여 설계할 필요
 - 노동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하여 모범적으로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 500개소를 공모·선정하여 단축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1인당 20만원을 6개월간 지급
 -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만을 선정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
 - 근로시간 단축 도입을 위한 지원 사업(고용창출장려금 내 일자리 함께하기, 근로조건개선지원 내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사업,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의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연계를 활성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62~164.

10

수요 맞춤형 훈련 과정의 실제 수요를 반영한 과정 설계 필요

가. 현 황

- 사업주직업훈련지원금 사업과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사업 내의 신규 내역사업으로, 미래유망산업맞춤형 훈련 사업,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사업 편성
 - 미래유망산업맞춤형 훈련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438억 6,600만원이며, 산업계주도 청년맞춤형 훈련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은 128억 7,000만원임

나. 분석의견

- 신규 개설되는 ‘수요’ 맞춤형 훈련의 경우, 훈련 설계 시 실제 수요를 반영 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 훈련과의 차별성을 강화할 필요
 - 동 사업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산업계의 ‘수요’에 맞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사업
 - － 미래유망산업맞춤형 훈련은 ‘협약기업의 수요’에 맞춘 훈련과정을 설계하여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는 과정이며,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은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산업별 협의체에서 제시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
 - ‘기업의 참여 수요가 중요하므로, 훈련 과정 설계 시 실제 수요 반영하여 진행 필요
 - 기존 사업과의 차별화를 통해 기업 및 재직자·구직자의 참여를 유인할 필요
 - － 현장맞춤형 체계적 훈련, 일반훈련 내 고숙련·신기술 훈련,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 훈련에서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 또는 구직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음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65~168.

11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의 법률 개정 심사 추이 반영 필요

가. 현 황

- 임금채권보장기금은 채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지원, 채당금 조력지원, 체불 청산지원 사업주 용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금임
 - 2020년도 총지출은 5,005억 8,500만원으로, 주요 증액사업은 채당금 지급 사업(전년 대비 329억 2,100만원 증액)과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전년 대비 39억 9,900만원 증액)

나. 분석의견

- 채당금 지급 사업은 의무지출 사업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이를 고려 하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필요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① 채당금 지급상한액 인상(+37억 1,100만원), ② 소액채당금 지급절차 간소화(+138억 3,800만원), ③ 재직근로자 대상 채당금 제도 신규 도입(+79억 3,100만원)의 내용을 반영
 - 소액채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재직근로자 대상 채당금 신규 도입은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법률안 심사 시 논의사항을 예산안과 연계하여 심사 필요

- 체불청산지원 용자 사업 내 퇴직근로자 대상 생계비 용자 지급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개정 추이를 고려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필요
 -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사업주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생계비 용자(5,737백만원) 반영
 - 체불청산지원 용자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의 개정을 근거로 편성된 것으로, 해당 법률의 개정 심사 추이를 반영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69~173.

12

근로복지공단인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기금출연수요를 고려한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사업은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근로복지기금지원사업의 내역사업
 - 2020년도 계획안은 전년 대비 771.4% 증액된 142억 1,300만원으로 편성

나. 분석의견

- 공동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중소기업장의 평균 출연금과 출연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과도하게 추정된 계획안을 조정할 필요
 -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을 출연금의 50%, 3년간 2억원에서 출연금의 100%, 5년간 최대 20억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
 - 기존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액의 경우 과거 평균 지원액보다 2020년도 추가 지원액을 높게 편성하였는데, 사업주의 출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요 조사가 선행될 필요
 - 신규 공동근로복지기금 지원의 경우, 50개 이상 사업장 또는 1,500명 이상 수혜 근로자인 대형 기금 설립을 5개로 가정하였으나, 과거 집행실적(16~19 3년간 3개)를 고려하였을 때,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공동기금 출연 지원 30억원의 경우, 지자체의 출연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74~179.

III

기상청

【개별 사업 분석】

1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가. 현황

- 지상·고층기상관측장비의 첨단화와 장비교체 및 확충으로 관측공백을 최소화 하고, 황사, 적설, 안개, 농업 등 사회 각 분야의 기상정보 요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기상관측자료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2019년 추경예산 대비 36억 4,700만원(28.6%) 증액된 163억 9,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지역별 적설 현황 및 적설피해에 대한 취약성을 고려하여 적설계 설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모바일기상관측차량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상시·비상시 등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등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87~194.

2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가. 현황

- 집중호우와 폭설 등 위험기상에 대한 선행관측 및 사전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해양기상기지를 구축·운영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제2해양기상기지 구축 공사를 위하여 전년대비 11억 6,100만원(131.6%) 증액된 20억 4,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제2해양기상기지가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 시공업체 선정 등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95~197.

3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 기술 개발(R&D) 사업의 연구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R&D)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위험기상부터 전 지구적 이상 기상현상까지 동시에 예측할 수 있는 수치예측 분야의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기상재해 사전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통합형수치예보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기존 사업의 일몰에 따라 95억 2,5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조직특성상 사업단 참여인력의 채용·관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업단 구성, 인력채용절차 등의 조속한 진행 및 기존 사업단을 통해 양성된 전문인력 활용방안 모색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198~201.

4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 천리안위성 2A호의 정식 서비스가 본격 개시(19.7)됨에 따라 위성으로부터 산출되는 고속기상관측자료를 통한 위험기상 감시, 수치예보모델 활용도 향상, 기후환경 감시 및 위성자료 품질관리 등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42억 5,400만원 신규 편성

나. 분석의견

- 신규 편성된 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별 사업추진 방안을 검토하는 등 동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 등을 구체화시킬 필요
 - 2020~2024년까지 1단계 사업 추진 시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규모에 부합하도록 사업계획 내실화 및 향후 2단계 사업의 내용과 방향성 구체화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환경노동위원회 소관)」, pp.202~204.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공적임대주택사업 분석

1-1.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사업 구조 재설계 필요

가. 현 황

-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사업은 생애주기상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 등을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아파트를 매입하여 10년간 고정적인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신혼부부매입임대리츠 사업과 유사한 임대주택사업에 대한 수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동 사업 구조를 재설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는 주택 매입의 어려움, 동일 조건의 신혼부부가 입주하도록 설계된 ‘다가구매입임대주택’ 사업 대비 높은 임대보증금 부담 등으로 인해 집행부진

1-2. 민간임대리츠 출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민간임대리츠 출자 사업은 민간이 사업을 제안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출자 사업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을 통하여 출자를 받은 리츠 수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기금출자를 받은 리츠의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2019년 9월 말 기준 6개의 리츠 만이 출자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집행실적이

저조하므로, 계획안에 편성된 공급호수만큼 출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 철저 필요

1-3. 집주인 임대주택사업 이관 편성 필요

가. 현 황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은 소규모 주택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주거취약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도록 기존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저리의 기금융자로 대체해주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집주인 임대주택사업의 사업목적이 궁극적으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 사업을 현행 ‘분양주택 등지원’ 프로그램에서 ‘임대주택지원(융자)’ 프로그램으로 이관·편성하여 프로그램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4~27.

2

도시재생사업 분석

2-1. 도시재생뉴딜사업(출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도시재생뉴딜리츠 출자 사업은 도시재생 경제기반형 지역 등에서 발굴한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출자를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도시재생뉴딜리츠 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 사유를 분석하여 사업 계획을 보완하고,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2020년도 출자계획안에 포함된 사업은 각각 인천역 복합역사 개발사업과 대전역 복합구역 개발사업이나, 동 사업지는 사업성 부족 등으로 수차례 민간사업자 공모 유찰

2-2. 도시재생뉴딜사업(융자)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도시재생뉴딜지원(융자) 사업은 기설립된 도시재생리츠 등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도시재생뉴딜리츠 융자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계획대로 융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
 - 계획안에 반영된 사업내역 중 2019년도 신규리츠사업(1개소)과 2020년도 신규리츠 사업(2개소)의 경우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공정율 등을 고려할 때 융자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기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을 고려 필요

2-3.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경우 사업비 등을 융자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상 소요되는 기간 및 과거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기존 사업집행실적이 부진하다는 점, 주민합의체 구성 이후 융자수요가 발생하기 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사업지에 대한 융자승인액을 일시에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율에 따라 나누어 집행한다는 점에서 사업관리 철저 필요

2-4. 도시재생사업지원 사업 성과지표 개선 필요 등

가. 현 황

- 도시재생사업지원 사업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선정 및 관리,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역주민 등에 대한 도시재생교육, 도시재생 부동산 동향조사 등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

나. 분석의견

- 도시재생사업지원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성과지표를 추가하거나 개선할 필요
 - 현행 성과지표인 ‘역량강화 교육이수(건수)’로는 포괄적 성과 측정에 한계
- 도시재생사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중 비목편성이 잘못된 사업의 비목 변경 필요
 - 도시재생건축 인턴십 채용 사업: 자치단체보조(330-0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 민간경상보조(320-01)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5.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등

가. 현 황

-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은 도시재생 분야의 제도·이론·실무 등을 선도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학 도시재생 융·복합 석·박사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사업 공모 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사업대상 대학의 수요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대학 선정기준 등 관련 공모지침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업계획 조속히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 철저 필요
- 도시재생 인재양성 사업을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에 편성하여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28~46.

3

신공항 건설 사업 분석

3-1. 김해신공항 건설사업 갈등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영남지역의 증가하는 항공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6년까지 총사업비 5조 9,576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김해공항 서편에 활주로 3,200m, 국제선 터미널, 관제탑 및 접근교통망 등을 건설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김해신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향후 국무총리실 산하 검증위원회 구성·운영시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등 갈등관리 강화 필요

3-2.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흑산지역에 대한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관광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까지 총사업비 1,833억원을 투입하여 흑산면 예리 지역에 50인승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도록 1,200m급 활주로 및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부지에 대한 국립공원계획 변경이 지연(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중단 상태)되어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할 필요

3-3.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가. 현 황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전북권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새만금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산공항 서쪽 1.3km 지점에 2,500m급 활주로 및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으로 현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진행중이므로, 향후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그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47~60.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적정 세입원 발굴 등 개선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유치하여 지역발전 거점도시를 건설하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나. 분석의견

- 향후 정주여건 개선 등을 포함한 혁신도시 시·군2 사업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나 현재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적정 세입원을 발굴하는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61~65.

5

일반회계 세입예산 산정기준 개선 필요

가. 현 황

- 국토교통부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672억 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3억 100만원(2.6%) 증액편성

나. 분석의견

- 국토교통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편성된 20개의 세목 중 16개 세목의 예산 산정기준이 최근 실적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최근 수납액 등 실적치나 세목별 영향을 받는 지표를 활용하는 등 세입예산 산정기준 개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66~69.

6

내부거래 관련 비목 오류 정정 필요

가. 현 황

- 내부거래는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내부거래의 유형은 거래의 성격 및 거래의 대상에 따라 전출금, 예탁금, 상환지출 등 3가지로 구분

나. 분석의견

- 교통시설특별회계 및 주택도시기금 내부거래 관련 사업의 비목 편성에 오류가 있으므로, 내부거래의 성격이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를 정정할 필요
 -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공항)에서 교특회계(도로계정, 철도계정)으로의 전출금): 특별회계전출금(610-02) → 계정간전출금(610-04)
 -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전출(반환금)): 반환금및손실금(710-03) → 기금전출금(610-03)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70~72.

【개별 사업 분석】

1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사업계획 보완 필요 등

가. 현 황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대학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정부의 산학협력, 창업 및 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

나. 분석의견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를 갖추 수 있도록 관계부처 등과 협의 강화할 필요
- 동 사업의 규모와 사업효과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계획 보완 필요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인허가절차 등을 거쳐 추진 되는 만큼 설계비가 차년으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집행관리 철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73~77.

2

수소도시 지원 사업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가. 현 황

- 수소도시 지원 사업은 수소활용 선도지역 등을 수소 시범도시로 선정하여 통합운영 시스템, 수소추출기, 연료전지, 배관망 등 수소인프라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수소 시범도시 사업 관련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수소시범 도시 선정과 관련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
- 동 사업기간 종료 이후에도 수소도시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점검·보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78~83.

3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 사업계획 수립 철저 필요

가. 현 황

-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중 건축물 노후도, 지역 쇠퇴도, 시급성 등 인프라가 부족하고 개선이 시급한 취약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스마트 기술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고를 보조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이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을 지원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사업’이 수행되고 있으나 집행이 부진하다는 점을 고려, 신규 사업인 ‘스마트 도시재생 지원사업’ 추진 시 기존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한편, 사업의 집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 구체화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84~87.

4

주택성능보강 사업 집행가능성 제고 필요

가. 현 황

- 주택성능보강 사업은 화재 발생시 대형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주거시설(단독·공동주택)에 대하여 화재안전성 향상을 위해 성능보강에 필요한 용자를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2019년 9월 말 기준, 동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안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사업 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동 사업의 2020년도 계획안 산출내역에 반영된 사업의 수를 감안하여, 성과 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88~91.

5

이차보전 지원 예산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 이차보전 지원 사업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만큼 이차보전을 실시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이차보전 지원 사업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으므로 동 정책수단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이차보전사업 예산규모의 적정성 논의 필요
- 예산 편성 이후 2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되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계획안에 반영된 예산 규모의 적정성 논의 필요
-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운영규정 마련 등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92~95.

6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사업 수행방식 개선 필요 등

가. 현 황

- 버스운전인력양성지원 사업은 군·경 운전 우수인력을 대상으로 버스운전자격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운전자격 취득 및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 버스운전자격 취득률 등을 고려하여 ‘자격증 발급’에 소요되는 예산규모 조정 필요
- 버스운전자격 취득인력의 버스운수업체로의 취업연계를 위하여 적극적 관리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96~100.

7

ISP 수립 전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예산편성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스마트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실시간 주차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주차정보시스템 구축 ISP용역을 수행하고 기존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전국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신규 사업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주차장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는 점에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른 ‘정보화 사업’으로 편성할 필요
- 동 사업은 ISP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고도화 구축비용이 함께 편성되었으나, ISP결과에 따라 사업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에 대한 조정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01~104.

8

주차환경개선사업 실집행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주차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 및 주택가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 및 주차정보제공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규모가 전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액 편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집행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 신규로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절차를 고려하여, 1차년도에 편성된 예산액이 이월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05~107.

9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추진 지연

가. 현 황

-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차의 보급·확산을 기여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은 재원부담비율에 대한 이견으로 민간 SPC와의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협의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필요
- 향후 수소충전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소충전소에 대한 수요나 운영에 따른 손익 및 효과 등에 대하여 적절하게 평가 및 대책마련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08~112.

10

총액계상으로 편성된 도로유지보수 사업 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 도로유지보수 사업은 일반국도의 도로포장 보수, 낙석 산사태 정비 등을 통한 도로시설물의 기능 유지 및 도로이용자의 안전 및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연례적으로 당초 편성된 예산액의 상당 부분이 전용되거나 이월·불용되고 있으므로, 과거 집행실적 검토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고 대상이 명확한 위탁관리용역사업의 경우 총액계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3~116.

11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설계비 집행가능성 검토 필요

가. 현 황

-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사업은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 및 남해안을 연결하는 철도망을 신설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 및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결과 등을 감안하여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예산의 집행가능성을 검토할 필요
 -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기까지 통상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설계비 예산(150억원)의 집행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7~118.

12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 총액계상 방식 편성 부적정

가. 현 황

- 철도기본계획수립 사업은 국가의 효율적인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국가재정법」 상 명확한 근거 없이 총액계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적정하지 않으므로, 필요시 법적 근거를 갖추어 추진할 필요
- 동 사업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동 사업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 최근 3년간 동 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이 7.6~42.2%로 저조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19~121.

13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 계획 조정 필요 등

가. 현 황

-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 사업은 열차의 안전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통 후 30년이 경과되어 시설 노후화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서울교통공사 및 부산교통공사의 노후시설물 개량사업에 국비를 보조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최근 2년간 동 사업 집행실적과 도시철도의 공사가능시간대 등을 고려할 때 ‘서울특별시’에 대한 예산이 과다편성되어 있으므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규모를 조정할 필요
- 노후시설개량사업에 따른 도시철도 시설의 성능개선효과 등을 점검·평가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22~124.

14

철도핵심인력양성 사업 구조 변경 필요 등

14-1. 글로벌 연수과정 내역사업 분리 편성 검토 필요 등

가. 현 황

- 글로벌 연수과정 내역사업은 해외 철도 발주 가능성이 높은 국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최신 철도기술 등에 대한 연수과정을 운영하는 사업

나. 분석의견

- 글로벌 연수과정 사업은 철도인력양성사업에 편성된 철도장학금 내역사업과 유사성이나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므로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
- 글로벌 연수과정 사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외국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14-2. 철도장학금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가. 현 황

- ‘철도장학금’ 내역사업은 철도관련 석·박사학위 취득(예정)자의 해외 석·박사 과정 이수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사업

나. 분석의견

- 철도장학금 사업의 계획과 집행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 등을 보완할 필요
- 철도장학금 사업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 중 사업추진 일정을 고려하여 2학기 기준으로 편성된 예산(등록금, 생활비 등)을 1학기 소요분으로 조정할 필요
- 철도장학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부 선발기준 마련 및 사후관리방안 등을 면밀히 설계할 필요
- 철도장학금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설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25~133.

15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시범운행 지원 사업계획 미흡

가. 현 황

-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시범운행 지원 사업은 수요가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노선에 친환경 2층 전기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 구입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

나. 분석의견

- 광역버스 안전 및 서비스 개선 시범운행 지원 사업은 구체적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되었으므로, 동 사업에 대한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 2019년 9월 현재, 2층 전기버스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 광역급행버스(M버스) 운송업체 16개 중 현재 전기버스를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3개, 이 중 충전설비 보유업체는 2개소라는 점 고려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34~137.

16

노후기반시설관리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노후기반시설관리 사업은 도로, 철도, 지하시설물 등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총 조사를 통해 기반시설의 제원, 노후도, 점검·보수보강 이력 등을 조사하고,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신규 사업

나. 분석의견

- 인프라 총조사를 위한 실제 과업 수행기간을 고려할 때 동 사업에 편성된 인건비 예산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38~140.

II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개별 사업 분석】

1 해외대학설립 지원사업 추진 재검토 필요

가. 현 황

- 자족기능유치지원 사업은 도시 건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자족기능 유치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업·대학·공공기관 및 연구소 등 핵심자족시설 유치를 추진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억 300만원이 증액된 15억 3,8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해외대학 설립지원 사업 집행이 부진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등 타 기관의 해외대학 유치사업의 경우에도 예산지원 후 철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추진방향을 재검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51~156.

2

중앙행정기관 신청사 적기 준공을 위한 사업관리 필요 등

가. 현 황

-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청사 입주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청사를 건립하는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162억 7,500만원

나. 분석의견

- 동 사업은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총사업비 증가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건립 사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57~160.

3

조치원 우회도로 총사업비 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조치원 우회도로 사업은 천안, 경기 서남부 방면 접근교통량을 우회처리하고 국도 1호선의 교통혼잡을 방지하는 등 외곽순환도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2억 5,600만원

나. 분석의견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문화재 현상변경 대응업무 미흡으로 기존 설계노선이 불허결정됨에 따라 대체 노선에 따른 총사업비가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61~165.

4

평생교육원 사업의 기존 시설과 차별성 확보 등 필요

가. 현 황

- 평생교육원 건립 사업은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신규사업
 - 동 사업의 2020년도 예산안은 5,000만원

나. 분석의견

- 행복도시 평생교육원은 교육실, 실습실, 식당, 수영장, 체육관, 도서관, 강당 등을 갖추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행복청이 건설하고 있는 다른 유사 시설과의 기능중복 등이 우려되므로, 차별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66~169.

III

새만금개발청

【개별 사업 분석】

1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사업 체계적 추진 필요

가. 현 황

-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사업은 새만금의 역사, 문화 및 간척의 기술 등을 전시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 총사업비 340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5,441㎡ 규모로 건립하려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에 84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사업이 추진주체 변경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총사업비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향후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
- 새만금개발청은 2020년 예산안에 건설보상비를 편성하였어야 하나,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어 있으므로,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일부를 건설보상비로 조정하여 예산을 합리적으로 편성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76~179.

2

새만금투자유치 실적 제고를 위한 전략 강화 필요

가. 현 황

-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은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 주요 박람회 참가 및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새만금 지역에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고 고용창출을 목표로 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에 304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기존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 94곳 중 55곳이 협약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투자를 철회하거나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투자를 보류하고 있어 MOU 체결 이후 기업들의 실제 투자로 연결되는 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투자 유치 실적 제고를 위해 투자 협약 체결 이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80~184.

3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의 추진방향 구체화 필요

가. 현 황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2011년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2014년 변경)을 그 동안의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2020년 신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에 11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새만금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은 새만금공사 설립, 스마트수변도시추진 등 여건변화에 따라 추진하려는 것이나, 매립추진실적 및 투자유치실적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상황이고, 스마트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새만금공사에서 추진하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사업추진방향을 설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85~187.

4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사업 면밀한 검토 후 추진 필요

가. 현 황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센터 구축 시범사업은 새만금 내에 2.8GW급 태양광 발전 설비 구축 및 기업입주에 맞추어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전문인력 등을 양성하려는 것으로, 신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에 5억원이 편성

나. 분석의견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산업단지 내에 1,653m²(500평) 규모의 센터를 신축하고 교육장비 등을 구입하는 데에 4년간 총사업비 115억원을 투자(국비 65, 지방비 50)할 예정이나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산업 전문인력양성 사업은 태양광 사업의 진척상황과 교육수요량 등을 고려함과 아울러 센터신축 등의 사업추진 형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소관)」, pp.188~194.

제16장

여성가족위원회

【주요 현안 분석】

1

아이돌봄 서비스의 이용률 향상 노력 필요

1-1.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 향상 위한 사업관리 철저 필요

가. 현 황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영아종일제돌봄 사업은 만 2세(36개월)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시간제돌봄 사업은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2억 900만원 증액된 1,733억 4,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아이돌봄 서비스의 목표 대비 실이용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

1-2. 광역과 시·군·구 모니터링 인력 간 체계적인 역할분담 필요 등

가. 현 황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서비스제공기관 운영 사업은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 전담인력, 사례관리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와 행정경비를 지급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59억 5,500만원 증액된 187억 9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기존 광역거점기관의 모니터링 인력과 시·군·구의 신규 사례관리 전담인력 간 역할중복 소지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역할분담방안과 효과적인 모니터링 계획의 마련 필요

1-3. 아이돌봄 서비스의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가. 현 황

- 아이돌봄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아이돌보미 양성 및 관리 사업은 아이돌보미의 양성 및 교육, 4대보험료 지급 등을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91억 8,700만원이 증액된 517억 4,2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양적 증가 위주의 사업추진방식 대신 기존에 양성한 아이돌보미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아이돌보미 현장 모니터링 강화와 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기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62~171.

【개별 사업 분석】

1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관련 홍보사업 추진 철저 필요

가. 현 황

- 가족사업관리 및 연구 사업의 내역사업인 다양한 가족 인식확산 및 가족 서비스 정보제공 사업은 모든 형태의 가족을 포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 확산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신규로 26억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신규 내역사업으로 추진하는 동 사업의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콘텐츠 제작, 매체 송출 등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이와 병행하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72~175.

2

국제회의 개최사업 내 보조사업 추진 시 철저한 관리·감독 필요

가. 현 황

-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사업은 국내외 한인여성 간 활동분야별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와 교류를 통하여 상호 협력 기반 구축 및 여성 인적 자원을 발굴하는 사업
 - 여성가족부는 2020년도에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및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채택 2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며, 관련예산으로 5억 5,000만원 신규편성

나. 분석의견

- 기념사업 내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단년도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76~178.

3

가족센터 건립 사업의 실행행률 개선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가. 현 황

- 가족센터 건립 사업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알맞은 가족교육·상담·자녀돌봄 등의 가족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
 - 2020년 예산안은 전년대비 102억 9,500만원 증액된 352억 9,5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과거 가족센터 건립사업 추진 시 실행행률이 부진한 실적을 보여왔는바, 내년도 62개소 가족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실행행률 부진과 과도한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79~181.

4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확충 시 철저한 사업계획 마련 필요

가. 현 황

-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은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운영지원을 통해 가출(징후) 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48억 4,700만원 증액된 243억 9,6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지자체별 수요를 조사하여 사업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지역사회 인식개선 노력과 함께 지자체의 시설 확충 의지를 유도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82~184.

5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사업의 신청률 향상 노력 필요

가. 현 황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적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여성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
 - 2020년도 예산안은 전년대비 2억 6,100만원이 감액된 65억 300만원 편성

나. 분석의견

- 여성청소년 위생물품 지원에 대한 홍보강화와 적극적 안내 등을 통해 신청률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
 - 실제 신청률이 2018년에 69.9%, 바우처방식으로 바뀐 2019년에는 7월말 기준으로 68.6%에 머무르고 있음
- 동 사업의 2020년도 성과목표(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률)가 과소설정되어 있으므로 예산편성 기준과 2018년, 2019년 실제 신청률을 감안하여 성과목표를 상향조정할 필요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관)」, pp.185~187.

집 필

총괄 I 김 일 권 예산분석실장

심 의 I 서 세 욱 사업평가심의관
정 승 환 예산분석총괄과장
공 춘택 산업예산분석과장
이 동 훈 사회예산분석과장
이 종 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 용 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신 은 호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박 흥 업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I 윤 여 문 황 준 연 이 강 구 이 광 근
안 병 후 최 성 민 윤 성 식 김 은 영
정 순 철 하 정 희 이 미 선 남 희
김 려 진 김 성 은 권 순 진 어 예 원
이 영 주 최 경 덕 정 성 영 신 봉 진
황 수 환 정 주 완 민 성 철 박 은 형
오 덕 근 안 태 훈 변 재 연 이 병 철
손 동 희 최 준 호 장 호 진 최 정 열
김 태 은 김 우 림 김 선 영 이 상 홍
백 경 업

지 원 I 이 정 아 행정실무원

예산안분석시리즈 V

2020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발간일 2019년 10월

발행인 이종후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유월애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229-2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9

건전한 재정
희망찬 미래

